

Jeonbuk State Institute

정책연구

2025-27

전북자치도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Youth Growth Support Policies
in Jeonbuk

이주연 최지훈



설립목적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및 정책대안의 모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의 연구 용역 수탁
-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연구진 소개

이주연

전북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
부산대학교 노인생활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지훈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
전북연구원 연구원

Jeonbuk State Institute

정책연구

2025-27

전북자치도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Youth Growth Support Policies
in Jeonbuk

이주연 최지훈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 이주연 | 책임연구위원 | 연구총괄

공동연구 최지훈 | 연구원 | 제1장 3절 일부, 제3장 1절·2절

자문위원 김의숙 |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정건희 | 청소년자치연구소((사)들뜰청소년세상) 소장

홍문기 | 서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관리 코드 : 25JU21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목적 및 방법

■ 연구 배경 및 목적

- (배경) 청소년 인구(9~24세) 지속 감소로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1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 반면, 새로운 유형의 위기·취약·보호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역간 사회·경제·문화적 양극화 심화 및 청소년을 둘러싼 성장 환경의 급변화 및 다변화로 인해 청소년의 정책적 수요 또한 복합·다변적이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
- (목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과 정책 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특히, 지자체-교육(지원)청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통합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 전략과 실행 과제를 제안함

■ 연구 내용

- (1)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의 개념, 정책의 필요성, 성장지원 활성화의 구조적·기능적 요건들 등 청소년 성장지원 전반에 대한 이론적 개념 수립. (2) 중앙과 전북의 관련 정책 동향과 주요 현황을 분석하고 타 지자체의 성장지원 사례 분석. (3) 중앙과 전북의 청소년 인구 특성을 분석하고, 전북지역의 성장지원 정책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 (4) 도청(지자체)-교육(지원)청 간 연계·협력을 필수조건으로 한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 전략의 비전과 실천 과제를 제시함

■ 연구 범위와 방법

- (범위) 공간적으로는 14개 시군, 시간상으로는 '25년 3월부터 10월
- (방법) 문헌·행정자료 분석, 타 지자체의 성장지원 정책 사례분석(거버넌스 등), 통계청의 각종 통계자료 분석, 심층 면접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

2. 결론 및 정책 제언

■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적 함의

-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1) 법적·제도적 근거 기반(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례 제정/개정) 마련 필요. (2) 성장지원 정책 총괄·조정을 위한 전담 인력(코디) 배치와 장기적으로 사무국(팀 구성/중간 지원조직) 조성 필요. (3) 성장지원 정책의 예산·행정력 안정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은 필수 연계·협력 대상. (4) 광역(도) 단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으로 기초단위의 성장지원 정책 일관성·자원 효율적 배분·네트워크 안정화 및 실행력 확보 필요

■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비전, 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안)

-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학교 안팎을 잇고(연계), 지역을 키우며(정주), 청소년이 주도하는(참여)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생태계 조성”으로 비전 수립. 3대 정책방향을 토대로 총 17개의 세부 추진과제(안) 제시

비전	학교 안팎을 잇고(연계), 지역을 키우며(정주), 청소년이 주도하는(참여)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생태계 구축
정책 방향	세부 추진 과제
광역-기초 연계 청소년 성장지원 구축	▶ (단기) ‘전북형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 지역(시·군) 모집 공모 추진 ▶ (단기) 전북도 광역 단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 (단기)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컨설팅단 운영 ▶ (단기) 전북도 광역 단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포럼 ▶ (중기) 광역-기초 연계 청소년 성장지원 공동사업 운영 ▶ (중기) 전문성 기반 심리·정신건강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 (중기) 청소년 성장 발달 단계별 성장지원 연속 사업 추진
청소년 성장지원 생태 기반 구축	▶ (장기)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기반 조성 (조례 개정) ▶ (단기) 성장지원 네트워크(전담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연수 ▶ (중기) (가칭)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센터(사무국/중간 지원조직) 구축·운영 ▶ (단기)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과 교육(지원)청 추진사업(글로벌·RISE·교육별전문특구 등) 간 유기적 연계 사업 추진
청소년 체감형 및 지역 정착 성장 환경 조성	▶ (단기)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더-이음 바우처 지원 사업 ▶ (단기) 찾아가는 청소년 창·진로 메이커스페이스 ▶ (단기) 청소년 디지털·AI 리터러시 부트 캠프 : 미래 역량 UP!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거점공간 조성 사업 ▶ (중기) 지역 현안 해결 중심 청소년 마을 성장 프로젝트 정례화

차 례

CONTENTS

요약	i
----------	---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8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제한점	13

제2장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현황 및 사례분석

1. 청소년 성장지원의 이론적 이해	25
2. 중앙 및 전북의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현황	29
3. 타 지자체의 청소년 성장지원 사례분석	44
4. 요약 및 시사점	57

제3장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실태 및 정책 수요 분석

1. 전북 청소년 인구 현황 및 특성	65
2.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지역자원 현황 분석	76
3. 전북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실태 및 정책적 수요 분석	85
4. 요약 및 시사점	101

제4장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 전략

- 1.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적 함의 109
- 2.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비전, 정책 방향 및 세부 추진 과제 117

참고문헌 166

영문요약 (Summary) 168

표 차례

LIST OF TAB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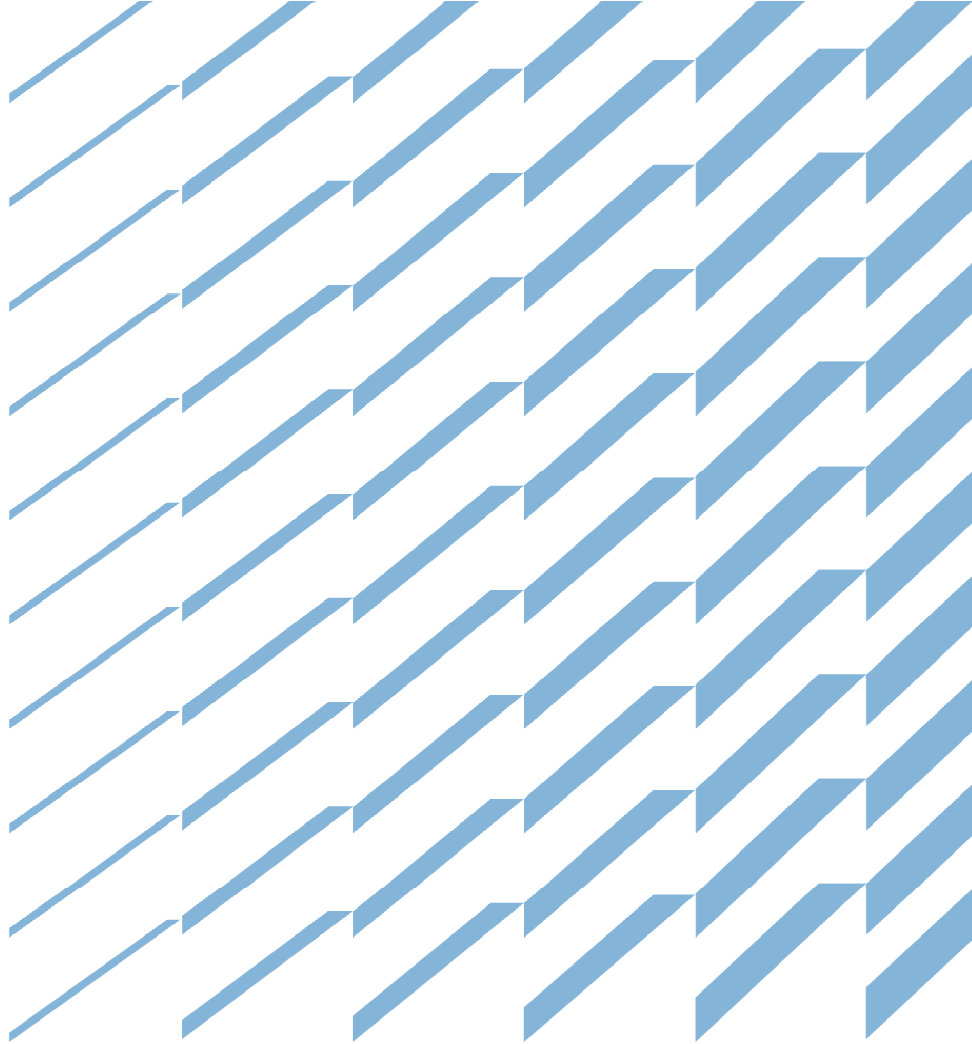
[표 1-1]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선행연구 검토	15
[표 1-2] 청소년 주제의 조례제정 관련 선행연구 검토	18
[표 2-1]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사업) 관련 법적 근거 검토	26
[표 2-2]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연차별 주요 사업 내용	30
[표 2-3] 전북도청과 도교육청의 청소년(학생) 지원 관련 조례 현황	39
[표 2-4] 전북도청 청소년 지원 조례의 교육청 간 연계·협력 관련 조항 내용 현황40	
[표 2-5]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관련 유형별 추진 현황 43	
[표 2-6]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연간 사업 운영 현황43	
[표 2-7] 자치단체장-교육감 간 연계·협력의 조례 현황	46
[표 2-8] 지자체 기존 청소년 조례 내 '성장' 혹은 '성장지원'을 명시한 사례 현황47	
[표 2-9]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타지역의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 주체, 중간지원조직, 참여 구조 및 한계점 비교 분석	54
[표 3-1] 전국 시도별 청소년 인구 현황	65
[표 3-2] 전국 17개 시도별 청소년(9~24세) 인구 추계	67
[표 3-3] 전국 17개 시도별 청소년(13~18세) 인구 추계	68
[표 3-4] 전북 시군별 청소년 인구 현황	69
[표 3-5] 전북 시군별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추이(2016~2025)	71
[표 3-6] 전북 시군별*학교급별 학생 현황	73
[표 3-7] 전국 및 전북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76
[표 3-8] 전북 시군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현황(2024)	77
[표 3-9] 전국 및 전북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시설 현황(2025)	78
[표 3-10]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25)	80

[표 3-11] 전국 정신건강증진기관시설 설치 현황(2025)	81
[표 3-12] 전국 Wee 관련 기관 설치 현황(2024)	82
[표 3-13]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관련 면접 내용	86
[표 3-14] 면접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87
[표 3-15] 심층면접조사의 주요 분석 결과	88
[표 4-1]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비전, 추진 전략 및 실천 과제(안)	118
[표 4-2]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	142

그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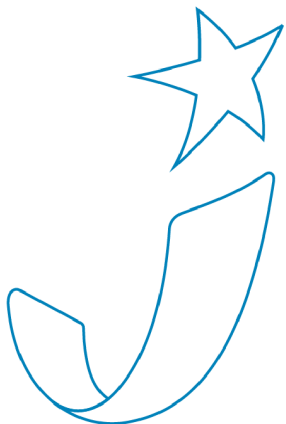
LIST OF FIGURES

[그림 1-1] 전국 청소년(9~24세) 인구 및 구성비 추이	3
[그림 1-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추진체계	5
[그림 1-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5
[그림 1-4] 연구 추진체계	12
 [그림 2-1]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부처별 협력 가능 사업	37
[그림 2-2]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운영 조직	43
 [그림 3-1] 전국 시도별 청소년 인구의 연령별 구성비	66
[그림 3-2] 전북 시군별 청소년 인구의 연령대별 구성비	70
[그림 3-3] 전북 시군별 청소년인구 구성비 추이	72
[그림 3-4] 전북 시군별*학교급별 학생수 구성비 현황	74
[그림 3-5] 전북 초·중·고 학교급별 학생수 추이	74
[그림 3-6] 전북 시군별 10년간('15vs'25) 학령기 인구감소 현황	75
[그림 3-7] 전북 권역별 학령기 인구 감소 추이(2020~2037)	75
[그림 3-8] 전국 및 전북 청소년수련시설 종류별 구성비	76
[그림 3-9] 전북 시군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현황(2024)	77
[그림 3-10] 전국 시도별 위클래스 구축률(2023)	83
[그림 3-11] 전국 시도별 전문상담교사 배치율(2024)	84



제 1 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제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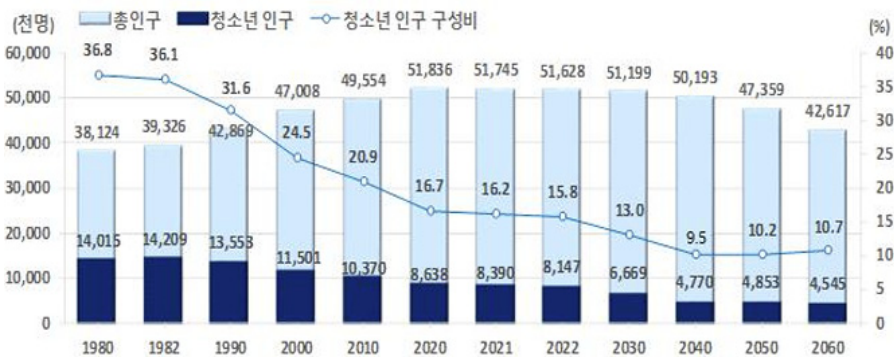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 청소년을 둘러싼 성장환경의 급변화 및 다변화

- (인구구조 변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구성비 증가 속도가 생산연령인구(15~64세) 구성비 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청소년 인구(9~24세) 비중은 더욱 급격히 감소하여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1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그림 1-1] 전국 청소년(9~24세) 인구 및 구성비 추이

- (위기 유형별 청소년 규모 증가세) 청소년 인구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위기 유형별 청소년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위기·취약·보호 청소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가정 밖 청소년(9~19세, 가출신고 기준) '18년 24,384명 → '21년 23,133명, → '22년 28,643명
 - 은둔형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청소년, 범죄노출 청소년, 우울·자살 등 심리·정서적 위기 청소년 증가세

- (수도권으로 청소년 인구 유출과 청소년 관련 인프라 붕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청소년 인구 이동과 각종 자원 유출 확대로 지역간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양극화 심화 현상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문화·환경·교육 생태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청소년 관련 시설과 자원의 붕괴로 전반적인 인프라가 부족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청소년 인구감소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할 중대한 책무로 부각되고 있음
- (디지털·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친화도 향상) 인공지능(AI),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메타버스 등 디지털·정보기술의 고도화는 첨단 테크놀로지 사회로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성장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청소년 특성상 큰 변화 가능성·짧은 변화주기 및 복합·다변적인 정책 수요 발생

- 청소년을 둘러싼 성장환경의 급변화 및 다변화로 인해 청소년의 정책적 수요 또한 복합·다변적이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들을 위한 일률적이고 표준화된 지원 정책보다는 각 개개인의 역량과 요구에 부합되는 맞춤형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리고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상황들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대응 또한 필요해졌음
- 즉,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맞춰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방식도 보다 전문화·세분화가 요구됨.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자원 간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협력 체계 구축으로 변화하는 청소년들의 다변화 요구에 부응해 나가야 함

■ 청소년정책·서비스의 부처별 분절적·파편적 및 유사·중복되어 실효성 저조

- 한편, 그동안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청소년기관·민간 단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교육·활동·복지·의료·자립 등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각기 개별적 단위 사업으로 추진 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서로 분절적·파편화되어 유사·중복으로 인한 예산과 인력 낭비가 발생하고, 동시에 서비스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추진

- 여성가족부는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3~’27)에 근거해 지역사회 단위의 청소년정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던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서비스 간 연계·협력과 통합(복합화)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은 지역 내 모든 청소년이 성장에 필요한 활동, 교육, 복지(상담), 의료, 자립 등의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구체적으로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 함께 추진되는 다부처 사업들을 연계·협력하여 청소년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특히, 이 사업은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여러 사업이 청소년에게 전달(지원)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 칸막이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상호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 추진체계라고 할 수 있음
- 지역사회 단위에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와 협력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그림 1-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추진체계



[그림 1-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 다부처의 지원 사업 연계·협력 역량 부족, 지원 시스템 및 법적·제도적 근거 기반 미흡

- 한편,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부처별 지원서비스를 연계·협력하고,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교육청, 청소년기관 등 각 수행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긴밀한 연계·협력이 필요함
- 그러나 연계·협력 역량 부족과 정책 지원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근거 기반 미흡으로 인해, 성장지원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와 지속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부재하며, 단지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만 일부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청소년 관련 기반 시설과 정책지원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부재한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

■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은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 시 핵심 영역의 두 주체

- 학교와 교육부, 교육(지원)청은 청소년의 주된 생활공간이자 성장의 핵심 기관으로, 모든 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임. 이에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연계·협력 추진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청소년정책 추진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또한, 여성가족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 지역 사례들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성장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관계 구축 여부에 따라 성장지원 사업의 성공과 실패로 구분되어 짐
 -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의 관계가 원활했던 곳은 학교와의 연계·협력 사업 및 정책에 대한 홍보 등 사업 수행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나, 그렇지 않았던 곳은 기존의 청소년정책 분야의 시설(단체) 간 연계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야 함. 궁극적으로 지자체장과 교육감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근거와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나.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과 정책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상호 연계하고, 특히 지자체-교육(지원)청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통합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 전략과 실행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광역 단위의 실효적인 정책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성장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즉, 전북의 청소년 인구 감소세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다변화라는 시대적 배경 및 다부처·다기관 사업의 연계·협력 역량 부족, 지원 시스템 및 법적·제도적 근거 기반 미흡이라는 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한 추진 전략 수립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첫째,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개념 및 구조화) 선행연구 및 현장 진단을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학술적·현장적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구조적 및 기능적 요건을 도출함. 둘째 (정책 현황 및 한계 진단) 기존의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정책 및 사례를 분석하고, 현장 전문가 및 관계자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역 단위의 성장지원 네트워크(거버넌스/협업체) 및 제도 운영 상 구조적 한계를 진단함. 셋째, (전북지역 특화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 전략 수립)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중심의 청소년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지역특화 추진 전략 방향과 실행 과제 제안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주요 연구 내용

1) 청소년 성장지원의 이론적 이해

-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의 필요성·개념
-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활성화의 구조적·기능적 요건

2)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현황 및 사례 분석

■ 중앙 및 전북의 관련 정책 동향 및 주요 현황

- 여성가족부·교육부의 변화된 정책 동향과 최근 현황, 관련 법·제도 현황
- 전북도의 관련 정책 동향과 최근 현황, 관련 법·제도 현황

■ 타 지자체의 관련 정책 현황 및 사례 분석

- 지역의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정책 현황과 관련 법·제도적 현황 분석
- 타 지자체의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우수사례 분석

3) 전북 청소년 인구 특성 분석 및 성장지원 정책 실태와 정책 수요 분석

■ 전북 청소년의 인구 현황·추이 및 특성 분석

- 전국 시도별 청소년 인구 현황·추이 및 특성 분석
- 전북도 및 14개 시군별 청소년 인구 현황·추이 및 특성 분석
- 전북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자원(인프라, 서비스 등) 현황 분석

■ 전북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실태 및 정책 수요 분석

-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대상 지역별 청소년 성장지원 환경진단 · 실태 파악 및 관련 정책적 수요 파악

3)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 전략

- 도청(지자체)-교육청(지원청) 간 연계·협력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 전략을 비전, 추진 전략, 실천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
- 또한 추진 전략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천 과제별 세부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나. 연구 방법

1) 정보조사 및 분석 방법

■ 문헌·행정자료 분석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행정자료, 정책연구보고서, 자료집(포럼 등) 검토
-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정책·사업 관련 자료 검토

■ 타 지자체의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현황 및 사례분석

- 타 지자체의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사업 현황, 조례 현황 관련 내용 검토
- 청소년 성장지원 사례들 중 활성화 및 지자체-교육청 간 공동추진 사례 수집 분석
 - 사례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중간지원조직 형태별, 운영 주체별 등 구분하여 추천받아 수집·분석
 - 특히,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협력 사례(세종시, 의정부시)와 청소년기관(시설) 중심의 사례(서울 동작구, 창원 진해), 지자체 중심의 사례(경기 고양시) 참고

■ 각종 통계자료 분석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서비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청소년 시설 현황 자료 등 활용 분석

2) 조사 계획

■ 심층면접조사

- (목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전문가) 대상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인식·필요성, 사업 운영 현황, 네트워크 및 중간지원조직 실태, 지역별 청소년 환경 여건 등을 진단하고,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함
- (면접 대상) 전북 도내 청소년기관 유형별 현장종사자(활동·상담/복지·보호 등),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중간지원조직(협의체) 운영(경험)자, 지자체 공무원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지역 청소년정책 연구자 등 청소년 성장지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약 20명 내외로 선정·섭외
- (조사 방법) 반구조화된 면접질문지는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면접조사는 개별 및 집단(2~3명)면접과 서면조사를 병행 진행함

3) 전문가 자문 및 담당부서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회의

- 청소년정책·교육행정의 학계·현장 전문가,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유관 기관 전문가, 국책 및 타 시도 연구기관의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주요 쟁점 사항, 연구결과 등에 대한 실효성, 타당성,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의견수렴

■ 도 담당 부서의 의견수렴

- 본 연구의 방향 설정과 주요 내용, 연구 결과, 도출된 추진 정책 방향별 세부 추진 과제(세부 사업)의 적절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

다. 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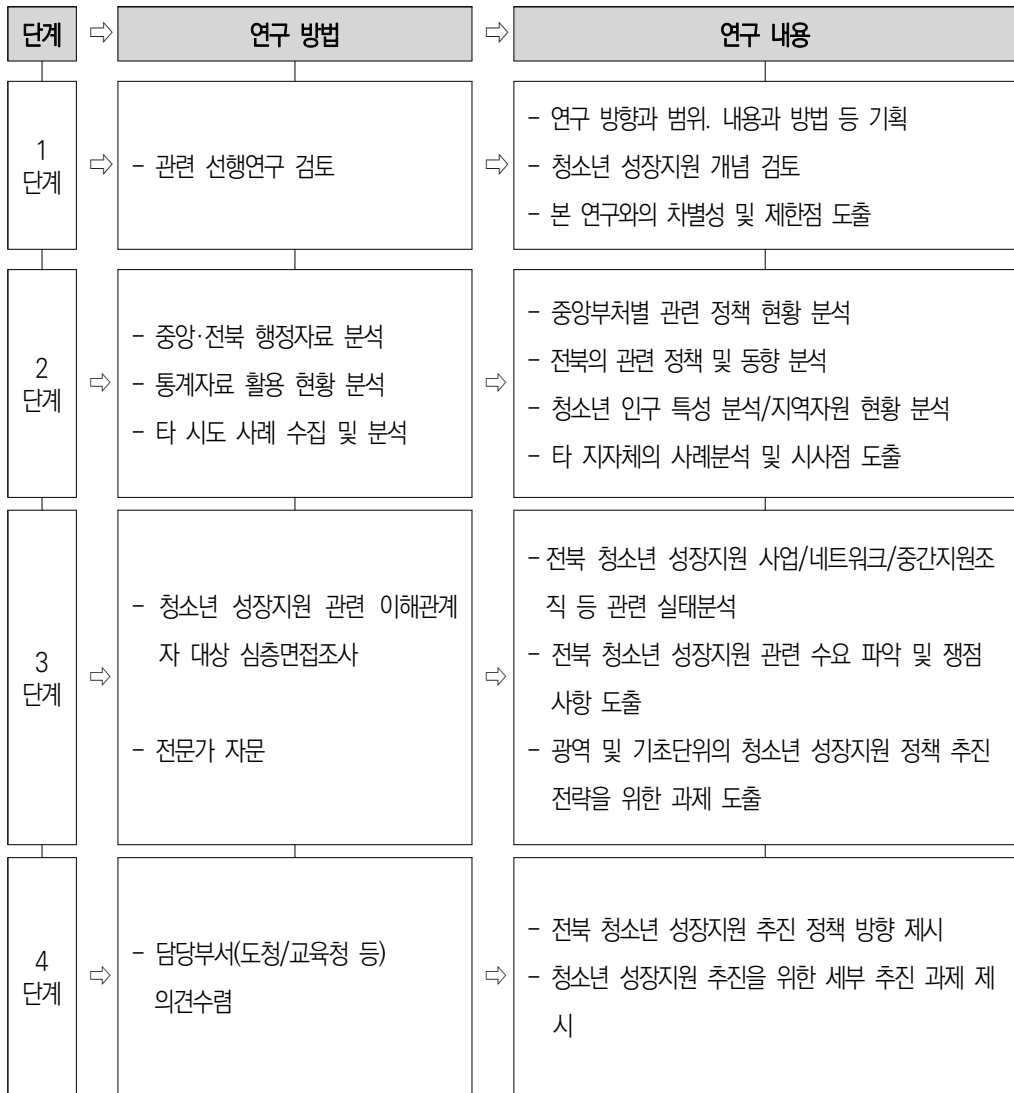
■ 연구 기대효과

- 도청 - 교육청 간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공동 추진체계 구축 및 재정적 기반 확보로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지속성 담보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청소년 지원에 대한 지역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실효성 있는 지역 맞춤형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도출

■ 연구 성과 활용계획

- 도청-교육청 연계·협력 추진할 수 있는 지역 단위별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추진 시 근거자료로 활용
-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구성 및 예산 확보 시 근거자료로 활용

라. 연구 추진체계



[그림 1-4] 연구 추진체계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제한점

가.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연구

■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최인재 외, 2023)

- 본 연구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청소년 관련 부처의 유사 사업에 관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됨
- 이를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협력적 거버넌스,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법·제도적 측면을 검토하였고, 현재 지역사회에서 시행 중인 유사 사업 분석을 실시함. 또한, 해당 지역 모니터링을 통해 나타난 한계점과 성공 요인 등을 함께 분석하였음
 - 모니터링 지역 선정: 경기도 부천시, 성남시, 전북 완주군, 전남 곡성군, 대구 수성구, 창원시 진해구 등 총 6개 지역 선정
- 연구 결과,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3개 정책과제와 이에 따른 9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음. 첫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 단위별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 개발 구축, 지역 특성을 반영한 네트워크 주관기관 선정, 협의체-지자체-교육청 간 연계 협력 강화를 제시함. 둘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플랫폼 분과 네트워크 방식의 협의체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의 자생력 제고가 필요함. 셋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생태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중간지원조직 신설을 통한 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제안하였음

■ 지역사회 협력망 운영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개발 연구(이윤주 외, 2018)

- 본 연구는 청소년 성장을 지원하는 각종 부처 사업 및 지자체 사업을 지자체 단위에서 상호 연계를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을 개발하고자 수행되었음
- 이를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분석하였고,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운영 모델을 개발함
- 연구 결과,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방식으로 청소년 관련 부처 간 현존하는 사업은 유지하되, 해당 부처 담당자 간 청소년정책 협의체를 구현함으로써 각 부처에서 시행 중인 청소년 정책에 대한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함
-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 성장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함. 센터는 청소년정책 및 서비스 정보를 연계 해주고, 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 이해당사자 간 연계망을 구축하는 역할이 수행해야 할 것임
- 지역 내 청소년사업 운영 기관 담당자-공무원-지역주민 등 청소년 관련 주체 간 소통 채널을 위해 청소년 성장지원센터 연계 협력망 구축이 필요함. 이 성장지원센터는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고, 지역주민과 청소년 간 파트너십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Ⅲ(황세영 외, 2021)

- 본 연구는 2019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는 연구의 마지막 단계 연구,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중심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음
 - 이를 위해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의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여성가족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의 확산·개편 전략을 제안함으로써 정책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수련관,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등을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3차년도)을 진행하였고, 시범사업의 종합성과분석을

위해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와 시범사업 운영기관, 네트워크 참여자, 지자체 및 교육청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 또한, 전문가 자문 및 콜로키움을 통해 정책방안을 도출하였음

- 이를 통해 1) 국가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비전 수립, 2) 청소년 시설과 기관의 전문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3)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지자체 책무 강화, 4) 지역 내 연계협력 촉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5)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 5개 영역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14개 세부과제와 정책추진로드맵을 제시하였음

[표1-1]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선행연구 검토

연구제목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최인재 외(2023)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청소년 관련 부처 유사 사업 분석을 통해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 문헌연구 • 전문가 자문 • 설문 및 면접조사 -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전문가 및 청소년 대상 • 현장사례조사 -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기관	• 행정단위별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 개발 및 추진체계 구축 필요 • 지역 기반 네트워크 주관기관 운영 필요 • 협업체-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체계 강화 필요 • 인관 협력적 거버넌스 네트워크 운영 원리 적용 필요 • 플랫폼분과 네트워크 방식의 협업체 운영체계 확립 필요 • 법령 및 자치법규 재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 • 청소년 관련 사업 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지원 생태계 구축 필요
지역사회 협력망 운영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개발 연구 이윤주 외(2018)	• 청소년 교육 보건 복지 등 청소년 성장을 지원하는 각종 부처 사업 및 지자체 사업을 지자체 단위에서 상호 연계를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연계 사업 특성 분석 •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시범지역 운영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방식 - 청소년 관련 부처 간 현존하는 사업을 유지하되 해당 부처 담당자 간 청소년 정책 행정 협의회를 구현함으로써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소개 및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 필요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센터 설치 필요 - 지역 내 청소년을 지원하는 허브역할 담당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센터 연계 협력망 구축 - 지역 내 청소년기관 담당자-공무원-지역주민 등 청소년 관련 주체 간 소통 채널 제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중심 청소년	• 문헌연구 - 정책 영역별로 지역사회 연계·협력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전제조건 -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개념과 지향 가치 도출 - 민관거버넌스의 실행(지원)기구로서 청소년 성장

연구제목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III) 황세영 외(2021)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양적연구 - 청소년 대상 시범사업 성과 분석 설문조사 • 질적연구 - 시범사업운영기관, 네트워크참여자, 지자체·교육지원청 담당자, 청소년 등 • 전문가 자문	지원협의체의 운영체계 마련 - 청소년 재단 및 시설(기관)의 지역 내 연계협력 기능 강화 • 지역 중심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 국가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비전 수립 - 청소년 시설의 전문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지자체 책무 강화 - 지역 내 연계 협력 촉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기반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2) 청소년 주제의 조례 제정 관련 연구

- 최근까지 청소년 성장지원 조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청소년 성장지원 등에 초점 둔 조례 연구는 아니지만, 청소년 주제의 조례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조례 현황과 제정의 방향에 관한 연구'(이준화, 2011)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에 관한 연구'(김광병, 2013)는 다소 오래된 연구(각각 2011년, 2013년)로, 현재의 조례 현황이나 청소년정책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음
- 또한, '청소년지원 관련 조례의 현황과 개선방안'(조성제, 김윤나, 2018)은 대구·경북 지역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전북도의 지역 특성을 완벽하게 반영하기에는 제한적임. 청소년 주제의 조례 관련 선행연구들은 조례제정의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라기 보다는 기존의 조례 현황과 조항 내용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이 중심이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조례현황과 제정의 방향에 관한 연구 -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이준화, 2011)

- 본 연구는 16개 광역시·도별(본청중심) 청소년 관련 조례제정 현황을 파악·분석하여 지역별 청소년 관련 조례제정의 활성화와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권한을 명확화로 청소년의 욕구 해소를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했음

- 광역자치단체별 조례제정률이 낮고, 법률 위임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청소년정책의 다양성과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단일 기능(예: 위원회 구성, 행사 지원)에 한정되어 있었음
- 조례제정 저해 요인으로 청소년정책에 대한 지자체 내부의 낮은 인식, 전담조직 및 인력의 부재, 청소년재정 확보 미흡 등이 지적됨
- 이에 조례제정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청소년정책 전담조직 신설, 전문 인력 배치, 청소년 관련 표준조례 마련 등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조례제정을 제안함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조례에 관한 연구(김광병, 2013)

- 본 연구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를 수집·유형별로 분석하고, 자치입법 수준을 진단하여, 조례제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 위임조례와 자주조례를 구분하고, 조례의 내용 범주를 세분화하여 법작·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 총 36개의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가 확인되었고 위임조례는 13개(36.1%), 자주조례는 23개(63.9%)로 자주조례가 많았음. 내용은 시설, 안전보호, 복지, 위원회, 기금, 예술문화, 인권 등 8개 분야 이상으로 구분됨
- 그러나 지자체 간 조례의 구성과 범위가 상이하고, 법령과 조례 간 일관성이 부족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도 다수 존재함
-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의 발전 및 실효성을 지니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명시된 위임조례를 확대 제정함으로써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의무조례 제정 추진, 욕구와 문제를 반영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자주조례 제정 확대, 선도적 자주조례 모델 발굴, 지역주민 참여 기반 조례제정 절차 마련 필요

■ 청소년지원 관련 조례의 현황과 개선방안 :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조성제, 김윤나, 2018)

- 본 연구는 청소년 관련 법률이 실제 지자체 조례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

고,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대구·경북 지역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 간 조례의 편차와 불균형을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함

- 광역지자체는 청소년 보호와 육성 중심의 조례를 운영 중이나, 기초단체는 청소년수련 시설 위주 지원조례가 대부분이고 기능적 편중이 심함
- 이에 광역-기초 간 청소년 지원 영역의 조례 균형 및 연계성 확보, 기본조례의 표준화, 지역 청소년의 권리와 수요를 반영한 조례 활성화, 지자체 실정을 고려한 다양한 조례제정을 위한 지자체 노력이 필요함

[표1-2] 청소년 주제의 조례제정 관련 선행연구 검토

연구제목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조례현황과 제정의 방향에 관한 연구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이준화(2011)	•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 조례 제정 현황 분석을 통한 지역입법의 실태 파악 및 제도적 개선 방향 제시	• 문헌조사(청소년 관련 사회환경의 변화, 청소년정책) • 광역시·도별 조례 비교분석 • 청소년 관련 법률 검토	• 청소년 관련 조례의 제정률이 낮고 다양성 부족 • 청소년정책 전담 조직 및 예산 부족이 입법 활성화 저해 • 법률상 위임사항 중심의 조례 제정이 미흡 • 조례제정 환경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재정 지원 강화가 요구됨 • 법률상 위임사항에 대한 표준조례 마련 필요 •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조례 제정 권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조례에 관한 연구 김광병 (2013)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아동 및 청소년 조례 실태파악 및 개선 방안 제시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 체계 모색	•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 분석(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된 내용 조사) • 조례 내용분석 및 분류, 위임 및 자주조례로 유형화 • 조사결과에 대한 함의 제시	• 전체 36개 조례 중 위임조례 13개(36.1%), 자주조례 23개(63.9%)가 제정됨 • 조례 내용은 시설(10개), 안전보호(9개), 복지(7개), 위원회(4개), 기금(2개), 문화예술(2개), 인권(1개), 기타(1개, 청소년 상 및 칭찬)으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함 • 아동보호조치, 불우청소년보호지원 등 위임조례 제정 확대 필요 • 선도적 자주조례 사례 발굴 및 공유, 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조례 제정 필요
청소년지원관련 조례의 현황과 개선방안: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대구·경북기초자치단체를	• 청소년 관련 법률이 지자체 조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하여 한계점(조례 간 편차 및 불균형) 및 개선안 제시	• 17개 광역자치단체 제정 조례와 청소년 관련 주요 법령 분석 • 광역 및 기초단체 조례 비교분석	• 광역지자체: 청소년활동, 청소년육성, 청소년보호 조례 다수 • 대구시 기초지자체: 청소년시설 조례가 가장 많고 청소년 활동 및 보호 관련 조례가 가장 적음 • 경북 기초지자체: 청소년시설 중심의 조례 집중, 청소년활동 관련 조례는 전무함 • 법령의 내용이 조례로 명시 및 구체성 부족,

연구제목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중심으로 조성제, 김윤나 (2018)			조례 내용이 불균형함 • 청소년 지원영역의 조례 균형화 및 기본조례의 표준화 필요 • 지자체 실정을 고려한 다양한 조례제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필요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현황 및 개선 연구 김태인, 권종욱, 박상문 (2021)	•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법률 및 정책, 타 지자체 조례분석을 통한 춘천시 조례에 시사점 및 개선안 제언	• 문헌연구(국내·외 법령 및 사례, 국내 조례, 정부정책 관련 선행연구 및 자료) • 춘천시 조례조항 분석	• 국내법률 및 중앙정부정책에 청소년과 고용주 모두 청소년 노동관련법의 세부내용을 명확히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 지자체 중 25%만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를 제정함 • 춘천시 조례는 타 지자체보다 체계는 우수하나 실행계획·실태조사·상담 및 구제체계 등이 명확하지 않음, 노동환경 실태점검 관련 조항 부재 • 조례 내 실행계획·실태조사·상담전용전화 및 구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조문을 별도로 규정 필요 • 노동환경 점검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정 통한 구체성 보완 제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및 법제화방안 연구 양계민 (2021)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 통계의 정확성 향상 및 법제화 방안 도출	• 문헌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의견조사 • 통계청·여가부와 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한 논의	• 부처 간 정의·조사 시점 불일치로 인한 통계 신뢰도 저하 • 현재 행정자료로 제3국 탈북청소년 규모,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규모파악에 한계가 있음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청 중심의 가족단위 통계 구축(이민자등록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자료를 가구단위 통계로 생산, 미등록 이주아동 위한 출생등록제 및 임시체류자격 도입 • 통계구축 법제화를 위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법' 제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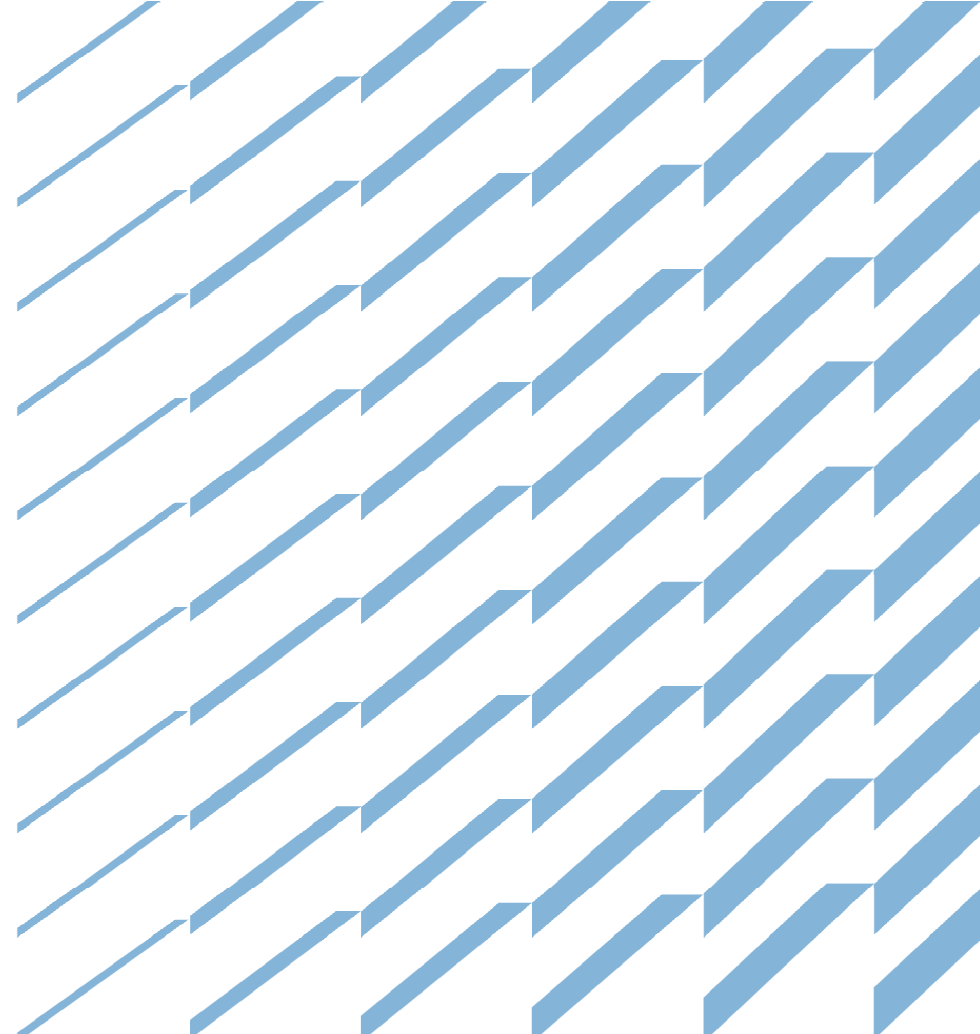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연구의 제한점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 먼저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에 대한 시범 운영 및 정책 추진체계 구축 등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차원을 넘어 청소년 성장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권리 보장과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지속성 담보하고 도청·교육청 간 연계·협력의 재정적·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다음으로 기존 선행연구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소년 조례 현황을 분석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과 조례 간의 일관성을 논하는 데 그쳤다면, 본 연구는 특히 전북 자치도와 전북도교육청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청소년 성장지원 조례' 제정 혹은 개정을 구체적 목표로 하고 있음. 이는 청소년정책의 분절성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명확한 시도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특히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이라는 특정 영역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을 법적·재정적·행정적 근거 마련과 기존 조례들이 단일기능(공동의장, 위원회 구성 등)에 한정되거나 법률 위임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함
- 기존 선행연구는 주로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의 일반적인 행정체계를 바탕으로 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제시하나 본 연구는 전북자치도라는 특정 지역만의 차별화된 정책 추진 전략을 수립한다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 청소년, 학부모, 관련 기관 종사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인터뷰, 간담회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수렴하려는 계획은 기존 문헌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추진 전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단순히 전략에 대한 비전과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실천 과제와 세부 사업들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는 본 연구가 정책 제안 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줌

■ 본 연구의 제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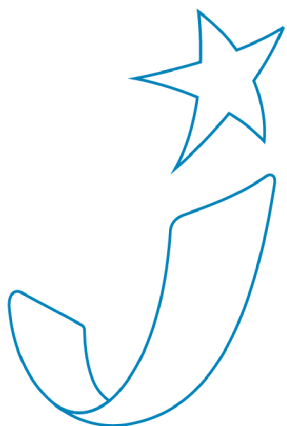
- 한편, 본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질 수 있음
- 전북자치도와 교육청이라는 두 개의 독립적인 행정 주체 간 연계·협력에 관한 내용은 각 기관의 권한, 예산 배분, 사업 우선순위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연구가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에 대한 이상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하더라도, 실제 법적/제도적 추진 동력이 지연되거나 변경된다면 전략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무엇보다 정책 추진 전략은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와 지원에 매우 민감하기에 연구 결과가 지속적인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단기적인 정책으로만 활용될 위험도 있음
- '전략'은 자원의 충분한 투입을 전제로 추진됨. 이에 지자체의 제한된 재정 상황 및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현 불가능한 전략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고, 실제 지역사회 내에서 기관 간의 기득권, 업무 중복, 소통 부재 등의 문제가 지속될 경우, 아무리 정교한 '추진 전략'이라도 현장에서의 실행을 보장하기 어려움
-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청소년, 학부모, 기관 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상충되는 요구가 나타날 수 있으며,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조례 제정(혹은 개정)은 재정적 근거 마련을 포함하지만, 실질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기관 간 예산 분담 비율 등은 조례제정(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임
-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의 특성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 후의 효과성 검증 및 평가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고, 이를 실행할 전담 전문인력 확보, 유관기관 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체계 구축 등이 현장에서 담보되지 못한다면 지역단위의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저해될 수 있음



제2장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현황 및 사례 분석

1. 청소년 성장지원의 이론적 이해
2. 중앙 및 전북의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현황
3. 타 지자체의 청소년 성장지원 사례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2장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현황 및 사례분석

1. 청소년 성장지원의 이론적 이해

1)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률적 근거

-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관련 국가적 차원의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는 현재 부재한 상황. 다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사업) 추진 근거는 일부 관련 법령에서 유사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음
- '청소년 성장지원'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활동을 정의하고 있음
-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기본법」이 가장 가까운 법률적·정책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청소년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기본이념과 제8조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근로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또한 제48조에 청소년활동과 학교 교육·평생 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본이념(제2조) :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를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8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제48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다음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는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기회와 지원 제공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청소년활동의 지원(제5조) :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

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함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에 대한 책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제시하고 있는 정도임
- 「청소년복지지원법」 건강한 성장지원(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함
-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표 2-1]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사업) 관련 법적 근거 검토

구 분	조항	세부 내용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를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함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함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청소년 성장지원의 개념

■ 학술 및 현장 관점의 청소년 성장지원 개념

- 학술 및 정책연구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성장지원' 개념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인적이고 조화로운 성장)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의 역량을 함양하며,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인 과정과 활동을 의미함. 이는 단순히 학업 성적 향상을 넘어 진로 탐색, 정서적 안정, 사회성 발달, 인성 함양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다양한 영역의 통합적 지원) 청소년 성장지원은 교육, 복지, 문화, 진로, 상담, 보호, 활동 등 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특정 문제해결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청소년 삶의 질 향상과 긍정적 발달을 추구함
- (지역사회 기반의 연계·협력 지원) 특히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맥락에서 '청소년 성장지원'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 기관(청소년시설, 복지관, 문화센터, 기업 등), 민간 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연대하고 협력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제공하는 것을 강조함. 이는 청소년이 속한 지역사회 환경 전체가 청소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조성하는 것을 포함함
- (청소년의 주체성 존중) 수동적인 보호나 지원을 넘어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결정하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율성과 주도성을 함양하도록 돕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

■ 청소년 성장지원의 개념

- 종합하면, '청소년 성장지원'은 만 9~24세 청소년이 신체·정서·사회성·학습·진로·시민성 등 역량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고 잠재력을 발휘하여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에 기반해 교육, 복지, 활동, 보호 등 다면

적인 영역에서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의미함. 최근에는 지역사회 기반의 연계·협력적 접근을 통해 청소년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

-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념을 포함한 청소년 성장지원’이란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요구와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목표를 공유하는 지역사회 자원 간에 이루어지는 협력체계(최인재 외, 2019 내용을 재구성)라 개념화할 수 있음

■ 청소년 성장지원의 구조적 및 기능적 요건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추진체계 구축과 활성화 및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기반을 이루는 구조적 요건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능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구조적 요건으로는 첫째,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둘째, 네트워크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간 예산 통합 조정 기능과 전담인력이 상주하는 전문조직(협의체) 등의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함. 셋째, 네트워크의 형식화 방지와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의 기획 및 실행 전문성을 존중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행정적 기반을 연계한 균형 잡힌 민(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시설 등) - 官(지자체, 교육(지원)청) 공동 주도 및 상호신뢰 기반의 협력체계 요건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다양한 공간과 청소년지도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 기능적 요건으로는 진로, 복지, 문화, 심리·정서 등 청소년의 복합적인 욕구와 청소년 생애주기(발달단계별) 전반에 걸친 연속적인 서비스를 단일 창구를 통해 연계된 맞춤형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다음으로 각종 공적서비스가 연계·협력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 간 및 정책 서비스의 효율적 상호 연계가 필요함. 셋째, 청소년을 단순 수혜자에서 벗어나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활동(지역리빙랩, 정책 제안 등) 정례화로 청소년의 주도적인 역할 정립과 더불어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최종적인 목표이자 성과 지표인 청소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함

2. 중앙 및 전북의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현황

1) 중앙의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현황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현황

-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2020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총괄·운영 기관으로 해당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됨
- 여성가족부는 지역단위에서의 청소년정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함. 즉,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의 확대·개편을 통해 지역사회 분야별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서비스 간 연계·복합화를 추진하고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 지역’ 시범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임
- 또한, 학교 안팎 청소년정책 연계를 위한 여성가족부 - 시·도교육청 간 중앙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정책 - 학교교육 간 연계·협력을 위한 교육청 조례제정을 권장하는 등 청소년정책 - 지자체 - 교육청 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자 노력 중임
- 더 나아가 지역 청소년정책 사업과 지역 내 기업체 또는 공공기관 사회공헌사업과 연계 가능한 청소년 정책사업의 발굴 및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공헌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시범사업 운영 기관의 공고를 통해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음
 - (2020년 시범운영 기관 선정) 경기도 구리시(구리시청소년재단), 성남시(성남시청소년재단), 전북 완주군(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창원시 진해구(진해청소년수련관)
 - (2021년 시범운영 기관 선정) 2차년도 선정지역 - 경기도 구리시(구리시청소년재단), 성남시(성남시청소년재단), 창원시진해구(진해청소년수련관), 신규 시범사업 선정 지역 - 대구광역시 수성구(수성구청소년수련관)

- (2022년 사업운영 기관 선정) 성남시(성남시청소년재단), 창원시 진해구(진해청소년수련관) 3차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수성구청소년수련관) 2차년도, 충청남도 논산시(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신규 시범사업 지역 선정

- 시범사업 운영 기관의 1차 년도 주요 내용은 ①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구조 마련(협의체, 실무협의체 등 민-관 연계협력 거버넌스 구축), ② 지역의 특성(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도농복합형) 및 사업주관기관 특성(청소년재단형, 청소년수련시설 중심형, 청소년상담복지센터중심형, 지자체 중심형 등)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거버넌스 구축, ③ 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의제 개발을 위한 청소년 자원맵 제작, 실태조사 등 실시
- 2차년도의 주요 사업 내용은 1차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① 협의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의제 개발 및 실행 방안 마련, ②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지자체, 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책무성 확보, ③ 분과 운영 등 네트워크 운영체계 구조화를 통해 실행력 확보, ④ 청소년 성장지원 의제 추진을 위한 연계협력 사업 실시, ⑤ 청소년 자원 추가 발굴, 자원맵의 지속적인 관리 방안 마련 등임
- 3차년도에는 ① 연계·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추진가능한 통합형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개발, ② 공동 협력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방안, ③ 시범사업 전·후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의 양적, 질적 변화 제시, ④ 협의체에서 제안된 청소년 성장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실행계획 제시, ⑤ 기초단위 거버넌스 구축에서 나아가 광역 단위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 구축 방향 및 타 지역 확산 방안 제시 등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안착과 확산임

[표 2-2]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연차별 주요 사업 내용

사업 내용	사업 단계		
	1차년도 사업	2차년도 사업	3차년도 사업
단계별 추진 사항	▫ 지자체 및 청소년 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운영 - 자치단체에서 지역자원과 연계가 필요한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협의체·실무협의체 운영 시스템 마련 - (실무)협의체 내 운영 방안 협의 및 운영시스템 구축 - 분과별 협의체 운영을 통한 효율적 실행구조 구축	▫ 지속적인 운영구조 마련 - 3차년도 사업 이후 협의체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지자체 지원방안 제시 - 장기 협력사업 계획 및 예산계획 제시 - 광역 단위 추진체계 구축 등 시범

사업 내용	사업 단계		
	1차년도 사업	2차년도 사업	3차년도 사업
	▣ 지역별 청소년 성장 지원 모델 개발 - 청소년 관련 인프라·서비스 공급 체계 간 협력망 구성 - 지역 청소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 모델 개발 ▣ 청소년 지원 인프라·서비스와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 파악 - 선정 지역 청소년 지원 시설, 기관 등 청소년 관련 인프라 및 각종 지원 서비스 전수조사를 통한 '청소년 지원 맵' 제작 - 지역별 특성에 따른 청소년 정책 수요 파악 및 분석	▣ 지역별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추진 체계 강화 -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등 행정기관 연계 강화 - 청소년 자원 추가 발굴 및 자원맵 지속적 관리방안 마련 ▣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 협력사업 실시 - 지역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청소년 서비스 개발 - 유관기관 간 자원연계를 통한 공동사업 실시	- 사업 확대방안 마련 ▣ 네트워크 활동 기반 강화 - 네트워크 확대·지속을 위한 참여기관 및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네트워크 양성 및 활동지원방안 제시 ▣ 청소년 성장지원 통합 서비스 개발 -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청소년 서비스 제공 - 협의체 운영을 통해 마련된 지역 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의제의 실행방안 제시 - 자체 성과목표 제시, 시범사업 전후 청소년 서비스의 양적, 질적 변화 제시
공통 추진 사항	▣ 지역별 청소년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연계협력·역량강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추진 ▣ 청소년 지원 인프라·서비스와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 파악을 통한 청소년 공간 재조정 ▣ 학교 안팎 연계 사업 진행 등 학교와의 연계·협력 강화 - (학교 안팎 연계) 학교와의 연계 활동을 통한 청소년 사업의 확대 및 성과 도출 - (기타) 대학 자원을 활용한 후기 청소년 지원, 초·중·고 학교와의 학교교육계획 공동 수립, 혁신교육지구 사업 연계, 도시재생 또는 마을사업, 기업의 CSR 연계, 기타 교육·복지·안전·환경 등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 * 특화사업은 반드시 협의체 기관이나 지역사회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야 함(PM 기관 단독 사업이나 기존의 사업 내용 추진은 해당하지 않음)		

- 최근 2025년에는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수요에 대응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2025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을 모집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의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려고 함
-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적 지원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지원을 위한 「청소년기본법」 개정, 그리고 지자체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지원을 위한 제도를 확보함

- (목적)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하여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인프라 설치,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주요 내용)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을 위한 자유공간 내 배움과 쉼이 있는 자기주도 프로그램 및 지역탐방 등 특화 사업 운영 ※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위해 리모델링 사업(지방소멸대응 기금 활용) 포함
- (사업기간과 예산) '25. 1월 ~ 12월 / 550백만원(국비)
- (사업추진방식)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 지자체(11개소) 선정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화사업 등을 개발·추진하고, 청소년의 지역생활권 내 이동권 보장을 지원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교육부의 청소년 성장지원과 유사한 정책¹⁾

- 먼저, 교육부의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기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전환되어 추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혁신교육지구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교육부가 새롭게 추진. 혁신교육지구보다 더 나은 미래형 교육 생태계 구축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교육(지원)청, 지자체, 학교, 지역사회 기관 등이 협력하여 학생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여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임. 지자체는 예산 및 행정지원, 공간제공, 지역인력 활용 등을 담당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함. 즉,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마을 전체를 배움터로 활용하고 학생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혁신교육지구는 2009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된 모델.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함. 혁신교육지구는 학교 교육력 강화와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교육의 변화

1) 교육부, 2023년 미래교육지구 33개 선정. 보도자료(2022. 12. 6) 참고 내용 작성

와 지역공동체의 재생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고, 지역의 민과 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일종의 교육 운동임

- 혁신교육지구 주요사업은 학교와 마을의 교육협력,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지역특색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과 후 활동 지원과 돌봄 확대,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지원 등임.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매칭 펀드 방식으로 분담
- 미래교육지구 주요사업은 학교-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인공지능, 코딩, 진로 교육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특색 반영한 교육모델 개발(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 교육 추진), 미래형 교육 공간조성(학교시설을 활용한 지역사회 교육 허브 구축, 온라인 학습 환경 지원), 취약 계층 학생 지원강화(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학습 격차 해소) 등이며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육청 및 지자체 예산 연계하여 추진
- 2020년 11개 지구로 시작한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지난 3년간 교육지원청-기초지자체의 공동 협력 센터 설립 등 기초단위 민관협력(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한편에서는 초·중학교 중심으로 교육지원이 이루어져 지구 내 고등학생을 위한 혜택은 다소 미흡했다는 의견도 있음
- (2020) 11개 지구 → (2021) 22개 지구 → (2022) 33개 지구
- 2023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교육부는 3년간 운영 결과와 새 정부 지방균형발전 국정 기조에 맞추어 2023년 미래교육협력지구를 새롭게 설계함. 2023년 중점과제로 일반고 역량 강화와 타부처 사업 연계를 제안하여, 미래교육협력지구가 지역의 교육력을 ‘고등학교’ 중심으로 숙의하고, 다른 부처의 각종 사업을 ‘지역교육’ 중심으로 재구조화 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미래교육협력지구를 지역 내 대학, 기업, 전문가 등 자원으로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교육구조를 기획함으로써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그동안 개별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지구 내 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경험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민자치 교육분과’(행안부), ‘사회적 농업’(농식품부) 등 주민수요에 기반한 타 부처 사업과 ‘교육’ 분야를 연계함으로써 학교, 교육지원청·기초지자체가 지역의 교육 의제를 함께 형성해 나갈 예정임

- 5개 관계 부처(교육부, 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업무 협약(2020.3.25.)에 근거

- 다음으로 교육부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학교와 마을, 교육청, 지방자치 단체 등이 연대·협력하여 청소년들을 함께 키우고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여 마을을 배움의 터로 만드는 사업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교육부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또한 교육(지원)청, 지자체(사회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등이 연계·협력하여 저소득층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 문화, 복지 등 통합 지원을 통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임. 특히, 교육(지원)청과 지자체는 학생 발굴과 지역 서비스를 연계·협력하여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학교 교육과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2)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부처별 협력 가능한 정책 현황

-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정책/사업/지원 서비스는 각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정책 간 연계 및 협력 강화가 필요함
- 각 부처별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정책 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에 근거 청소년의 활동, 복지, 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음.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의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청소년활동 및 역량 강화 분야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 운영을 통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e청소년, 청소년참여기구(특별회의, 참여위원회) 등 자기 주도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 분야로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학교밖청소년 지원,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보호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그 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1388전화 채팅,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및 원스톱 패키지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디지털 역량, 마음 건강, 기후환경 등 청소년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을 보장하고, 취약 계층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 및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 건강 및 심리정서 분야로는 심리지원 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정신건강 조기 중재센터와 전담팀을 구성하여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 중재, 위기대응에 필요한 전문적인 정신보건 서비스를 교육부와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로는 학대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양육 시설 및 자립 지원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빈곤 청소년 가정 등 취약 계층을 위한 기본 생활권 보장과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사업, 다함께돌봄, 청소년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 지원,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저소득층 청소년 급식 지원 등이 있음

■ 교육부

- 교육부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과정, 돌봄, 진로, 심리·정서 및 복지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주요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 지원 등으로 Wee프로젝트(wee클래스/센터/스쿨, 병원형/가정형 포함), 늘봄 학교/방과후학교, 자유학년(기)제, 진로체험(꿈길)·진로체험기관 운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을 통한 심리·정서적 치료 및 보호 지원이 가능함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문화 활동 및 체험, 예술, 여가, 체육 활동 등을 지원하고 취약 계층의 향유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문화예술 패스,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아동·청소년 꿈의 예술단 지원 사업,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사업(청소년 인문프로그램),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예술누림),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청소년을 위한 예술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공공지역 스포츠 클럽, 장관배 대회 등이 있음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노동 시장에 진입하고 직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 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과 연계될 수 있음
-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직업 훈련 프로그램, 청소년 취업 지원 및 상담, 근로 청소년 보호 및 노동 인권 교육, 청년내일채움 공제 등 청년 고용 촉진 정책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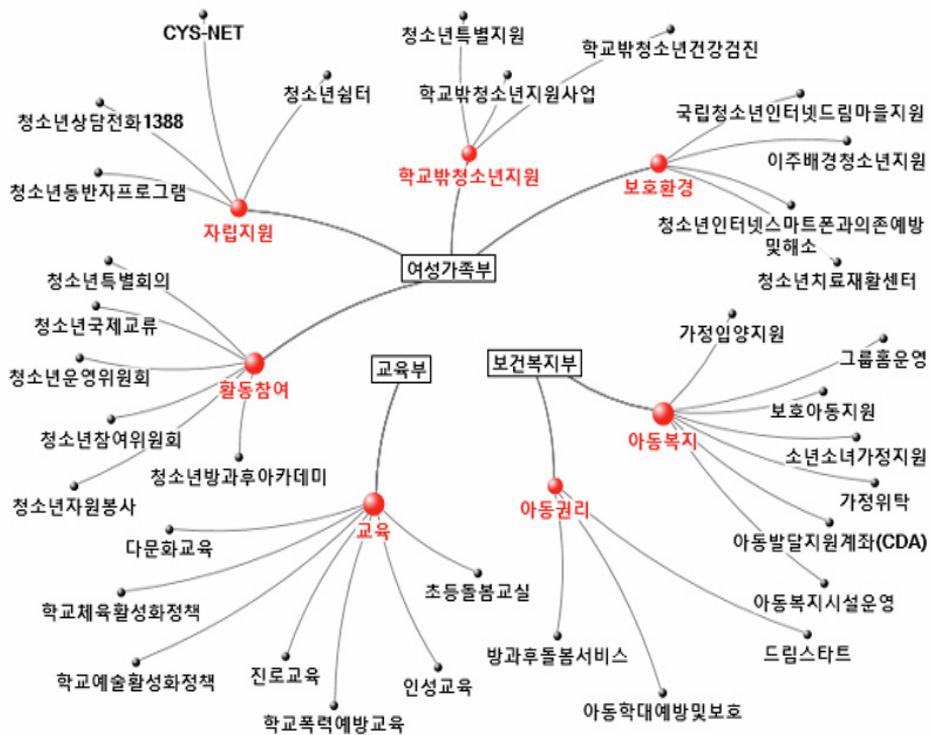
■ 법무부

- 법무부는 범죄 피해 청소년 보호와 비행 청소년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며, 청소년 범죄 예방 및 보호 정책도 담당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음
-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 및 상담, 보호관찰 연계, 소년원 운영 및 보호, 법률 구조 및 피해 청소년 지원 사업 등이 있음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행정력과 예산을 바탕으로 지역교육 및 복지 거버넌스를 지원하고, 청소년의 안전 환경을 조성하도록 도울 수 있음

-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의 문화, 교육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자체 사업에 재정 지원과 정책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 청소년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시설 안전 점검, 학교와 지역사회 대상의 재난 안전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자료: 지역사회 협력망 운영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개발 연구. 이윤주 외(2018)

[그림 2-1]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부처별 협력 가능 사업

3) 전북의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현황

■ 전복도와 도 교육청의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조례 현황

- 전복도청의 청소년 지원 관련 조례는 크게 청소년 육성, 활동, 시설, 보호(학교 밖 청소년, 위기청소년 등)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강과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아우르고 있음
- 다양한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을 통해 민관협력을 강조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집중되어 있음. 또한, 많은 조례들이 최근 개정(2023년, 2024년 등)되어 최신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엿보임
 -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기존 조례 명칭 변경과 재정비가 이루어짐. 이는 새로운 자치시대에 발맞춰 청소년정책의 법적 기반 강화 노력이 엿보임
- 전복도교육청의 청소년(학생) 지원 관련 조례는 전복도청의 조례에 비해 양적으로 그 수가 적고, 내용도 포괄적인 협력 및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전복도교육청의 조례는 직접적인 학생 지원보다는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음. 특히,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명시하여 교육청의 역할이 다른 행정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음
- 한편, 두 기관(도청-교육청) 간의 조례에서 '청소년'과 '학생'이라는 용어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임. 그리고 실제 청소년(학생)들은 학교와 지역사회라는 두 환경에서 생활하므로, 양 기관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이나, 현 조례만으로는 두 기관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청소년(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두 기관 간의 역할 분담 및 연계성은 부족해 보임. 즉, 청소년(학생) 지원정책에 있어 행정 주체 간 명확한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조례들은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등의 청소년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책무와 필요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한 근거로는 부족한 상황임
- 조례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만, 실제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그러나 조례 내용만으로는 각 지원 사업의 규모나 예산 확보 방안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조례가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실질적인 사업 집행과 예산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해 보임

[표 2-3] 전북도청과 도교육청의 청소년(학생) 지원 관련 조례 현황

	조례명	제·개정일	내용
전북도	▣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	2005-12-30 2024-05-31	청소년 육성 기본성격조례
	▣ 청소년 활동 진흥 조례 - 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 청소년거리 조성, 협력체계 구축	2023-05-08 2024-01-18	청소년 활동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운영 원칙, 사업내용	2024-09-27	청소년 시설
	▣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수련시설협의회 설치, 사업, 지도·감독	2016-05-09 2023-12-08	청소년 시설
	▣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임기	2021-10-01 2024-01-18	청소년 활동
	▣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도지사와 사용자의 책무, 근로청소년의 권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인식 및 실태조사, 상담 및 구제지원, 교육 및 안내, 민관협약체 구성·운영, 센터 설치 등	2023 -06-16 2024-05-31	청소년 보호
	▣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 지원계획,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성, 쉼터 설치·운영	2022-01-01 2024-01-18	청소년 보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종합지원계획 수립, 학교밖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대안교육기관 지원, 지역 사회 협력체계 구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2015-02-06 2014-01-18	학교 밖 청소년 보호
	▣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 지원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위원회, 지원사업	2025-05-23	위기청소년 보호
	▣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 가족계획 수립·시행, 위원회 설치·기능,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관리	2017-05-19 2014-12-27	청소년 보호
	▣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청소년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 필요사항, 각종 유해환경 보호사항 등	2008-08-08 2024-01-18	청소년 보호
전북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	2023-11-01 2025-03-07	청소년 보호
	▣ 교육행정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2007-12-31	

	조례명	제·개정일	내용
교육청	- 기능, 구성, 공동의장의 직무, 실무협의회	2024-03-29	
	▫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예산확보 - 관계기관과의 협조(도지사,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 요청)	2021-07-09 2024-01-18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검색 (2025. 6. 18. 기준)

[표 2-4] 전북도청 청소년 지원 조례의 교육청 간 연계·협력 관련 조항 내용 현황

조례명	자치도-교육청 간 연계·협력 관련 조항별 내용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책 수립·실행을 위해 도내 청소년 활동시설 및 청소년 단체들과의 체계적인 협력체계 구축해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북자치도 교육청, 시·군, 각급 학교 및 법인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근로청소년권익보호 및 근로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13조(민관협의체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근로청소년 권익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자문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청소년 업무관련 부서, 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참여하는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음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청, 청소년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함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함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 노력해야 함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 교육청, 대학교, 병원 등 관련 기관 및 청소년·청년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하고, 필요할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음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검색 (2025. 6. 18.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도교육청 교육협력과)
제1조(목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과 도지사 간에 두는 '교육행정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교육장과 시장·군수 간에 둘 수 있는 지역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기능) 교육행정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 시 교육·학예 시설의 설치 등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교육 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우수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8.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감 및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국·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제4조(공동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교육청과 도 간 실무협의·의견조정 및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지역 교육행정협의회 구성) ① 교육장과 그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 간 제2조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 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정책 동향

- (2023. 04) 전북교육청과 전북도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교육감과 도지사를 공동 의장으로 하는 청소년지원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 전북교육청과 전북도 간 '교육행정협의회'는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
- (2023. 7. 14) 전북 도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출범
 -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아 청소년정책을 총괄하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중간지원조직) 등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추진

- (교육행정협의회)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양 기관이 청소년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함
- (주요 사업) 청소년박람회, 청소년 성장지원 인턴십(진로체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 성장 지원
- (2023. 12. 20) 전북 도지사-교육감은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 학생의회 등과 긴밀한 소통 및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함
-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공공 및 민간기관과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자 전북도의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JTV전주방송, 우진문화재단, 봉디이레농원 등과 함께 '2023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협약 내용) △ 각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청소년 자기 주도성 강화 사업, △ 청소년의 진로 탐색 및 체험 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 성공개최 노력 등을 담음

■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현황

-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4차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중기 발전계획(2024~2026) 수립 내용 중 4대의 추진 전략 중 마지막 추진 전략에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운영지원'이란 사업 꼭지로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을 유형별 추진 중에 있음
- 주요 사업을 보면 ① 전북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및 관계기관 회의, ②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요구 조사, ③ 청소년 성장지원 지역 특화사업 운영(청소년박람회, 진로지원사업 등), ④ 지역사회와 학교 안팎 연계 등이 있음
- 무엇보다 전북활동진흥센터는 지역별 학교와의 연계 강화와 청소년 유관기관 간 협력으로, 청소년 진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및 공동 운영 사업을 계획·수립·추진 중임. 특히, 2023년 전북자치도와 교육청간의 교육행정협의회 체계를 구축한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의 기반이 형성되어 보다 확대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자원봉사 소양교육 지원, 찾아가는 청소년 안전박람회, 유스소셜 에코बी 프로그램, 학교 연계 프로젝트, 체인지메이커 프로그램 등 운영
-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 학교 연계 주제 선택형 프로젝트,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자료 :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내부 자료

[그림 2-2]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운영 조직

[표 2-5]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관련 유형별 추진 현황

사업형식	출범식 및 포럼	성장지원 자원 연계	성장지원 업무협약	청소년박람회 개최
성과	1회, 150명 이상	93개 기관	1회, 7개 기관	2회

자료 :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내부 자료

[표 2-6]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연간 사업 운영 현황

구분	네트워크 운영	요구조사	지역 특화 사업	학교 연계
1월				
2월				
3월	상반기 성장지원협의체 정기회의			- 안전박람회, - 체인지메이커, - 주제형 프로젝트, - 유스소셜에코브리 등 학교와의 연계 사업 운영
4월		청소년 성장지원 요구조사 운영		
5월			전북도-교육청 청소년박람회	
6월				
7월				
8월			성장지원 인턴십 사업	
9월				
10월				
11월	하반기 성장지원협의체 정기회의			
12월				

자료 :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내부 자료

3. 타 지자체의 청소년 성장지원 사례분석

1) 타 지자체의 관련 법률적·제도적 사례 분석

- 최근까지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거나 유사·동일 목적을 명시한 타 지자체의 조례는 부재함. 그러나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조례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정책)에 예산과 행정력 투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추진과 학교 안과 밖의 자원을 연계하는 네트워크(거버넌스)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제도 기반으로 필요한 상황임
- 한편, 지역 기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주요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는 지자체장과 교육감 간 연계·협력 추진 의지를 법적으로 담보하는 조례를 살펴본 결과, 많지는 않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육청과의 연계·협력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봄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연계·협력 조례 현황

- 지자체장과 교육감 간 연계·협력 추진 의지를 나타내는 조례는 드물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육청과의 연계·협력을 위해 노력한 사례가 있음
 - 일부 사례로 전북도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와 교육감의 책무를 별도로 설정하고, 먹거리위원회 구성 시 지자체와 교육청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함
 - 경기도의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분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시장, 군수 및 유관기관 등과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음
 - 충남도의 경우 청소년(학생)을 차별 없이 균등하게 권리 보장하는 등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교육감과 도지사의 책무를 별도 조항별로 구성하였고, 교육감과 도지사를 공동의장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음
- 지자체장과 교육감 간 연계·협력 추진의 의지를 보여주는 소수에 불과(시간을 두고 더 많은 조례들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한 조례 현황을 보면, 공동의 책무, 지자체장과 교육감 별도의 책무, 협의체 등의 공동의장 관련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 이는 포괄적인 연계·협력을 위한 기반만 다루고 있을 뿐 어느 특정 목표를 위한 자치

단체장과 교육감 간의 의무적이고 구체적인 연계·협력 메커니즘을 규정하는 조례는 아직(찾지 못해서) 부재함

- 이와 같은 관련 조항만으로는 행정적·제도적으로 도청과 교육청이 분리되어 있어 정책 추진 시 사각지대 발생이나 비효율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며, 자발적인 자치기구 마련이나 각 주체자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이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간 조례제정 과정 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 연계·협력의 조례제정을 위해서는 첫째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범위에 대한 합의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즉 자치단체와 교육청 담당자, 관련 전문가, 청소년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연계·협력 조례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협력 범위,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도출해야 함
- 둘째, 협력 대상을 구체화하여 명시해야 함. 즉 청소년 전체 또는 학교 안팎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특정 취약 계층(학교 밖 청소년,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에 중점을 둘 것인지 대상을 보다 명확히 설정해야 함
- 셋째, 협력 내용 또한 구체화하여 명시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학생) 관련 주요 정책 수립 시 도청과 교육청 양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통해 지원정책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고, 협의회의 기능에 청소년(학생) 지원 협력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정례적인 회의 개최 및 안전 상정 의무를 부여하여 실질적인 협력의 장으로 활용해야 함
- 넷째, 청소년(학생) 관련 통계, 실태조사 결과, 지원 대상 정보 등을 양 기관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다섯째, 학교폭력 예방, 위기청소년 상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진로 교육, 체험 활동 등 양 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공동의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공동 예산 확보 및 집행 방안을 명시해야 함
- 여섯째, 청소년수련시설, 상담센터, 학교시설 등 양 기관의 시설과 자원을 청소년(학생)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함

- 일곱째, 양 기관 간 연계·협력 과정에서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책임감을 높여야 하며, 조례에 명시된 협력 사항들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상시적인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함
- 마지막으로 공동의 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표 2-7] 자치단체장-교육감 간 연계·협력의 조례 현황

지역	조례명	조항 내용	담당부서
전북 도	먹거리 기본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위해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함 ② 도지사는 먹거리 정책 실행을 위해 정부, 시·군,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관련 시책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함 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에 따라 도교육청 소관 학교 급식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노력 해야함 제12조(먹거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 포함, 30명 이내로 구성 ②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 업무 관련 국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먹거리 업무 관련 국장	전북도청 농식품산 업과
경기 도	대안교육기 관 지원 조례	제10조(공동추진 등)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 추진	경기도청 청소년과
충남 도	교육복지 운영·지원 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청소년 및 학생 등 학습자가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등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제4조(책무)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해당 주체별로 노력해야 하는 책무는 다음 같음 1.(교육감) 필요한 정책의 수립·시행, 도 및 시·군, 도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이 운영하는 복지사업 및 활동과 연계·협력 촉진 2.(도지사) 제1호의 정책에 대하여 교육감과 협력, 그에 필요한 재정확보 및 지원, 민간의 자율적 교육복지협력 여건 조성 및 장려 제10조(협의회 구성) 협의회는 공동의장(교육감 및 도지사) 2명 포함 13명 이내로 구성	도교육청 유아교육 복지과

■ ‘성장’ 및 ‘성장지원’을 조례에 명시한 사례

-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직접적인 조례는 부재하지만, 기존 조례 내에 ‘성장’ 혹은 ‘성장지원’을 목적, 조항 등에 명시한 지자체의 조례들을 살펴보면, 먼저 익산시의 「청소년

년 균등한 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20.6.30, 제정)」이 있음. 조례명과 목적에 ‘균등한 성장’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사업비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익산시 청소년 균등한 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청소년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익산시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3조(청소년 복지향상 및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제4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 ②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 다음으로 경기도 시흥시의 「청소년 기본조례(‘25.6.5, 개정)」는 목적(1조)에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지원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장 총칙 다음으로 ‘제2장을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으로 규정함
- ‘제2장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은 시행계획수립(6조), 청소년시설 확보(7조), 청소년교류 활동 지원(8조),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9조),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10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11조), 교육 및 홍보(12조), 청소년 의견수렴(13조), 협력체계 구축 등(14조), 청소년 행사 등 개최(15조), 행정 및 예산지원(16조) 등의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고, 이외 청소년주간 행사(18조)에 성장지원 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청소년지도위원 구성 자격에 ‘청소년 성장지원 등에 관한 지식’을 명시(성장지원 관점의 정책자문 구조화)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조례(‘24.7.1 일부개정)」는 청소년시설 기능에 ‘민주시민 성장지원’, ‘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등을 명시하고 있고, 부산광역시의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2.7.6., 전부개정)」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청소년 성장에 필요한 종합 시책 수립·추진’을 명시하고 있음

[표 2-8] 지자체 기존 청소년 조례 내 ‘성장’ 혹은 ‘성장지원’을 명시한 사례 현황

지역	조례명	조항 내용	연도
시흥	청소년	제1장 총칙	‘25.6.5

시	기본조례	제1조(목적) 시흥시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장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제6조(시행계획 수립) 제7조(청소년시설의 확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 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 제8조(청소년 교류활동의 지원), 제9조(청소년 문화 활동의 지원) 제10조(청소년 동아리활동의 지원) 제11조(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3조(청소년 의견수렴)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5조(청소년행사 개최) 제16조(행정 및 예산지원) 제18조(청소년주간 행사)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성장 지원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제29조(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청소년 성장지원에 풍부한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35조(협의회 지원) 행정적 지원과 수당, 여비, 그밖에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일부개정
대전	청소년 기본조례	제16조(청소년시설) 3.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지원, 4.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25.10.2 일부개정
부산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시장의 책무) 청소년 성장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책의 수립·추진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22.7.6 전부개정

- 이상으로 ‘청소년 성장’이란 단어를 조례명에 직접적으로 명시한 사례는 현재까지 익산시가 대표적이고, 시흥시는 「청소년 기본조례」의 제2장을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으로 구성하여 시행계획 수립에서부터 협의회 및 관련 예산 등의 내용까지 명시하고 있음. 이외 대구·부산(광역시) 등은 목적·조항에 성장(지원) 문구를 명시해 유사한 취지를 구현하고 있음

■ ‘청소년 성장’ 혹은 ‘성장지원’ 관련 기본계획 등 종합계획 사례 현황

- 지자체 명칭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기본계획’ 혹은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기본계획’ 등을 정식으로 수립하고 고지하고 있는 지역 사례는 현재까지 부재함. 대신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정책 혹은 청소년육성 기본계획’ 안에 청소년 성장지원 과제를 일부분 포함하고 있음
- 또 다른 방식으로는 지자체마다의 연간 업무계획 및 사업계획에 청소년 성장지원이란 단위 사업 차원으로 사용(기본 계획수준의 종합·총괄 계획은 아님)하고 있음

- 부천시의 경우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나 기본계획은 부재함. 전북교육청의 경우에는 '청소년 성장지원 인턴십(진로체험)' 사업에서 성장지원 용어를 사용(교육청 연계사업)함. 이는 단지 교육청의 사업 공고일 뿐 지자체의 기본계획은 아님

2) 타 지자체의 성장지원 네트워크 및 중간지원조직 사례 분석

-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대상 타 지자체에서 활성화하고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및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사례를 추천받음
- 그 결과, 경기도 부천시·성남시, 경남 고성군, 충남 청양군, 전남 곡성군 등으로 나타남. 이에 관련 지역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와 중간지원조직(네트워크 주관 우영주체, 중간지원 조직)의 특성을 검토 및 비교분석하고 전북도에 적용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한편, 타 지자체의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경험이 있는 지역의 관련 행정자료가 많지 않고, 자료 구하기 어려워 기존의 선행연구보고서, 사례 및 워크숍 자료, 인터넷 기사자료 등을 토대로 내용을 구성함

■ 전남 곡성군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및 중간지원조직 현황

- 2019년 기준 곡성군은 청소년정책 담당부서가 미래혁신과였고, 곡성군(미래혁신과)는 곡성교육지원청과 곡성군미래협력교육센터('20년 12월 곡성군미래교육재단으로 확대 출범) 개소하여 군지역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을 투자함
 -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의 현 조직도('25년 9월 기준)는 행정운영, 평생교육, 창의교육 및 지역교육팀으로 구성하여 사업 추진
- 2019년 기준 곡성군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는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이뤄짐.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는 청소년기관 5개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곡성진로체험지원센터) 주도로 군청과 미래교육센터가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됨
- 무엇보다 곡성군미래교육센터는 곡성군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청소년기관에서 파견된 종사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어서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시 보다 긴밀

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지역의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공통 의제 발굴과 추진에 유리했음. 이외 사회복지기관, 마을공동체, 청소년참여기관 등이 협의체에 참여함

- 향후 2020년 협의체는 분과실무자 네트워크와 활동참여/진로직업/보호복지 네트워크 등으로 주제별 분과들로 구성되었고, 교육지원청의 Wee센터, 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도 협의체에 참여함. 곡성군은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협의체)의 중간지원조직은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담당(당시 청소년 성장지원팀, 25년 9월 기준 부재)하였음
- 2019년 기준 곡성군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는 총 27명으로 구성됨. 이중 군청 4명, 교육지원청 3명, 중·고등학교 교사 5명, 청소년활동·복지 기관 종사자 6명, 민간전문가 4명,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의회 의장단 등이 참여함
-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는 연에 약 8회 정도 추진되었고, 분과별 네트워크 회의 또한 최소 8회 이상 추진됨

■ 부천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유스거버넌스) 및 중간지원조직 현황

- 부천시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는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주도로 ‘유스거버넌스’ 이란 명칭으로 구축·운영. 청소년시설·기관 중심으로 지역의 청소년 자원과 네트워크 간 연계·협력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고 부천시청과 교육지원청도 협의체에 참여함
- 또한, 청소년참여기구를 연계하여 청소년 성장 목소리(수요)를 수렴함. 이후 기존 공공기관뿐 아니라 문화, 예술, 인권, 복지 등 다양한 민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하여 청소년 관련 이슈와 과제를 보다 폭넓게 파악하고 공통의 의제를 도출함
- 그리고 ‘청소년 성장지원 실무협의체’를 부천여성청소년재단과 청소년기관 등 기존 주체들로 구성하여 전체 네트워크 운영과 지원을 담당함
-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중간조직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협의체 운영과 실무 담당을 위해 계약직으로 전담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했고, 재단의 실장·차장·대리 등 정책기획실을 중심으로 핵심 인력도 참여함
- 또한, 3개의 청소년 기관 관장들이 협의체의 핵심 주도자이면서 총괄 코디네이터로 협

의체 구성 초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청소년 공통 의제 발굴과 지역자원 연계·협력 및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함

- 2021년 총괄 코디네이터 3명을 청소년시설장으로 지정하여 핵심사업의 추진체계를 강화함. 그리고 청소년이 직접 성장지원 체계의 한 축이 되도록 참여단을 구성하고, 청소년 인권과 참여 활동을 추진하여 청소년 주류화의 중심으로 추진
 - 유스거버넌스는 3개의 네트워크(교육네트워크, 이주배경 청소년 인권 네트워크, 거리청소년 네트워크) 운영
- 2019년 기준 부천시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는 총 18명으로 구성함. 이중 시청 청소년 업무 담당자 1명, 교육지원청 1명, 청소년활동·복지 기관 종사자 7명, 민간 전문가 7명, 부천여성청소년재단 1명, 학부모 대표 1명 등이 참여하였고, 그 이후에는 민간 영역이 보다 확대됨
- 2021년 기준 부천시는 공공 청소년기관 중간관리자 중심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실무협의체를 구성함.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상시적인 논의 체계로 운영됨. 실무협의체는 총 14명으로 부천시 담당공무원 1명, 여성청소년재단 2명, 공공 청소년기관 중간관리자 10명, 민간기관(법률지원센터) 1명 등으로 구성됨
- 청소년 성장지원 실무협의체는 연에 약 15회 이내로 추진되었고, 분과별 네트워크 회의 또한 최소 3회 이상 최대 12회 정도 추진됨

■ 경기도 성남시의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사례

- 성남시의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은 시 출연기관인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총괄, 분과 운영, 플랫폼 운영 등)가 중간지원조직으로써 주축을 이루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실행함
-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남시균형동반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이 협의체의 사무국 역할은 성남시청소년재단의 대외협력팀이 수행함

- 한편,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성남시균형동반협의체 구성 시 기존의 ‘성남시청소년육성위원회’와의 관계 설정에 고민이 많았음.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심의기구’ 역할을, ‘성남시균형동반협의체’는 ‘건의기구’ 역할로 최종적 역할 조정함(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2023)
- 성남시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의 거버넌스인 ‘성남시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는 15~16개 유관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균형동반협의회와 실무위원회로 구분·운영됨, 실무위원회에서 정책과 사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주요 안건을 제안하면, 균형동반협의회에서 제안된 안건 검토 및 정책화·사업화 여부를 결정함
- 성남시의 청소년 성장지원은 성남형 교육, 성남형 교육네트워크 구축 등을 전략으로 지역적으로 특화된 인적·물적 자원을 모색하거나 활용한 정책적 구상이나 실행과정 모두에서 적극적인 활성화 전략으로도 이어지고 있음
- 특히, 성남시 청소년재단은 2019년 기준 총 5개 청소년수련관과 2개의 문화의집, 1개 상담복지센터를 관장하고 있고 성남시청소년재단에는 별도의 사업단, 재단 산하에 ‘성남형 교육지원단’이 설립되어 있음
- 성남시는 ‘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와 ‘온라인 자원맵’, ‘위드밸런스’로 활동·복지·보호·참여 등 400+ 프로그램 통합 안내하고, 실무협의회를 상시 운영하며, 이를 위해 전담 상주인력도 배치되어 있음
- 성남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중간지원조직인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은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을 총괄하고 관련 데이터 구축과 플랫폼을 운영하며, 학교와의 연계사업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약하고, 정책참여교실, 창체 연계 사업, 참여예산 아카데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충남 청양군 성남시의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사례

- 충남 청양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협의체)로 ‘청청지음’(본·실무·분과)을 구축하고 청소년기관 이외 유관기관 10~13개 실무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군청(담당공무원)과 교육지원청도 적극 연계·협업하고 있음

-
- 청양군은 특히 군 출연 청양군청소년재단이 중간지원조직으로 ‘청청지음’ 협의체(본·실무·분과, 문화의집·상담복지센터·드림센터 등 10~13개 기관 참여)를 전담 운영함
 - 군청·교육청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며 대표적으로 찾아가는 문화의집 사업 등이 학교 내·외 연계를 강화하여 수행되고 있음
 - 학교와의 주요 연계사업으로는 정책 참여교실, 창체·방과 후 연계, 읍면 단위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이 있음
 - 인구감소지역의 시범사업 선정되어 예산·정책 동력 확보와 지역 특화 브랜딩(청청지음)이 특이함
 - 한편, 상시 전담 인력 문제와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등이 필요하고 법제·재정의 안정성 담보가 필요한 상황임

[표 2-9]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타지역의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 주제, 중간지원조직, 참여 구조 및 한계점 비교 분석

항목	성남시	부천시	곡성군	청양군
주관	성남시청소년재단(SCYF) + 시청 아동청소년정책	부천시청소년재단(BWYF) + 부천시 아동청소년과	곡성군미래교육재단 + 군청 교육정책	청양군청소년재단 + 군청 아동청소년팀
공식 거버넌스	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 (본·실무·분과)	'유스거버넌스-부천에꿈' (본·실무·분과)	재단 이사회 중심 공공·학교·민간 연계 협의체(분과 운영)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청청지음'(본·실무·분과)
중간지원조직(법적지위)	시 출연 재단(조례 기반)	시 출연 재단(조례 기반)	군 출연 재단(조례 기반) + 문화의집·상담센터	군 출연 재단(조례 기반) + 문화의집·상담·드림센터
학교-지역 연계	교육지원청 MOU, 자원맵 기반 교과·창체 연계, 정책참여교실	교육지원청 MOU, 분과별 학교연계(진로·참여·복지)	교육청·학교와 꿈놀자·축제·창체 연계, 귀가·건강프로젝트	교육지원청 연계 청소년협의체, 찾아가는 문화의집, 학교 내 프로그램
참여 구조	청소년참여위+예산제·토크콘서트·온·오프라인 병행	100인의 시민·청소년 인터뷰, 참여위·청년정책협의체 연계	꿈키움학교·축제·동아리·학교밖청소년 참여 통로 다변화	청소년협의체·민간협의체(신설) 병행, 유관기관 10~13개 실무망
재원/지속화	시 출연금 + 공모·국고(여가부 시범) + 민관협력	시 출연금 + 공모·국고 + 기업·기관 협력	군 출연금 + 지방재정 + 도/국고 일부	군 출연금 + 행안부/여가부 시범 + 군 예산 확충 논의
성과 포인트	자원맵·협의체 운영으로 부처표창·장관상, 의제→사업 전환	민·관·학 협치 모델과 시민참여형 유스 거버넌스 정착	농산어촌형 통합 패키지(활동·상담·진로)와 교육생태 확장	인구감소지역형 협의체 브랜딩(청청지음), 군·교육청 공동추진 기반
한계점	운영 인력·데이터 유지비, 학교시간표 연계의 제약	재단 의존도·사업 분절화 위험, 시민참여의 지속성 관리	재단 중심 운영의 과밀화·사업 편중, 인력·예산 제약	소규모 지자체의 인력한계, 성과관리 체계·법제 기반 보완 필요

3) 타 지자체의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사례 분석

■ 경기도 부천시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사례

- 부천시가 수행한 청소년 성장지원의 주요 사업을 보면, ‘100인의 부천에꿈(지역 자원 인지도 제고)’사업은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을 네트워크에 흡수하기 위한 핵심사업임. 지자체-교육청-기관-민간 등이 협업하는 지역사회 전 영역의 연계망을 확대하고자 했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 자원(기관, 기업, 개인)을 발굴하고, 이들이 청소년 성장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지도를 높이고 연계를 시도한 사업임
- 이외 부천시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와 성장지원 사업으로 청소년활동가의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파티’ 추진과, ‘유스아카이브’ 실행하고 있음. 즉 소통과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파티’ 사업은 부천지역 청소년 유관기관 관계자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원 간의 소통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기관 및 인력 간의 협력과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함
- ‘유스아카이브’ 사업은 청소년 관련 지역자원 조사, 자원공유 온라인 구축 시뮬레이션, 자원공유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청소년 연계 자원 현황조사, 과거 발간된 청소년 관련 자료 취합, 청소년 관련 정책자료 연도별 자료 수집 등 지역 청소년 관련 정보를 모아 담고 향후 지역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 전남 곡성군의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사례

- 곡성군은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란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의 통합 연계를 극대화하고, 폐교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먼저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의 관련 주체들이 대규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소년이 성장박람회에서 자치 부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성장지원박람회를 추진함. 이를 위해 청소년원탁토론회 등도 개최됨
- ‘(석곡중)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학교 연계 확장된 사업으로 곡성미래교육재단

으로 개편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확장하여 학교 밖 지원을 강화한 사업임

-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협동조합 운영 및 학습메이트 활동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경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메이트 활동을 제공하여 자립 역량을 길러주며, 코로나19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청소년 성장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등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한 사업임
- 마지막으로 곡성군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참여 기관의 실무자 대상 네트워크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함. 연수프로그램은 1회 4시간, 총 8차에 걸쳐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함
- 그 외 농촌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및 창의교육 플랫폼인 꿈키움마루전남교육청과 곡성군청 공동 추진, 미래교육재단 운영)를 설립하여 공익형 진로체험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를 통해 지원함. 그리고 문화·스포츠와 마을을 연계한 이색축전 등의 사업이 있음

■ 충남 청양군의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사례

- 충남 청양군은 ‘청청지음’ 협의체 의제 기반의 인구소멸 대응 인식·애향심 제고를 위한 공동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음. 학교와 청소년시설을 연계한 현장컨설팅과 분과 협력 기반의 공동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읍면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문화의집 및 학교-1388-정신건강 연계한 정서·관계 회복·체력 증진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사업들을 보면 청소년 공간조성, 지역 자원 연계 뮤지컬, 디지털드로잉, 농장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4. 요약 및 시사점

■ 청소년 성장지원의 이론적 이해 요약 및 시사점

- ‘청소년 성장지원’이란 만 9세부터 24세 청소년의 신체, 정서, 사회성, 진로, 시민성 등 다면적 역량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기 위한 체계적·통합적인 지원을 의미함. 최근 동향은 지역사회 기반 연계·협력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삶을 계획하는 주체성 및 자율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리고 청소년의 복합적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자원(학교, 지자체, 민간기관 등) 간 목표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정책 추진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음
- 한편, 청소년기본법 등 간접적인 근거만으로는 다부처 통합 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발생하기에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청소년 성장지원’을 명시한 독립적인 조례(제정 또는 기존 조례 개정)를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자원 연계와 서비스 조정을 전담하고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주체가 필수적임. 이를 통해 형성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은 청소년의 개별 욕구와 지역사회 자원 정보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학교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청소년들이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마지막으로 복지, 활동, 학습 등 다양한 영역의 민간 자원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지원의 폭을 넓혀야 함
- 이에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청, 교육청, 청소년기관, 민간단체 등을 통합한 중간지원조직에 실질적인 연계·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네트워크(거버넌스)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무엇보다 단순한 MOU나 협력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정규 교육 과정 및 방과 후 활동과 지역사회 자원 체험을 체계적으로 연동하는 실질적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임

■ 중앙부처의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정책 현황에 대한 요약과 시사점

-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2020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기

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총괄·운영 했고, 이는 지역 단위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협력을 강화함. 또한,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를 확대 개편하여 지역사회 분야별 기관 및 서비스 간의 연계·복합화를 추진하고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 지역’ 시범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 한편,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을 주도하여 교육청, 지자체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일한 법적 근거나 조례 부재로 단순 협약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예산 투입과 인력 배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법규/조례)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정책 현황에 대한 요약과 시사점

-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은 전북 도지사-교육감 업무협약 체결(‘23.12)을 통해 광역 단위 차원의 네트워크가 구축·운영되고 있고, 민간기관(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JTV전주방송 등)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교육과정 연계 사업, 진로 탐색 및 체험활동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전담하고 있음. 한편, 도지사-교육감 간 업무협약, 민간기업과의 광역 단위 협력 체결 등 거버넌스 구축은 광역 단위(전북도)에 집중되어, 실제 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기초 시·군 단위에서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실행력 확보가 불안정하여 광역의 정책이 기초지자체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실행될 수 있는 하향식 전달체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타 지자체의 청소년 성장지원 사례 분석에 대한 요약과 시사점

- (법률적 및 제도적 사례 분석) 현재까지 중앙 및 지방 차원에서 ‘청소년 성장지원’이라는 명시적인 용어나 내용이 포함된 국가적 법령 또는 단일 자치법규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는 주로 ‘청소년기본법’ 등에 간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장지원 사업이 복지, 활동, 교육, 자립 등 다 분야를 통합하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청소년기본법의 일부 조항에 파편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안

정성 및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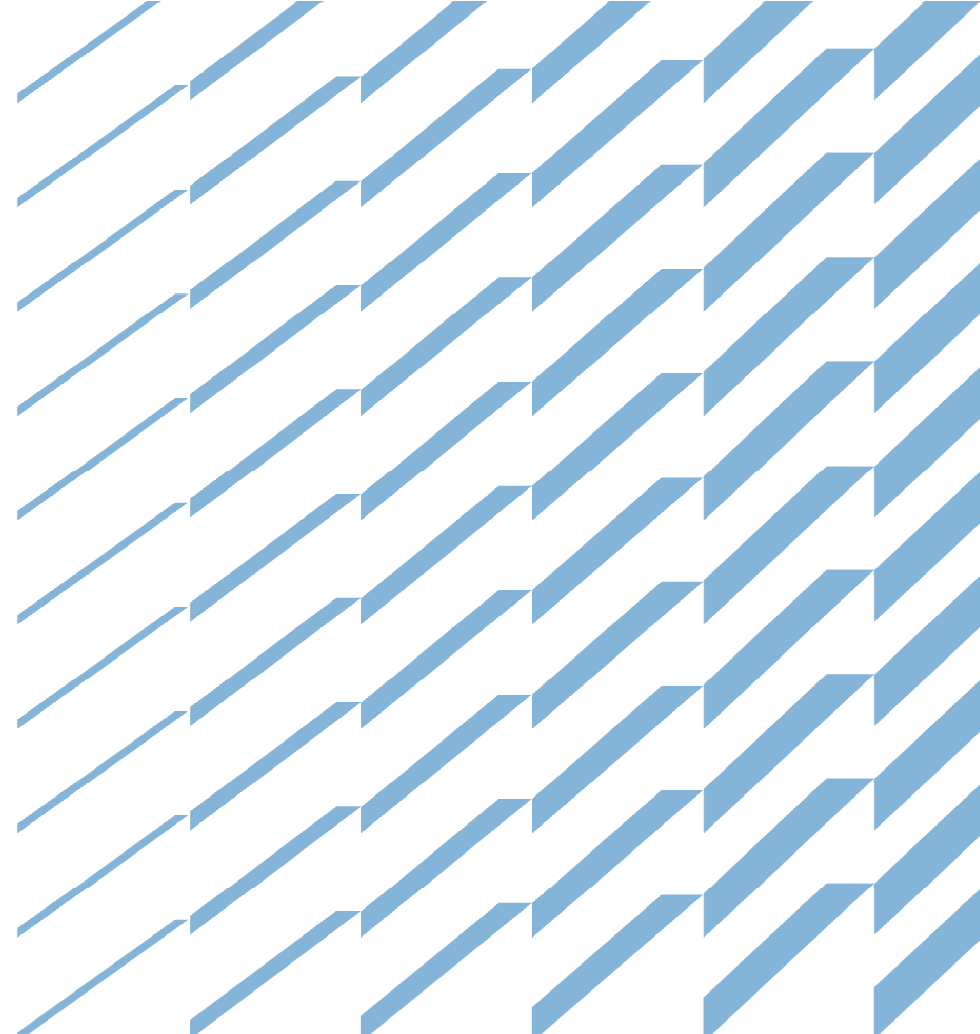
-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상위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네트워크 및 중간지원조직 사례 분석) 경기도 성남시·부천시 및 전남 곡성군 등은 청소년재단, 미래교육재단과 같은 전문 중간지원조직을 네트워크 사무국으로 지정하여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성남시 및 부천시는 네트워크 협의체를 정책 결정(협의회)과 실무 집행(실무위원회)을 이원화하여 거버넌스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 그리고 부천시의 경우 '100인의 부천에꿈'을 통해 지역 내 민간 자원(기업, 개인)을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유스아카이브'를 통해 분산된 청소년 관련 자원 현황을 조사하고 정책 자료를 취합하는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가고 있음
- 특히, 곡성군은 인구감소 지역 특성을 반영해 학교 교육 연계와 폐교 등 유휴 공간 활용을 사업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음
- 이에 전북도는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전문성을 갖춘 중간지원조직을 네트워크의 공식적인 사무국으로 지정하고, 성남시의 모델을 참고하여 이원화된 거버넌스를 도입하여 정책 결정과 실무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 있음. 그리고 '100인의 전북 꿈 지원단'과 같은 민간 자원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네트워크의 외연을 확장하고, '전북 청소년 유스아카이브' 등을 동일 목적으로 구축하여 분산된 지역 청소년 관련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있음
- 마지막으로 전북도는 14개 중 10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폐교나 유휴 공간을 청소년활동 거점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중간지원조직이 학교 교육 및 방과 후 활동에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모델 개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임
-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분석) 타 지자체의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사례는 크게 ‘지역자원 동원 및 인프라 구축’과 ‘지역 특화 연계 사업’으로 요약되며 이 사업들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실행력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부천시의 ‘100인의 부천에꿈 사업’은 지역사회 전 영역의 다양한 민간 자원(기관, 기업, 개인)을 발굴하고, 이들이 청소년 성장지원에 참여하도록 인지도를 높여 네트워크에 흡수하는 핵심 동원 사업으로 분산된 지역 자원을 공식화하고 네트워크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성공했고, ‘네트워크 파티’는 유관기관 관계자 간 정기적인 소통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주체들 간 협력과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거버넌스 실행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함. 그리고 ‘유스아카이브’는 청소년 관련 지역자원을 조사, 취합하고 정책자료를 연도별로 수집하여, 향후 활용가능한 ‘자원 공유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임
- 이에 전북도 또한 부천시의 ‘100인의 부천에꿈’을 벤치마킹하여, 전북도의 잠재적 민간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네트워크 사업과 맞춤형 매칭하는 사업 추진으로 기관 간 단순 협약이 아닌, 자원의 실질적인 참여와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구조가 필요함
- 그리고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북 청소년 유스아카이브’와 같은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각 기관에 분산된 청소년 관련 시설, 프로그램, 전문가, 정책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코디네이터와 참여 기관들이 손쉽게 자원을 확인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 있음
- 무엇보다 곡성군은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라는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석곡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며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 자원의 시너지를 극대화했고, 폐교나 유휴 공간 활용에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하여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했으며, 청소년 성장지원 박람회, 청소년 원탁토론회 등을 통해 청소년 및 지역 주체들의 대규모 참여를 유도하는 등 인구감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들을 추진함
- 이에 전북도도 곡성군의 사례처럼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북도의 특성상, 폐교, 주민센터 유휴 공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이 필수적이며, 이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중간지원조직이 학교의 교

육과정과 연계된 방과 후 아카데미, 진로 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격차 해소와 통합 성장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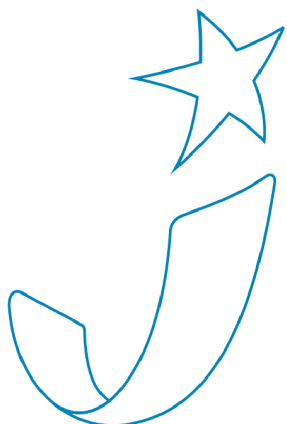
- 그리고 부천시의 네트워크 파티 사례처럼 정식 회의 외에도 친목과 정보 교류를 위한 워크숍, 간담회, 네트워킹 행사를 정기적으로 열어 기관 간 벽을 낮추고 협력 의지 다질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필요함. 또한, 온라인 플랫폼(예: 성남시 '위드밸런스')이나 메신저 그룹 등을 활용해 상시 소통 채널과 자원맵이나 유스아카이브처럼 공유 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구를 도입하여, 협업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제3장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실태 및 정책 수요 분석

1. 전북 청소년 인구 현황 및 특성
2.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지역자원 현황 분석
3. 전북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실태 및 정책적 수요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실태 및 정책 수요 분석

1. 전북 청소년 인구 현황 및 특성

1) 전국 및 각 시도별 청소년 인구 현황 및 특성

■ 전국 시도별·연령별(전기/중기/후기) 청소년 인구 현황 및 특성

- 전국 청소년 인구는 총 7,613,642명 중 시도별 청소년 인구비율을 살펴보면, 세종시가 1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광주(17.1%), 대전(16.2%)과 제주(16.2%), 경기(15.6%), 울산(15.4%) 등의 순이었음. 한편, 전북의 청소년 인구비는 15.0%로 전국평균보다 소폭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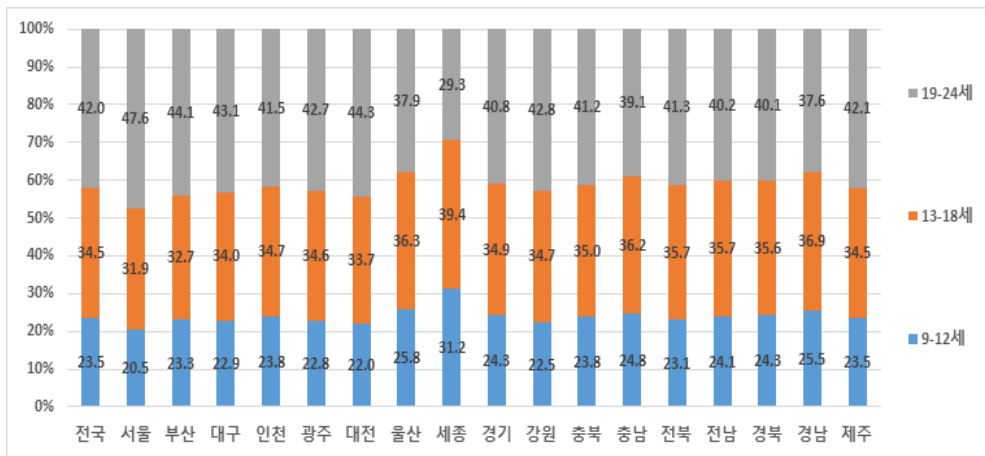
- 청소년 인구의 연령별 구성비는 세종시가 전기와 중기 청소년 인구 비중이 72.0%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가 54.5%로 가장 낮았음. 전북은 61.3%로 17개 시도 중 10번째로 나타남

[표 3-1] 전국 시도별 청소년 인구 현황

구분	총인구	청소년 인구				총인구 대비 청소년 비율
		계	9~12세(전기)	13~18세(중기)	19~24세(후기)	
전국	51,169,148	7,613,642	1,793,703	2,827,180	2,992,759	14.9
서울	9,328,042	1,303,552	270,555	439,867	593,130	14.0
부산	3,254,457	447,428	106,520	158,578	182,330	13.7
대구	2,357,997	352,854	83,509	129,063	140,282	15.0
인천	3,037,049	449,177	107,518	167,520	174,139	14.8
광주	1,399,880	239,094	55,036	88,648	95,410	17.1
대전	1,439,607	233,887	51,383	83,043	99,461	16.2
울산	1,094,027	168,637	43,808	66,619	58,210	15.4
세종	392,211	76,453	23,013	32,015	21,425	19.5
경기	13,706,488	2,143,408	521,774	806,117	815,517	15.6
강원	1,511,341	208,196	46,883	77,861	83,452	13.8
충북	1,590,956	232,687	54,881	88,003	89,803	14.6

구분	총인구	청소년 인구				총인구 대비 청소년 비율
		계	9~12세(전기)	13~18세(중기)	19~24세(후기)	
충남	2,135,908	320,907	78,153	124,246	118,508	15.0
전북	1,731,309	259,010	58,998	99,825	100,187	15.0
전남	1,784,116	246,262	58,833	96,598	90,831	13.8
경북	2,520,934	343,287	83,049	132,666	127,572	13.6
경남	3,217,584	480,636	121,757	193,663	165,216	14.9
제주	667,242	108,167	28,033	42,848	37,286	16.2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25.5 기준).



[그림 3-1] 전국 시도별 청소년 인구의 연령별 구성비

■ 전국 17개 시도별 청소년 인구 추계

- 전국 청소년 인구의 추계를 살펴보면, 2022년 8,147천명에서 2025년 7,614천명으로 -533천명이 감소하고, 2030년(6,669천명), 2040년(4,770천명), 2050년(4,853천명)까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됨
 - 청소년 인구의 구성비는 2022년 15.8%에서 2025년 14.9%로 -0.9%감소하고, 2040년 9.5%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됨
- 전북 청소년 인구의 경우, 2022년 294천명에서 2025년 259천명으로 -35천명 감소하고, 2030년 219천명, 2040년 146천명, 2050년 143천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표 3-2] 전국 17개 시도별 청소년(9~24세) 인구 추계

(단위 : 천명)

구분	청소년 인구(천명): 9~24세					청소년 인구 구성비(%)				
	2022	2025	2030	2040	2050	2022	2025	2030	2040	2050
전국	8,147	7,614	6,669	4,770	4,853	15.8	14.9	13.0	9.5	10.2
서울	1,409	1,304	1,069	761	783	15.0	14.0	11.9	8.9	9.9
부산	486	447	386	261	246	14.7	13.7	12.5	9.2	9.8
대구	385	353	295	198	190	16.3	15.0	13.4	9.8	10.5
인천	463	449	386	274	280	15.6	14.8	13.0	9.3	10.0
광주	267	239	207	144	141	18.3	17.1	14.8	10.9	11.6
대전	270	234	195	139	140	18.3	16.2	14.0	10.4	11.3
울산	176	168	144	92	83	15.9	15.4	13.8	9.7	9.9
세종	75	76	91	83	96	19.5	19.5	18.2	14.2	15.2
경기	2,218	2,143	1,950	1,473	1,576	16.2	15.6	13.5	10.0	11.0
강원	232	208	184	134	135	15.2	13.8	12.1	8.7	9.1
충북	262	233	211	157	159	16.0	14.6	12.8	9.4	9.9
충남	351	321	291	214	217	16.1	15.0	13.1	9.5	9.9
전북	294	259	219	146	143	16.5	15.0	12.9	9.1	9.6
전남	257	246	206	136	129	14.5	13.8	12.1	8.4	8.5
경북	384	343	309	209	197	14.6	13.6	12.1	8.5	8.7
경남	505	481	422	273	256	15.4	14.9	13.2	9.0	9.2
제주	112	108	104	78	81	16.6	16.2	14.7	10.9	11.5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

- 13세~18세 청소년 인구의 추계를 살펴보면, 2022년 2,722,496명에서 2023년 2,688,533명으로 감소하고, 2030년 2,602,788명, 2040년 1,465,874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됨
- 2022년 대비 2023년 감소율은 전국평균 -1.2%이며, 시도별로는 대구(-3.1%), 대전(-2.7%), 서울(-2.6%), 전북(-2.5%), 전남(-2.1%) 등의 순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2023년 대비 2040년 감소율은 전국평균 -45.5%이며, 시도별로는 전북(-52.5%), 서울(-51.3%), 대구(51.2%), 울산(51.2%), 경남(-50.8%), 전남(-50.0%) 지역이 50% 이상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표 3-3] 전국 17개 시도별 청소년(13~18세) 인구 추계

구분	2022	2023	2030	2040	2050	'22년-'23년 증감률	'23년-'40년 증감률
전국	2,722,496	2,688,533	2,602,788	1,465,874	1,893,044	-1.2	-45.5
서울	429,828	418,816	377,767	203,911	284,911	-2.6	-51.3
부산	151,614	148,922	149,559	75,348	92,407	-1.8	-49.4
대구	127,117	123,234	116,558	60,130	73,828	-3.1	-51.2
인천	158,084	156,299	150,834	84,067	109,726	-1.1	-46.2
광주	88,716	86,828	79,930	44,363	54,328	-2.1	-48.9
대전	82,818	80,620	71,849	40,469	52,256	-2.7	-49.8
울산	64,092	63,359	61,302	30,946	33,496	-1.1	-51.2
세종	26,830	28,239	38,825	28,971	40,185	5.3	2.6
경기	761,112	760,022	772,841	464,410	632,779	-0.1	-38.9
강원	77,710	76,298	70,507	41,580	52,770	-1.8	-45.5
충북	85,508	84,690	82,021	49,592	61,716	-1.0	-41.4
충남	118,870	118,443	114,259	67,999	84,712	-0.4	-42.6
전북	99,059	96,595	86,069	45,843	55,705	-2.5	-52.5
전남	93,427	91,452	85,632	45,747	51,998	-2.1	-50.0
경북	130,917	129,084	123,843	65,689	76,202	-1.4	-49.1
경남	185,966	184,858	178,099	90,876	103,449	-0.6	-50.8
제주	40,828	40,774	42,893	25,933	32,576	-0.1	-36.4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

2) 전북도와 14개 시군별 청소년 인구 현황 및 특성

■ 전북도와 14개 시군별 청소년 인구 현황 및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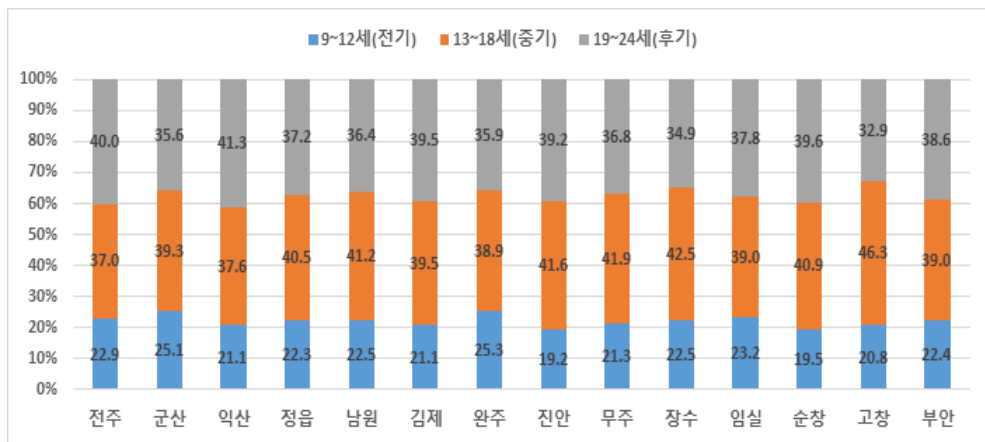
- 전북 14개 시군별 청소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4월) 기준 전북 도내 청소년 인구 규모는 총 259,693명으로, 전주 110,563명(42.6%), 익산 41,485명(16.0%), 군산 39,174명(15.1%), 완주 13,566명(5.2%) 등의 순으로 많았음. 반면, 장수(2,200명), 임실(2,216명), 진안(2,362명) 순으로 적었음
 - 전북 청소년의 42.6%가 전주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주/군산/익산 등 주요 도시에 73.7%(191,222명)가 거주하고 있음
- 14개 시군별 총인구 대비 청소년 인구비는 전북 평균은 15.0%로 나타난 가운데, 전주시가 1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익산(15.5%), 군산(15.3%), 완주(13.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임실군(8.7%) 및 진안군(9.7%)은 총인구의 10% 미만 수준이었음
 - 전주·군산·익산 등 주요 도시만 전북 평균(15.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시군별 청소년 인구수를 연령대별 구성비로 구분해 보면, 전기(9~12세) 청소년 구성비는 완주(25.3%)에서 가장 높았고, 중기(13~18세) 청소년 구성비는 고창(46.3%), 후기(19~24세) 청소년 구성비는 익산(41.3%)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4] 전북 시군별 청소년 인구 현황

구분	총인구	청소년 인구					청소년 인구비
		계		9~12세(전기)	13~18세(중기)	19~24세(후기)	
전북	1,732,439	259,693	100.0	59,281	99,746	100,666	15.0
전주	631,587	110,563	42.6	25,365	40,930	44,268	17.5
군산	256,856	39,174	15.1	9,849	15,387	13,938	15.3
익산	267,790	41,485	16.0	8,743	15,599	17,143	15.5
정읍	101,439	12,864	5.0	2,867	5,212	4,785	12.7
남원	75,147	9,471	3.6	2,127	3,901	3,443	12.6
김제	81,211	9,171	3.5	1,931	3,621	3,619	11.3
완주	99,923	13,566	5.2	3,428	5,274	4,864	13.6
진안	24,238	2,362	0.9	453	983	926	9.7

구분	총인구	청소년 인구					청소년 인구비
		계		9~12세(전기)	13~18세(중기)	19~24세(후기)	
무주	22,976	2,586	1.0	550	1,084	952	11.3
장수	20,490	2,200	0.8	496	936	768	10.7
임실	25,486	2,216	0.9	514	865	837	8.7
순창	26,828	3,208	1.2	626	1,311	1,271	12.0
고창	50,770	5,761	2.2	1,197	2,667	1,897	11.3
부안	47,698	5,066	2.0	1,135	1,976	1,955	10.6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25.4 기준)



[그림 3-2] 전북 시군별 청소년 인구의 연령대별 구성비

- 전북 시군별 청소년 인구수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0여 년간 전북 청소년 인구는 -94,502명 감소한 가운데, 전주시가 -32,397명으로 가장 많은 수가 감소하였음. 다음으로 익산(-18,888명), 군산(-12,517명), 정읍(-7,327명) 등의 순이었음
- 2016년 대비 2025년 청소년 인구 감소율은 임실군이 -42.0%(1,605명 감소)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부안 -39.3%, 고창 -37.4%, 정읍과 남원 각 -36.3% 순으로 크게 나타남. 반면, 완주군의 경우 -12.8%로 가장 적었음
- 시군별 총인구 대비 청소년 인구 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시군에서 감소 추세를 보임. '16년 대비 '25년 10년간 청소년 인구구성비 감소율은 남원시가 -4.95%p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읍(-4.80%p), 익산(-4.55%p), 전주(-4.39%p)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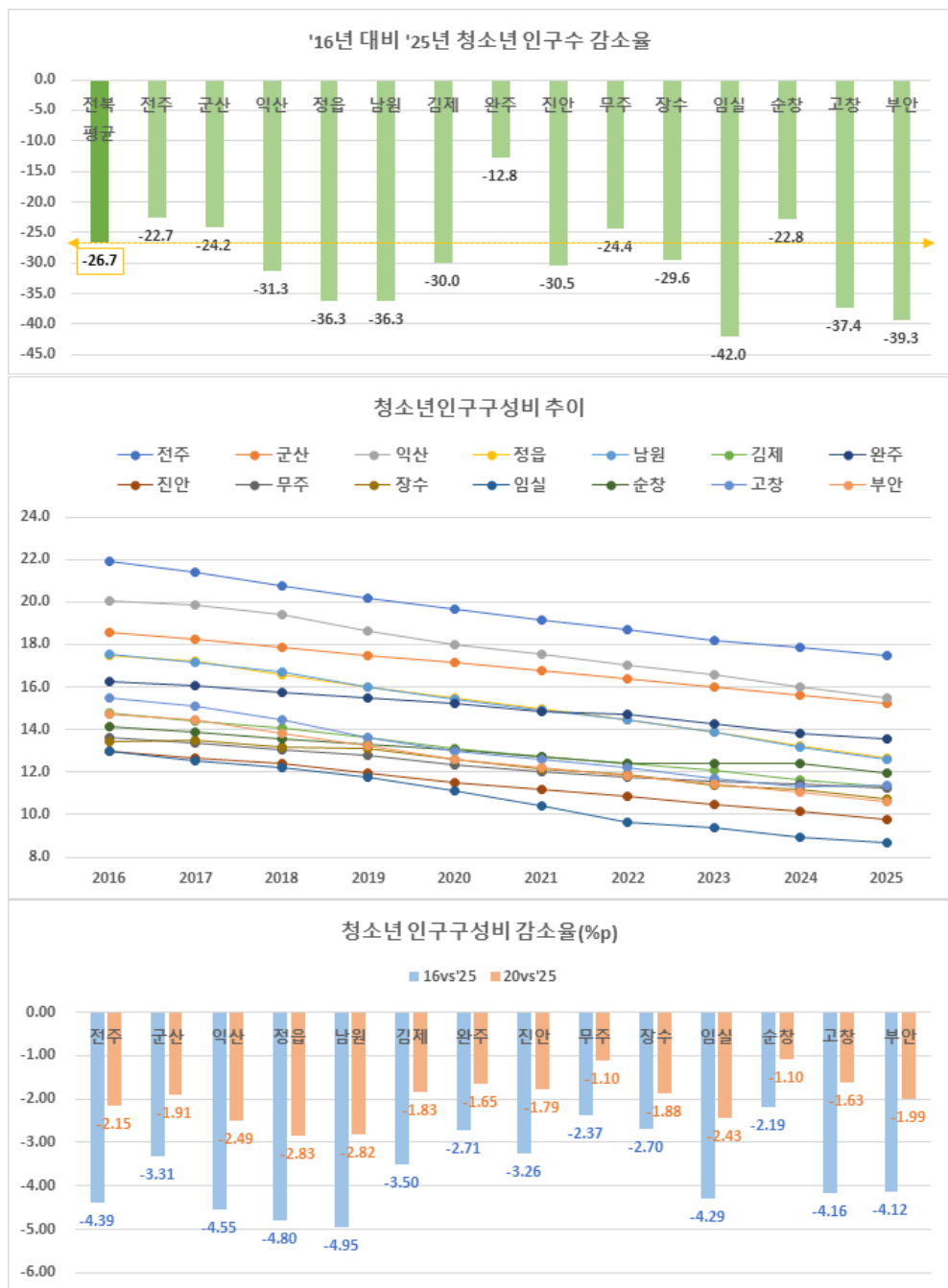
- '20년 대비 '25년 5년간 구성비 감소율은 정읍시가 -2.83%p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남원(-2.82%p), 익산(-2.49%p), 임실(-2.43%p)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5] 전북 시군별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추이(2016~202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북	354,195 19.0	346,356 18.6	334,811 18.1	321,751 17.6	310,062 17.1	299,472 16.7	289,622 16.3	278,714 15.8	269,008 15.4	259,693 15.0
전주	142,960 21.9	139,464 21.4	135,357 20.8	131,795 20.2	128,878 19.7	125,570 19.1	122,496 18.7	117,903 18.2	114,473 17.9	110,563 17.5
군산	51,691 18.6	50,370 18.2	48,911 17.9	47,448 17.5	46,110 17.2	44,790 16.8	43,371 16.4	41,767 16.0	40,437 15.6	39,174 15.3
익산	60,373 20.0	59,898 19.9	57,621 19.4	54,215 18.6	51,281 18.0	49,268 17.6	47,201 17.1	45,107 16.6	42,970 16.0	41,485 15.5
정읍	20,191 17.5	19,688 17.2	18,780 16.6	17,847 16.0	17,030 15.5	16,107 15.0	15,305 14.4	14,477 13.9	13,678 13.3	12,864 12.7
남원	14,865 17.6	14,378 17.1	13,850 16.7	13,150 16.0	12,517 15.4	11,939 14.9	11,428 14.5	10,737 13.9	10,059 13.2	9,471 12.6
김제	13,093 14.8	12,570 14.4	12,148 14.1	11,537 13.6	10,944 13.1	10,454 12.7	10,026 12.4	9,908 12.1	9,438 11.6	9,171 11.3
완주	15,551 16.3	15,376 16.0	15,018 15.8	14,471 15.5	14,006 15.2	13,538 14.9	13,382 14.7	13,493 14.2	13,655 13.8	13,566 13.6
진안	3,398 13.0	3,305 12.7	3,260 12.4	3,093 12.0	2,946 11.5	2,826 11.2	2,710 10.9	2,578 10.5	2,487 10.2	2,362 9.7
무주	3,420 13.6	3,323 13.4	3,224 13.0	3,120 12.8	2,981 12.4	2,880 12.0	2,798 11.8	2,711 11.6	2,645 11.4	2,586 11.3
장수	3,124 13.4	3,146 13.5	3,020 13.2	2,992 13.1	2,811 12.6	2,665 12.2	2,565 11.9	2,406 11.4	2,324 11.2	2,200 10.7
임실	3,821 13.0	3,682 12.5	3,563 12.2	3,374 11.8	3,104 11.1	2,810 10.4	2,584 9.7	2,477 9.4	2,309 8.9	2,216 8.7
순창	4,157 14.1	4,087 13.9	3,988 13.5	3,853 13.3	3,671 13.1	3,483 12.7	3,321 12.4	3,331 12.4	3,317 12.4	3,208 12.0
고창	9,201 15.5	8,888 15.1	8,401 14.5	7,695 13.6	7,139 13.0	6,846 12.6	6,471 12.2	6,107 11.7	5,821 11.3	5,761 11.3
부안	8,350 14.7	8,181 14.5	7,670 13.8	7,161 13.3	6,644 12.6	6,296 12.2	5,964 11.8	5,712 11.4	5,395 11.1	5,066 10.6

주 : 9~24세 기준.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4월 기준.



[그림 3-3] 전북 시군별 청소년인구 구성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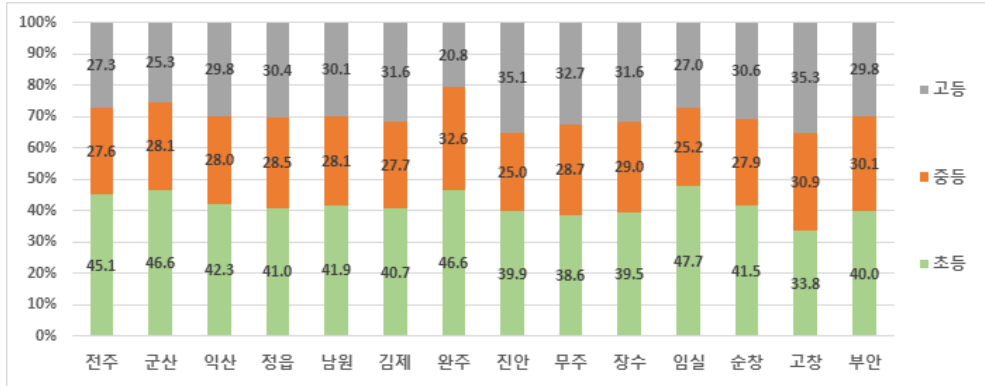
■ 전북 14개 시군별 학교급별 학생 현황 및 학령기 인구 추이

- 전북 학교급별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초·중고 재학생 172,763명 중 초등학생이 43.9%(75,912명), 중학생 28.2%(48,660명), 고등학생 27.9%(48,191명)로 나타남
- 전북 초·중고 재학생 수의 73.5%(127,004명)는 전주(42.6%)·군산(15.7%)·익산(15.3%) 등의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시군별 재학생 수의 연령대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구성비는 임실(47.7%), 중학생 구성비는 완주(32.6%), 고등학생 구성비는 고창(35.3%)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6] 전북 시군별*학교급별 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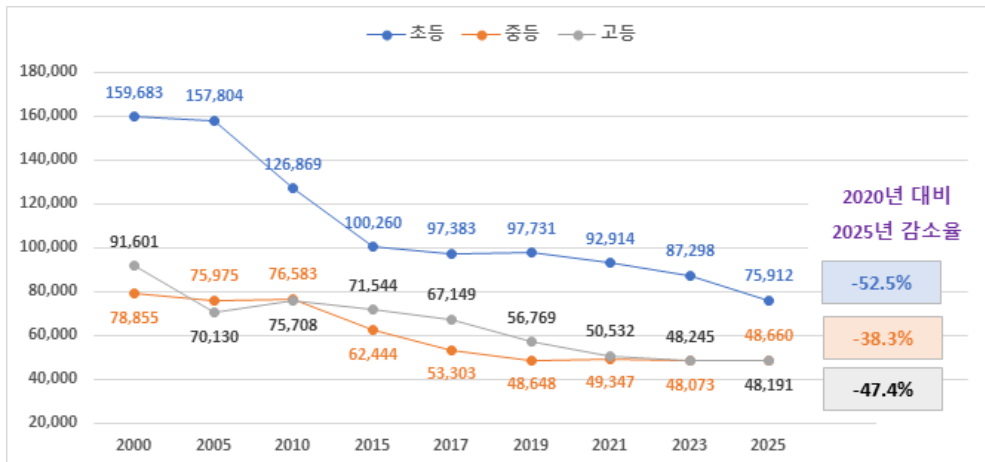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북	172,763	75,912	38,893	37,019	48,660	24,974	23,686	48,191	25,204	22,987
전주	73,603	33,205	16,945	16,260	20,315	10,312	10,003	20,083	10,389	9,694
군산	27,041	12,595	6,375	6,220	7,599	3,861	3,738	6,847	3,432	3,415
익산	26,360	11,144	5,697	5,447	7,372	3,758	3,614	7,844	4,090	3,754
정읍	8,864	3,636	1,865	1,771	2,530	1,355	1,175	2,698	1,422	1,276
남원	6,548	2,743	1,467	1,276	1,837	957	880	1,968	1,029	939
김제	6,036	2,456	1,300	1,156	1,670	883	787	1,910	1,014	896
완주	8,572	3,997	2,000	1,997	2,795	1,461	1,334	1,780	932	848
진안	1,507	602	294	308	376	196	180	529	353	176
무주	1,652	638	350	288	474	251	223	540	259	281
장수	1,432	565	306	259	415	207	208	452	235	217
임실	1,410	673	358	315	356	181	175	381	222	159
순창	1,964	816	450	366	547	271	276	601	320	281
고창	4,329	1,463	755	708	1,336	734	602	1,530	981	549
부안	3,445	1,379	731	648	1,038	547	491	1,028	526	502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25년 4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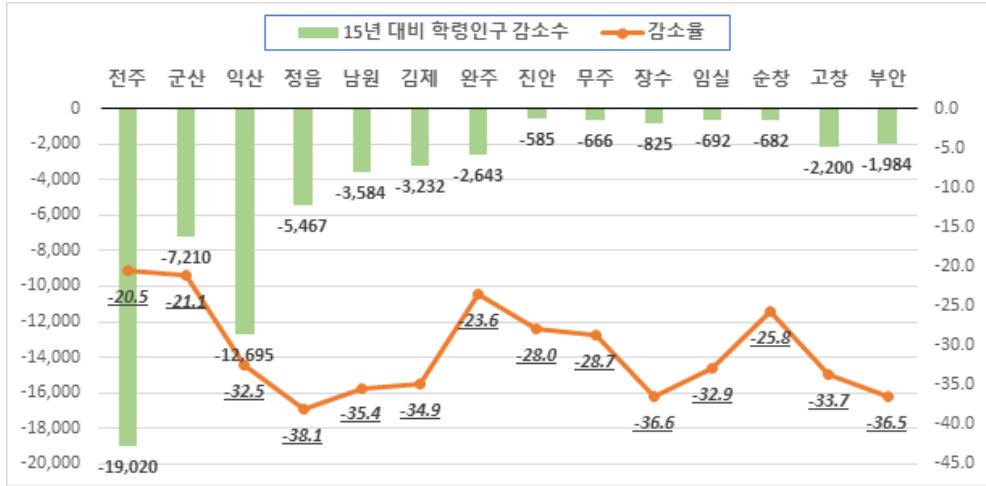
[그림 3-4] 전북 사군별*학교급별 학생수 구성비 현황

- 2025년 전북의 초·중·고 학령기 인구는 2000년과 대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초등 학령기 인구수는 -52.5%(83,771명), 중등은 약 -38.3%(30,195명), 고등은 약 -47.4%(43,410명)가 감소하였음. 특히, 초등학생 수의 감소 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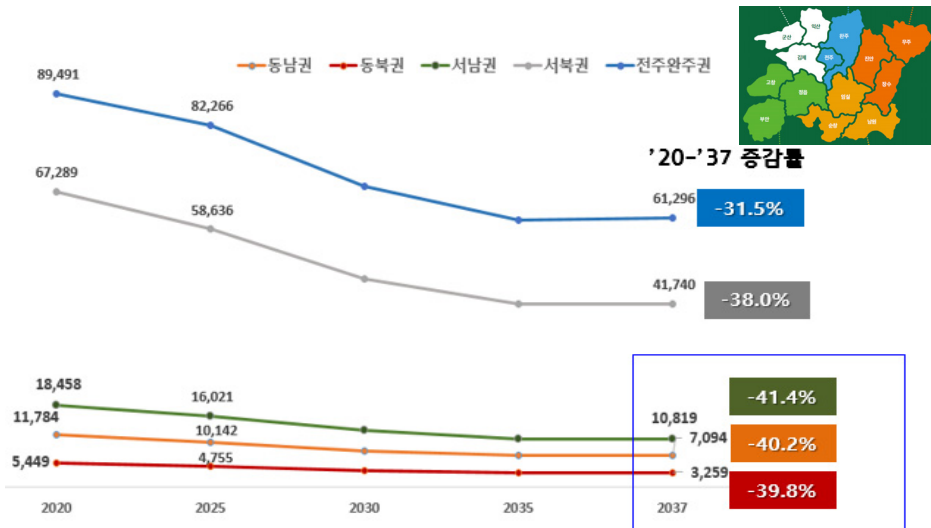
[그림 3-5] 전북 초·중·고 학교급별 학생수 추이

- 2015년 학령기 인구 대비 2025년 학령기 인구감소 비율을 보면 지난 10년간 전북 평균 -26.2%가 감소함. 이 중 10년 동안 학령기 인구감소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정읍 -38.1%(5,467명), 장수 -36.6%(825명), 부안 -36.5%(1,984명) 순으로 높았고, 10년간 학령기 인구 감소율이 -30% 이상인 지역은 8개 시군임



[그림 3-6] 전북 사군별 10년간('15vs'25) 학령기 인구감소 현황

- 한편,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학령기 인구 감소 추이 현황을 살펴보면, 동북(무주, 진안, 장수), 동남(임실, 순창, 남원), 서남(정읍, 고창, 부안) 학령기 인구가 서북권(군산, 익산, 김제) 및 전주·완주권 학령기 인구간 격차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그림 3-7] 전북 권역별 학령기 인구 감소 추이(2020~2037)

2.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지역자원 현황 분석

1) 여성가족부의 지역별 청소년 관련 유관 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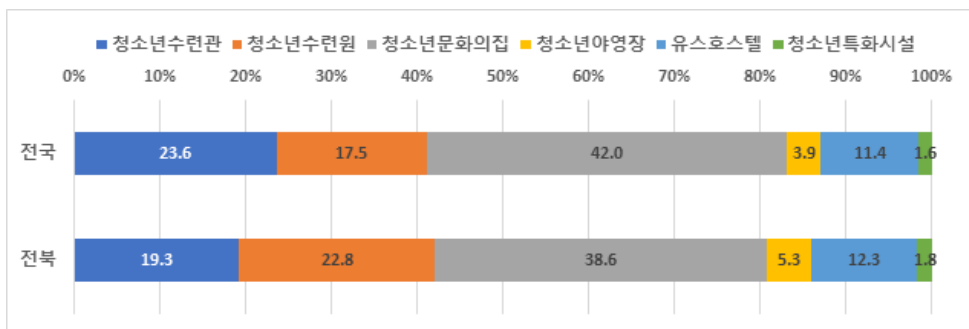
■ (청소년 활동)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2025년 10월 기준으로 전북은 총 57개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이 22개(38.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원 13개(22.8%), 청소년수련관 11개(19.3%), 유스호스텔 7개(12.3%)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전국 평균 비중과 비교해 전북의 경우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은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야영장 비중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7] 전국 및 전북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구분	청소년(수련)시설						합계
	생활권		자연권		유스 호스텔	특화시설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전국	205	365	152	34	99	14	869
	23.6	17.5	42.0	3.9	11.4	1.6	100.0
전북	11	22	13	3	7	1	57
	19.3	38.6	22.8	5.3	12.3	1.8	100.0

자료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홈페이지(<http://youthnet.or.kr>). (2025.10.13 기준)



[그림 3-8] 전국 및 전북 청소년수련시설 종류별 구성비

- 전북지역 청소년수련시설 57개소에 대한 시군별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김제시와 무주군이 각 7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주시/완주군 각 6개소, 고창군 5개소, 부안군 4개소, 익산시/정읍시/남원시/진안군/장수군/순창군 각 3개소, 군산시/임실군 각 2개소로 나타남

- 모든 시군에서 생활권 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중 최소 하나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8] 전북 시군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현황(2024)

*휴지시설 포함, 폐지시설 제외

구분	합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전북도	57	11	22	13	3	7	1
전주	6	1	5	0	0	0	0
군산	2	1	1	0	0	0	0
익산	3	1	1	0	0	1	0
정읍	3	1	2	0	0	0	0
남원	3	1	1	1	0	0	0
김제	7	1	2	3	0	1	0
완주	6	1	2	1	1	1	0
진안	3	1	0	1	1	0	0
무주	7	1	1	4	1	0	0
장수	3	0	1	0	0	2	0
임실	2	0	1	1	0	0	0
순창	3	1	2	0	0	0	0
고창	5	1	2	0	0	2	0
부안	4	0	1	2	0	0	1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그림 3-9] 전북 시군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현황(2024)

■ (청소년 상담·복지) 청소년 상담복지 시설 현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의 중추기관으로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240여개가 설치·운영하고 있음.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상담·복지 인력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자립 및 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전북에는 전북도와 14개 시군에 각 1개소씩 총 15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약 220여개 설치되어 있고, 학교 밖 청소년 개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 한 전문 상담과 교육(검정고시·대학진학·학교복귀) 및 진로(진로탐색·직업훈련·인턴십)와 더불어 자립(자기계발·건강검진·급식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전북에는 전북도와 9개 시군에 각 1개소씩 총 10개의 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전북도, 완주, 김제, 남원, 정읍, 익산, 군산, 전주, 무주, 순창)

[표 3-9] 전국 및 전북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시설 현황(2025)

구분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시설						합계
	상담·복지		가정밖청소년지원		정서·행동 장애 지원	인터넷·스마 트폰 과의존 치유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 지원관			
전국	240	222	137	13	2	2	616
전북	15	10	6	0	1	1	33

자료 : 청소년1388 홈페이지(https://www.1388.go.kr/ind/YTOSP_SC_IND_01).

■ (청소년 보호) 청소년 보호 관련 시설 현황

- **청소년쉼터**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 약 130여개가 설치되어 있고, 가정 밖 청소년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단기·중장기) 보호하면서,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선도수련활동,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거리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전북에는 단기 3개소, 중장기 2개소, 일시 1개소 등 총 6개 쉼터가 설치·운영중임(익산일시, 전주남자중장기, 군산여자중장기, 군산남자단기, 전주남자단기, 전주여자단기)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쉼터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서 일정기간 지원 받았음에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 능력과 여건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 전국에 13개(서울2, 부산1, 대구1, 인천2, 대전1, 경기3, 강원1, 충남1, 제주1)가 있으며, 전북에는 아직 부재함

■ (청소년 기숙형 종합적 지원) 청소년디딤센터와 인터넷드림마을 관련 현황

-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하여 학습·정서·행동문제 청소년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전문 상담과 치료, 대안교육, 체험과 활동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재활과 자립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숙형 종합적·전문적 시설인 청소년디딤센터와 인터넷드림마을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재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국립익산청소년디딤센터가 설치될 예정임(2027년 개관 예정)
 -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지원: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경기 용인시),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대구)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전북 무주군),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대구)

■ 그 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및 청소년성문화센터

-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기관도 설치·운영 중임. 9세~24세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정착을 위해 한국어·진로 교육 정보제공, 찾아가는 사례관리, 상담통역지원사 지원, 심리사회적응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전국에 총 25개소가 설치·운영중임(서울(2), 부산(1), 인천(2), 울산(1), 세종(1), 경북(1), 경남(2), 경기(9), 충북(1), 충남(3), 전북(2))

- 학교와 상담복지센터를 보완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는 성교육 전문기관임. 성교육, 성상담, 성문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전국에 총 57개소가 설치·운영중임(서울(8), 인천(2), 경기(9), 경북(4), 대구(2), 전남(4), 전북(4), 광주(2), 강원(4), 부산(5), 경남(3), 충남(3), 대전(1), 울산(1))

2) 보건복지부의 지역별 청소년 관련 기관 현황

■ (청소년 심리·정신적 상담)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학대받은 아동과 가족의 심리정서를 지원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치료, 교육 및 홍보활동을 등을 수행하고 있음. 전국에 총 77개소가 설치·운영 중임

[표 3-10]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2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	4	3	4	2	2	1	2	16	4	3	4	5	4	4	8	2

자료 :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 (청소년 보호·자립) 자립지원전담기관

-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법 제38조, 제39조의 2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보호체계 간 편차 없는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및 자립지원 업무의 체계화, 맞춤형 자립지원을 제공하여 자립준비 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함. 전국에 총 18개소(17개 시도에 각 1개소)가 설치·운영중임(경기도의 경우 2개소)

■ (청소년 중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현황

- 보건복지부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은 생애주기별 전 연령층인 온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신건강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대상을 특화한 상담·치료전문 서비스는 일부에 그치고 있음. 또한, 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정서·행동문제 특성에 맞춘 전문적·체계적·종합적인 전문 상담과 치료, 재활, 자립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는 미흡한 실정임

[표 3-11] 전국 정신건강증진기관시설 설치 현황(2025)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 센터	정신 재활 시설	정신 요양 시설	정신의료 기관	계
	광역	기초	독립	부설					
계	17	246	6	48	60	365	59	2,298	3,099
서울	1	25	2		3	102	3	692	828
부산	1	16		2	3	18	3	192	235
대구	1	9		1	2	18	3	114	148
인천	1	11	1	3	5	14	2	95	132
광주	1	5		1	11	4	4	65	91
대전	1	5		1	5	31	4	92	139
울산	1	5		1	2	3	1	32	45
세종	1	1				3	1	17	23
경기	1	37	3	29	10	70	6	495	651
강원	1	18		5	4	3		47	78
충북	1	14			2	10	4	55	86
충남	1	17		3	2	23	10	65	121
전북	1	14			4	24	4	75	122
전남	1	23			2	3	4	58	91
경북	1	24		1	2	19	5	71	123
경남	1	20			6	8	4	100	139
제주	1	2		1	3	7	1	33	48

자료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5년 상반기 전국 정신건강관련기관현황집」.

3) 교육부의 지역별 청소년 관련 기관 현황

■ (상담) Wee(위) 프로젝트

- Wee 프로젝트는 “We(우리들) + education(교육)/emotion(감성)”의 합성어로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통 합지원서비스망’이라 할 수 있음
 - 지원대상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주 대상은 위기학생이며, 단위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 안전망 체계
- 학교에는 Wee 클래스(Class), 교육지원청에는 Wee 센터(Center), 교육청에는 Wee 스쿨(School), 가정형 위(Wee)센터, 병원형 위(Wee)센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전담지원 기관, 학교폭력 가해학생특별교육이수기관 117신고센터 등이 개설되어 있음

[표 3-12] 전국 Wee 관련 기관 설치 현황(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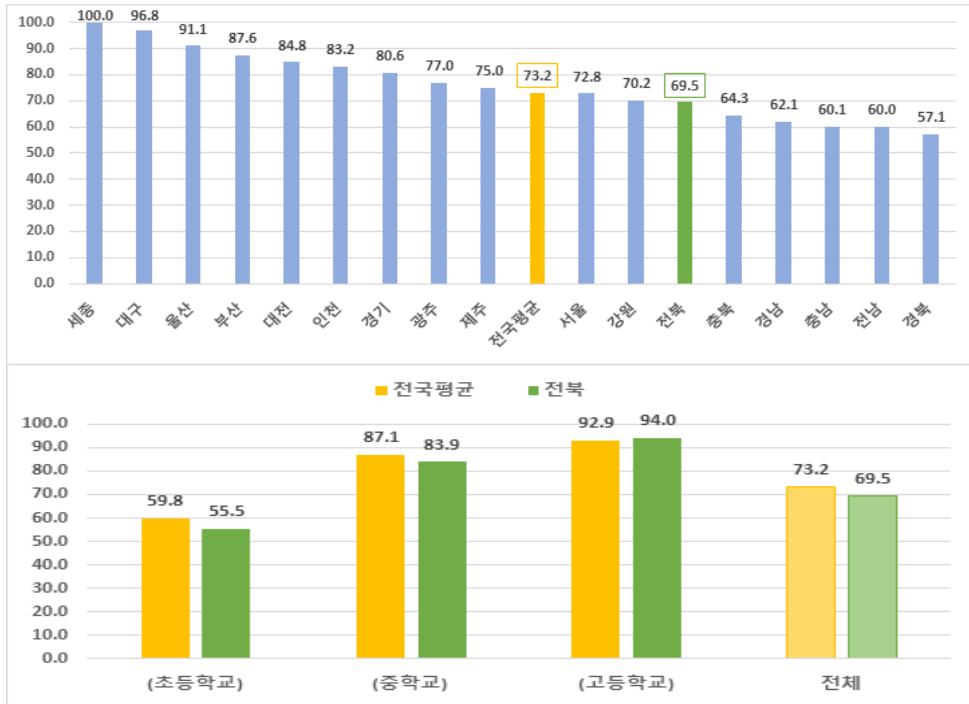
지역	소계	클래스	센터	(가정형) 센터	스쿨
계	9,361	9,114	215	20	12
서울	1,035	1,009	26	-	-
부산	570	565	5	-	-
대구	471	457	12	1	1
인천	472	458	11	3	-
광주	255	248	4	1	2
대전	270	264	4	2	-
울산	230	225	3	1	1
세종	108	103	2	2	1
경기	2,196	2,168	25	2	1
강원	470	450	17	2	1
충북	326	314	10	2	-
충남	473	456	15	1	1
전북	580	562	17	1	-
전남	543	518	22	2	1
경북	566	544	22	-	-
경남	648	627	18	-	3
제주	148	146	2	-	-

자료 : 위(Wee) 프로젝트, 우리가 희망이다. 홈페이지(<https://www.wee.go.kr/home/main/main.do>)

- 한편, 학생과 교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마음 편히 상담할 수 있는 시도별 Wee 클래스 설치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73.2%로 나타난 가운데 전북의 경우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69.5% 수준으로 나타남
 - 세종시가 100%의 구축률을 보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구(96.8%), 울산(91.1%), 부산(87.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경북은 57.1%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전북의 위클래스 구축률을 학교급별로 전국 평균과 비교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고등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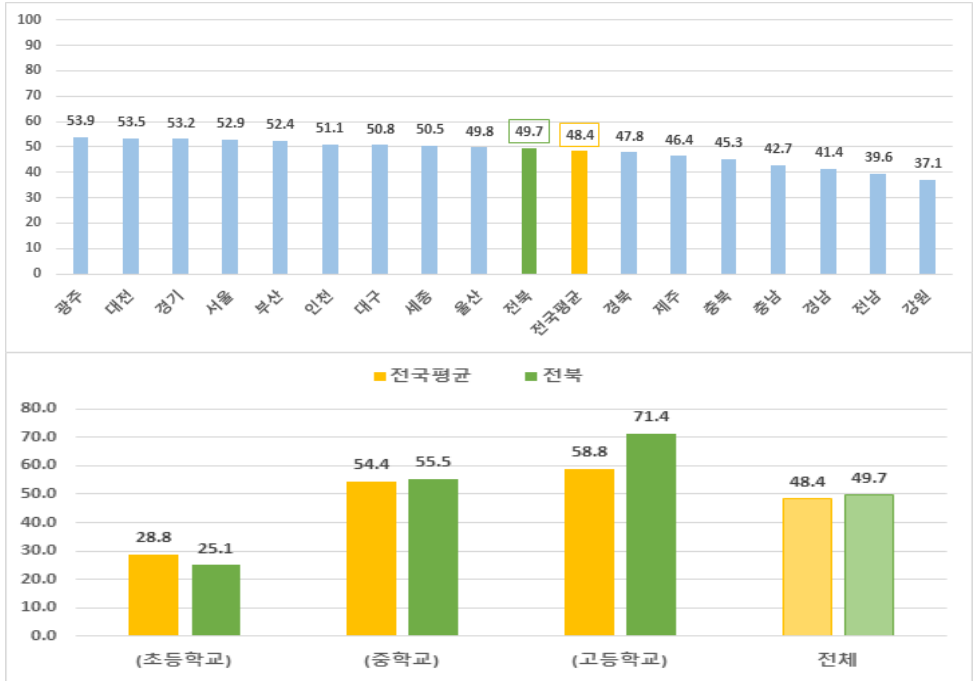


자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보도자료(2023.10.24.).

[그림 3-10] 전국 시도별 위클래스 구축률(2023)

- 공간 인프라 외에 인적 인프라 구축 현황을 보기 위해 전국 시도별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48.4%로 나타난 가운데 전북의 경우 전국 평균을 조금 넘는 49.7%의 배치율을 보였음
 - 광주시가 53.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전(53.5%), 경기(53.2%), 서울(52.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강원도의 경우 37.1%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순회교사 제외), 전북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배치율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음



자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 보도자료(2024.10.22.).

[그림 3-11] 전국 시도별 전문상담교사 배치율(2024)

4) 법무부 청소년 관련 기관 현황

■ (청소년 보호·자립) 청소년 자립 생활관 현황

- 청소년자립생활관은 만 12세~22세 이하의 청소년 중 무의탁 및 결손가정 소년원 출원생, 보호소년과 소년 보호처분 및 관찰대상자 중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자립 의지를 갖고 입소를 희망한 만 12세~22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복지적 배려를 통해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보금자리 시설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사회정착지원)에 의해 전국에 총 8개소를 설치·운영함
 - 강원1, 전북1, 경기2, 대전1, 대구1, 광주1, 부산1

3. 전북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실태 및 정책적 수요 분석

1) 심층면접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전북 도내 성장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사업 현황, 네트워크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 실태, 지역별 여건 및 한계점 등을 진단하고, 청소년 성장지원 및 청소년정책 전반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도청-교육청 간 협력·추진의 주요 영역·역할 구분과 쟁점 사항, 연계·협력 추진 시 필요 사항, 각 기관별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수요를 파악하고자 했음

■ 참여대상자 및 조사 방법

- 전북 도내 청소년기관 유형별 현장 종사자(활동·상담/복지·보호 등), 지역 내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중간지원조직(협업체) 운영(경험)자, 지자체 공무원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지역 청소년정책 연구자 등 청소년 성장지원과 청소년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선정·섭외함
- 반구조화된 면접질문지는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인터뷰는 개별 및 집단(2~3명)면접과 서면조사를 병행 진행함. 대면 면접은 평균 약 2시간 정도였으며, 서면 조사는 약 40~50분간 소요됨. 조사 기간은 9월 약 한 달 정도 소요됨
- 서면조사는 주로 청소년기관 유형별 지역 현장실무자(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대상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실시함

■ 자료 분석 방법 및 조사 내용

- 인터뷰 내용 분석은 반구조화된 면접질문지에 대한 응답 내용들을 주제별로 범주화하고, 범주화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위계화하는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함
- 면접 내용은 크게 3개 영역으로 구성됨. 첫째, 청소년 성장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필

요성 정도, 현재 추진 중인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 현황,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간 네트워크 운영 현황과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진단함. 둘째, 청소년 성장지원 및 청소년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적 수요 파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지역, 성별, 기관명, 근무경력 등)으로 구성함

[표 3-13]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관련 면접 내용

영역	세부내용
성장지원 사업 운영 및 실태	- 성장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활성화 정도 -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된 이유 혹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유무 -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 기관 -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성 및 협의체의 단위 -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대상과 분야 - 성장지원 네트워크 또는 협의체 도입 필요한 타 지역 사례 - 성장지원 네트워크 또는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필요 조건과 지원, 전복도 역할
청소년(성장지원) 정책적 수요	- 청소년들의 주요 이슈 - 청소년들의 복합적인 정책 수요 - 보다 중요해진 청소년정책 영역 - 청소년 관련 환경 여건 진단(부족한 부분,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한 부분) - 타 지자체 관련 사업과 조례 중 도입이 필요한 사례 - 지역 특성화 사업
응답자 특성	- 성별 - 기관명 - 소재 지역 - 총 근무경력

■ 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현황

- 면접조사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는 총 20명이며, 지역별로는 전주지역이 7명으로 가장 많고, 도시권이 총 13명 참여함. 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활동(수련관, 문화의집, 센터, 공간 등) 기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상담복지·보호(상담복지센터, 쉼터, 복지기관 등), 학교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함. 지역 현장에 있는 조사 참여자들은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정도를 평균적으로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25%는 활성화, 30% 정도는 네트워크가 비활성화 되어 있다고 인식함
- 중간지원조직 현황은 주로 시 단위 지역 중심으로 청소년기관(단체)협의체, 청소년수련 시설협의체, 교육통합지원센터 등 느슨한 연합체에서부터 공공지원 조직까지 혼재되어 있으며, 군 단위의 지역은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받쳐줄 전담 중간지원조직이 부재함. 특히, 협의체 등의 명칭과 기구는 있으나 역할 표준화 부족(기획, 조정, 성과관리, 자

원배치 기능 모호 등), 학교-지자체-활동-상담복지 등 다중 복합 연계의 한계가 낮은 활성화 지역에서 두드러짐

- 세부 사업 현황을 보면, 진로체험 활성화, 박람회, 청소년다이어움, 창업·메이커스페이스 연계 지원의 이론·직업 탐색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외 문화의 거리, 어울림 및 별별다방, 지역축제 등의 문화·체육·여가 분야, 쉼터 아웃리치, 사례관리 네트워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 상담·보호·위기개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표 3-14] 면접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Nb	지역	기관유형	분야	성별	근무기간	성장지원사업		세부 관련 사업
						네트워크 활성화	중간지원 조직	
1	익산	쉼터	복지·보호	여	7년	보통	청소년기관단체 협의회	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 부모 대상 성교육
2	익산	공간	활동	남	18년	활성화	청소년기관단체 협의회	진로체험활성화사업, 청소년문화의거리, 놀 봄사업
3	전주	센터	활동	남	30년	활성화	청소년단체협의회 사례관리네트워크 시설협의회 등	민주시민교육활성화 포럼, 대선모의투표
4	전주	쉼터	복지·보호	남	38년	활성화	민관연합, 시설연합	연합 아웃리치, 시설연합 아웃리치
5	익산	수련관	활동	남	8년	활성화	청소년기관단 체협의회	청소년다이어움, 농촌지역청소년활동활성화 지원사업,
6	익산	문화의집	활동	남	26년	활성화	청소년기관단 체협의회	학교안팎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7	남원	상담복지센터	상담복지	남	22년	비활성화	부재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상담·선도프로그램(사 랑의교실) 등
8	완주	서경자 센터	활동	여	15년	보통이하	부재	청소년글방, 청소년어울림마당, 하룻길 응원 프로젝트
9	고창	센터	활동	남	15년	보통	1388청소년지원단	청소년문화축제, 청소년어울림마당, 꽃창 흥 학동 등
10	전주	수련관	활동	남		보통	청소년수련시설협의회 청소년시설협의회	별별마당, 고고고 프로젝트, 드론축구대회
11	전주	센터	활동	여	10년	보통이하	부재	박람회 등
12	군산	공간	활동	남	27년	비활성화	부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신나는 마을네트워크
13	완주	전문가	활동	남	10년	보통이하	부재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행사
14	전주	센터	활동	여	7년	보통이하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	교육감배 유소년 드론축구대회, 견과류

Nb	지역	기관유형	분야	성별	근무기간	성장지원사업		세부 관련 사업
						네트워크 활성화	중간지원 조직	
15	군산	문화의집	활동	여	18년	보통	청소년기관 협의체	희망마을네트워크, 사회복지협의체, SW미래 채움센터
16	전주	복지기관	복지/돌봄	남	14년	보통	협의체 차원	꿈성장지원 드림 브릿지
17	순창	학교	교육과정	여	20년	보통	부재	안전, 인권, 폭력 등 관련 프로그램
18	전주	학교	교육과정	여	15년	보통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	학교 폭력 관련 프로그램
19	정읍	학교	교육과정	남	23년	보통	부재	안전, 폭력 등 관련 프로그램
20	순창	학교	교육과정	여	18년	보통	부재	안전, 인권, 가정폭력 등 관련 프로그램

2) 심층면접조사의 결과분석

- 청소년 성장지원과 청소년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 대상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표 3-15] 심층면접조사의 주요 분석 결과

영역	상위주제	하위 주제
청소년의 주요 이슈 및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실태	최근 지역 청소년의 주요 이슈(문제)	청소년의 심리·정신 건강 문제 증가 및 청소년 전용 공간 부족
		성장 네트워크 내 청소년 심리·정신 관련 전문기관 참여 필요성 증가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환경 여건	청소년기관의 물적·인적 자원 부족
		청소년 문화 환경의 지역 격차 발생
		참여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부족
	지역사회에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필요성	청소년 발달단계별 간소한 성장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 필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우선지원 대상과 분야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활성화 및 비활성화 이유	행정·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된 거버넌스 구축으로 활성화
		청소년 성장지원 인프라 및 네트워크 부족
	성장지원	주로 청소년기관·시설 간 협의체 운영으로 성장지원의 폭넓은 협의체 미흡

영역	상위주제	하위 주제
	네트워크(협업체)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 현황	중간지원조직 부재로 대체 가능한 협업체 구성 및 운영 시급
		“민·관의 공동”주도의 운영 주체 필요
		지자체 규모와 지역 특성에 따라 운영 단위 선호 상이
청소년 성장지원의 정책적 수요	성장지원 정책 추진의 필수 요건 및 개선·지원 필요 부분	청소년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 필요
		네트워크 전담인력 지원 및 종사자(네트워크)의 전문역량 강화 필요
		청소년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청소년 참여 보장 필요
	전북도(광역센터)의 역할 강화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기반 마련
		청소년 성장 네트워크 지원 및 운영을 위한 광역단위 협업체 운영 필요
		성장 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력(물적·인적자원) 지원
	희망하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추진사업	타 지자체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 사례 도입 필요
		청소년을 위한 통합 지원 네트워크 운영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필요
		청소년 활동가(전문가) 발굴·양성
	향후 청소년 정책 발전의 중점 영역	인구감소지역 중심의 청소년 지역 정착 도모
		청소년의 정신건강(심리·정서) 지원강화
		미래 첨단 기술 및 미래 사회 대응의 역량 강화
	전북 청소년을 위한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타 지자체의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사례
		광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성장지원 사업 확대 필요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사례

(가) 청소년의 주요 이슈 및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협업체) 운영 실태

■ 최근 지역 청소년의 주요 이슈(문제)

- (청소년의 심리·정신 건강 문제 증가 및 청소년 전용공간 부족) 청소년 기관·시설 현장에서 최근 청소년의 심리·정신 건강 문제 증가가 심각함을 토로함. 특히 청소년 우울·불안, 자살 등의 심리·정서 문제(정신과 약물 복용 및 심리적 어려움 호소), 중독 문제(특히, 도박)가 심각함

- 한편,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 공간이 부족이 지속적으로 지적됨.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농촌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여가·문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고 시설 내 실질적인 청소년 이용 공간이 부족하며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및 AI 관련 기자재 및 공간이 미흡한 상황임
- (성장 네트워크 내 청소년 심리·정신 관련 전문기관 참여 필요성 증가) 최근 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의 네트워크 참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아울러 청소년 성장과 관련한 참여 주체의 범위를 의료계·법조계·문화예술계 등으로 확대하고,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 해결에 필요한 분야의 기관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 있음. 또한, 공공 기관·단체뿐 아니라 양육자회·마을교육공동체 등 민간단체, 기업, 관련 전문가의 참여도 필수적임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환경 여건

- (청소년기관의 물적·인적 자원 부족) 지역사회 청소년 환경과 관련해 예산 부족과 불균형이 지적되고 있음. 예컨대 익산시의 경우는 교육발전특구 예산에 비해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비가 현저히 낮고, 지역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예산 이원화로 청소년 성장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고 네트워크 운영 사업 추진도 어려운 실정임. 또한, 직영 청소년 기관·시설은 청소년 외부활동 지원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 항목 체계가 맞지 않아 사업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음
- 인적자원 측면에서도 대다수 지역의 청소년기관이 상근 인력이 부족해, 청소년 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역량 강화가 필요함에도 기획·운영·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지속되어 결과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움. 아울러 수준 높은 자원봉사자 확보의 필요성과 더불어 지역 내 인적자원 부족이 여전히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청소년 문화 환경의 지역 격차 발생)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여건과 관련해 문화 환경의 지역 격차가 지적됨. 규모가 작은 인구소멸 지역일수록 청소년 성장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문화공간과 기자재가 부족하며,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AI) 등 최첨단 문화를 쉽게 경험하는 데 어려움이 큼. 특히, 농촌 외곽지역 청소년은 도시권에 비해 문화·진로·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참여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부족)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한 어려운 환경 요인으로 일부 참여 청소년의 낮은 참여 동기와 사회적 인식 부족이 지적됨. 기초생활수급 가정이나 위기군청소년 가운데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변화·성장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례가 존재하며, 일반 청소년 중에서도 지원 제공 이후에도 변화 의지가 미약한 경우가 많음. 또한 일부 청소년에게서 사회적·물질적 지원에 대한 의존 경향이 확인되고 있음

■ 지역사회에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 발달단계별 건강한 성장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 필요) 학교와 가정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청소년의 진로, 복지, 문화, 심리·정서 영역을 지역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써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성을 학습하고, 개인의 건강한 성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는,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음
-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한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은 도시-농촌 간 활동 기회 불균형을 완화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해 청소년 사업의 중복·누락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특히, 인구감소 지역일수록 본 사업의 도입이 필수적으로 생각함. 또한, 가정환경·경제적 여건에 따른 지원 격차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치 위험이 크므로 본 사업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함
-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우선지원 대상과 분야) 우선 지원 대상은 보편주의 관점에서의 청소년 전원(13~18세)을 기본으로 하되, 일반 청소년 중 사각지대 청소년, 위기·취약 청소년(학교부적응·대안교육 위탁기관 재학·보호관찰·농촌 외곽 거주·학교 밖 청소년 등)까지 다양한 상황의 청소년 전체를 포괄해야 함
- 우선지원 분야로는 ‘진로·적성·자립 역량 강화’(단순 직업 선택을 넘어 자기 주도 성장·자립·지역사회 기여를 견인하는 핵심축), ‘문화예술’(도시-농촌 간 문화접근 격차

해소), ‘심리·정서’(학업 중단·가출·경제 곤란·보호시설 거주 등 맞춤형 안전망·치유 지원 시급), ‘동아리·자치·사회참여’(지역과의 관계·참여 부족으로 인한 이탈 경향 완화, 청소년 주도성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현장 활동가(전문가) 중심 지원)를 중점 지원 필요. 아울러 교육부 현 체제 수준을 넘어서는 ‘실질적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확대와 사회적 배려 강화가 병행되어야 함

■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활성화 및 비활성화 이유

- (행정·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된 거버넌스 구축으로 활성화) 전북 도내에서는 익산시가 가장 활발한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익산시의 경우, 시청-교육지원청-청소년기관 간 거버넌스인 ‘청소년기관단체협의회’를 구축하여, 공동목표 합의와 기관별 전문성 존중, 정례회의·교류 활동을 통해 신뢰 기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음. 협의회를 축으로 청소년정책의 변화와 활성화를 이끌었으며, 개별 인물 의존이 아닌 ‘기관·단체 중심’ 운영으로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의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높였음
- 또한, 익산시는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2021~2025)’을 토대로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청 여성청소년과·시의회와의 정기 간담·협업을 통해 행정적 신뢰와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함
- 한편, 그 외 지역에서는 주로 청소년기관간의 협의체만을 운영하고 있어서 지역사회 내 통합적인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청소년 성장지원 인프라 및 네트워크 부족)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이 비활성화된 이유로 ‘인프라 부족’이 지적되고 있음. 전담 조직과 공동 예산이 부재하고, 운영시스템도 미비하여 다양한 자원을 충분히 결집·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인력 측면에서는 단기사업·순환 배치로 지속성이 약하며, 지역 내 다수 청소년 유관기관이 공무원조직 중심으로 운영되어 창의성보다 안정성이 우선되고 행정의 큰 틀을 벗어나기 어려운 점이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함
- 아울러 기관별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지만 네트워크 기반 연계가 부족하고, 형식적 네트워크에 머물러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력 관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협의체)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 현황

- (주로 청소년기관·시설 간 협의체 운영으로 성장지원의 폭넓은 협의체 미흡)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익산시의 경우 중간지원조직으로 ‘청소년기관단체협의회’를 운영하며, 격월로 기관장·중간관리자 회의를 통해 참여단체별 사업을 공유하고 공동사업(예: 익산 청소년 북부권 활성화 사업 등)을 논의·추진하고 있음. 한편, 그 외 시군에서는 청소년 성장지원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운영은 부재하고 단지 청소년기관·시설간 기존 협의체가 운영·추진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기관·시설 이외 지자체, 교육(지원)청 등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주요 핵심 주체들이 부재한 상황임
- (중간지원조직 부재로 대체 가능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시급) 전주 도내 시군에는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거의 부재하고, 시군 지역에서는 대체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소년시설 및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네트워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사업 성격에 따라 지자체가 중간지원조직 역할(지역행사 참여기관 회의 주관 등)을 직접 수행하기도 함. 이에 전북 도내 시군별 혹은 생활권역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혹은 전담 인력 등의 조성이 시급함
- (‘민·관 공동’ 주도의 운영 주체 필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주체로 청소년 기관·단체 등의 “민 주도” 운영을 나타냄. 이 경우 청소년기관, 단체가 운영을 주도하되, 공공(행정)의 지원(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 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반면에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의 “관 주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주도하되 민간의 청소년기관단체와 교육기관들이 협력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끌어가는 형식, 예산도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공동분담해야한다고 봄
-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처럼 “민·관 공동 주도” 운영도 바람직한데 민은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활동 경험이 풍부하므로 청소년 관리와 소통은 민에서 담당하고, 관은 모임 주도와 예산, 행정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고 봄. 익산시의 경우 청소년기관·단체협의회(민간)는 현장에서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을 기획·실행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지자체와 교육청(관)은 정책적·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제공하며 제도적 연속성을 보장함

- (지자체 규모와 지역 특성에 따른 운영 단위 선호 상이) 대부분의 시 단위의 지자체는 시·군·구 단위의 성장지원 네트워크(협의체) 운영을 필요로 하고, 군 단위의 지자체는 읍·면·동 단위의 성장지원 네트워크(협의체) 운영을 필요함. 더 나아가 성장지원 네트워크(협의체)의 단위가 작을수록 실효성과 사업의 효과성 및 연계·협력의 밀착력이 우수하여 마을단위로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도 있었음

(나) 청소년 성장지원의 정책적 수요

■ 성장지원 정책 추진의 필수 요건 및 개선·지원 필요 부분

- (청소년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 필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소년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이 핵심적임.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성장지원의 방향과 우선 분야를 명확히 하고, 중장기 비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음
-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초기단계에는 공동 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참여자 간 관계 구축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 또한 기관장 회와 실무자 회와 청소년 참여 회의로 이어지는 단계별 소통 체계를 정례화하여, 청소년 관점·생활세계 중심의 실질적 네트워크를 구현해야 함
- 아울러 정보 공유·사례관리·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공동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적 거버넌스가 작동하려면 참여기관의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과 적극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
- (네트워크 전담인력 지원 및 종사자/네트워크커의 전문역량 강화 필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필요함. 참여기관 종사자(네트워크커)의 전문 역량 강화도 요구됨
- 이를 위해 네트워크 전담인력을 양성·채용하여, 시·군단위에 배치하고, 협의체 운영과 공동사업 등 연계 활동을 상시 추진해 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이러한 전담 인력 체계는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협의체 논의가 장기적으로 단절되는 문제를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청소년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청소년 참여 보장 필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함. 청소년을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을 지닌 시민으로 보고, 자신과 관련된 일에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주체임을 인정해야 함
- 이를 위해 청소년을 ‘지원받는 대상’에 머물게 하지 말고, 기획·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구조화해야 함(예: 익산시청소년연합회·청소년의회 정책 제안 → 협의체 검토·추진). 아울러 청소년 시민교육의 확대와 함께 다양성·존중·배려에 기반한 교육, 이주배경 청소년을 포함하는 포용적 프로그램, 청소년 시민 정체성과 전북도민 자긍심을 키우는 시민교육 등이 필요함. 더 나아가 지자체·교육청·운영기관이 협력하여 청소년 대안교육의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함

■ 전북도(광역센터)의 역할 강화

-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기반 마련) ‘전북도(광역센터)’는 시·군 단위의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이 분절되지 않도록 법·제도 기반을 우선 정비해야 함.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성장지원 조례를 제정 혹은 기존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청소년정책 중장기 기본/종합계획 수립과 평가체계를 마련해 청소년정책 담당자 교체 시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함. 아울러 법적·제도적으로 청소년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참여를 의무화하고, 정기회의 운영을 지원해야 함
- (청소년 성장 네트워크 지원·운영을 위한 광역 단위 협의체 운영) 전북자치도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광역 단위에서 네트워크를 지원·운영할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함(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처럼 사무국장·간사 배치)
- 또한, 교육청·지자체 예산을 총괄·조정하는 광역 시스템과 광역 단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청소년 성장지원 전용 기금을 신설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야 함. 아울러 도 단위 협의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각 시·군 네트워크 활동가(청소년지도자 등)를 지원하고, 청소년활동·상담·복지·보호·교육을 아우르는 포괄적 관계망을 구축해 대화와 협력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함
- (성장 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력/물적·인적 자원 지원)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하려면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임. 도내 14개 시·군에 전담인력(청소년 전문가) 1명씩을 고용·지원하고,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인력·회의 공간 등 행정지원을 제공해야 함. 또한, 공모사업은 연 1회 일몰형이 아니라, 최소 2년 이상(씨 뿌리고 거둘 시간을 보장) 전담 인력과 사업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함

■ 희망하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추진사업

- (타 지자체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 사례 도입 필요) 청소년 성장지원의 정책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 청소년 당사자와 지역자원, 지자체, 교육청, 청소년기관, 시민단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사례로 부천시 ‘유스거버넌스 네트워크’, 광주 ‘교육협치회의’ 및 학생 중심의 ‘교육거버넌스 체계’, 경남 진해구의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청소년 성장지원 e음 협의체’ 등을 참고하여 전북도도 적용해 볼 필요 있음
- 중간지원조직 운영 사례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청소년·교육 관련 사업비를 통합 관리하며 행정조직이 아닌 정책의 실행·조정 기구로 기능하는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이나 지역 내 청소년기관을 포괄적 네트워크로 연결해 지원하는 ‘고양시청소년재단’ 사례 등을 분석하여 적용해 볼 필요 있음
-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네트워크 운영) 모든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 네트워크 운영이 필요함. 특히, 청소년 심리·정서 회복 통합지원망을 구축하여, 향후 익산에 건립될 국립 호남권 청소년다임센터와 연계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Wee센터-지역 의료기관을 하나의 회복지원 체계로 연결해야 함. 이 네트워크는 위기청소년뿐 아니라 대안 교육·보호관찰 청소년까지 포괄하는 통합 치유·재활 모델로서 지역 차원의 시범 운영이 요구됨
- 또한, 위기청소년 통합 지원 네트워크로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와 지역 카페·서점·체험장 등 민간 가게가 협약을 맺고, 단기 직무 체험·직업교육·멘토링을 제공해 단순 일회성 봉사가 아닌 현장형 자립 역량 강화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함
- 이와 함께 청소년 주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청소년이 목소리를 내고 대변할 수 있는 전용 소통 플랫폼을 조성·지원하고, 이를 위해 민주시민 교육, 다양한 견학·체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청소년 시민교육을 확대함. 나아가 지역의 정책 제안 체계를 통합·연계한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을 구축하여, 제안을 교육·문화·복지 등 카테고리별로 분류해 적정 주체(교육청/지자체)에 자동 이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끝으로 청소년 통합 지원 네트워크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청소년 활동가(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임
-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필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위해 공동사업 추진이 필요함. 현재 지역별 청소년 축제는 소규모 예산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효과와 파급력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이에 대형(매머드급) 청소년 축제를 공동으로 기획·운영해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지역사회 박람회를 개최해 다양한 활동·체험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취미·적성·진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네트워크 공동사업으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센터’ 등의 설치·운영을 추진하여, 청소년이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청소년 활동가·전문가 발굴·양성)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의 핵심이지만 그간 소홀했던 과제가 ‘청소년 활동가(전문가) 양성’으로 지적됨. 청소년과의 의사소통 방식, 상담 기술 등 실무 교육부터 선진지 견학에 이르기까지, 활동가 양성 및 전문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지적함

■ 향후 청소년 정책 발전의 중점영역

- (인구감소지역 중심의 청소년 지역 정착 도모) 향후 전북 청소년정책의 중점영역으로 지역 정착을 촉진하는 청소년활동과 사업에 주목해야 함.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문화 활동(동아리, 봉사 등)과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지역에서 ‘배우고·일하고·머무를 수 있는’ 정착 기반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포함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진로 탐색 및 체험 기회를 확충해야 함. 아울러 다문화 청소년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학습 부진 등 연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가정 방문 한국어 교사 파견, 학교 내

맞춤형 교육,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 확대도 필요함

- (청소년의 정신건강(심리·정서) 지원강화) 지속적으로 청소년 도박(온라인 불법), 약물남용, 우울·불안, 자살 그리고 중독(인터넷·스마트폰 등) 등 정신건강 문제와 위험이 누적·복합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광역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함
- 이에 따라 향후 익산에 건립되는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2027년 개관 목표)를 거점으로, 전북도 단위 치유·재활·재적응 통합 네트워크(정신의학적 진료-상담-대안교육-가족지원-지역연계 사후관리)를 구축될 필요 있음
- (미래 첨단 기술 및 미래 사회 대응의 역량 강화) 향후 청소년 정책의 중점 영역으로 ‘미래사회 적응에 필요한 역량’ 강화가 필요함. AI, 빅데이터, 코딩 등 디지털 교육, 전북의 농생명·스마트농업 등 특화 산업과 연계한 미래사회에 필요한 기술 및 역량 교육 확대 필요함. 또한,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와 직업 환경에 대비해, 청소년이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와 실질적인 직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학교-지역-산업을 잇는 진로탐색·현장실습·프로젝트형 학습 등 실질적 직업 역량 지원도 강화가 필요함

■ 전북 청소년을 위한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 (타 지자체의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 사례들) 전북도에 적용 가능할 타 지자체의 청소년 성장지원 사례로, 청소년 생활·문화 지원 측면에서는 빈집·폐교·농협 창고를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문화 활동 공간으로 활용한 기장군·홍성군 사례, 청소년 문화·체험 바우처를 운영하는 곡성군·청양군 사례 등이 있음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망 관련해서는 곡성군의 Wee센터-지역병원 연계 모델을 참고하여, 2027년 익산 개관 예정인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를 거점으로 도 단위 상담·의료·복지 통합망을 구축이 필요함. 특히, 보호관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청소년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계·지원하는 광역 위기 지원 모델 마련이 필요함. 또한, 거창군·옥천군·보은군의 청소년 바우처·카드 지원과 ‘청소년 꿈기움 바우처’ 운영, 여수시의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등 바우처 기반 지원 사례 도입이 필요함
- (광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성장지원 사업 확대 필요) 전북특별자치

도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특성화 방향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략적 확대 활용이 필요함. 청소년시설 구축, 디지털 장비 확충, 초기 프로그램 운영, 지방소멸 대응형 청소년 공간 지원 등에 기금을 일부 배분하여, 농촌·소도시 권역에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과 생활 인프라(스터디카페, 메이커스페이스, 작은도서관 등)를 설치·운영할 필요 있음. 이를 통해 지역 내 학습·여가·창작(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고 청소년의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 있음

-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 전용 공간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전북 청소년 디지털 진로·직업센터, 청소년 전용 체육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테마형 청소년 공간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선택해 미래지향적 체험 프로그램 발굴과 자체 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특화 공간’을 마련해야 함
- 아울러 폐교·빈 상가·유허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해 청소년 전용 스터디카페·메이커스페이스·창업랩 등으로 조성하여 안정적인 생활 거점을 제공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핵심 인프라로 활용해야 함
- 인적자원 측면에서는 청소년지도자·활동가 지원사업이 필요함. 우수 인력을 청소년기관뿐 아니라 공공도서관 등 관련 기관에도 배치해 사업과 활동을 활성화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전원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또한, 청소년을 단순 수혜자가 아닌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자로 자리매김 시켜야 함. 빈집 관리, 마을축제 기획, 농촌관광 활성화 등 지역 현안을 청소년이 직접 기획·실행하는 ‘청소년 지역 리빙랩 프로젝트’ 지원, 이주배경 청소년과의 교류·적응을 돕는 평화캠프(유대감 형성 프로그램 포함), 청소년 자치예산제·사회참여 프로젝트 지원, 청소년 정책 포럼의 정례화 등 참여·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도 필요함
- (그 외 전북도 청소년 정책 발전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 전북자치도의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 지원 중·장기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다수 지적함. 즉,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5년·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특성에 맞게 실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하고,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를 통해 협력적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야 함.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소년 성

장지원 전용 재원(예산) 신설과 예산 통합 시스템을 도입하고, 광역 차원의 전용 기금 조성 및 곡성군미래교육재단과 같은 중간지원조직 모델의 광역 단위 확산도 요구됨

- 또한, 익산시 ‘다꿈’과 같이 소규모이면서 접근성 높은 청소년 전용 자치 공간을 확대하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무상교통) 등 다각적인 통합지원을 병행해야 함. 마지막으로 지역 청소년 지원망을 형성·유지·활성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가의 양성·배치·취우개선 등을 포함하는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함
-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안팎의 진로 탐색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동아리·자치활동 지원 사업과 동아리 강사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함. 더불어 청소년 의회 운영과 참여예산의 정례화 등 참여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청소년 주권 시대에 맞는 정치 영역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함. 끝으로 체계적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가 필요함

4. 요약 및 시사점

1) 전북 청소년 인구특성 및 지역 여건 현황의 요약 및 시사점

■ 전북 청소년 인구 현황·특성에 대한 시사점

-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 감소) 전북의 청소년 인구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현재와 같은 감소 추세라면 2040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율(-52.5%)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2025년 기준 전북 청소년(19~24세) 인구비는 총인구의 15.0%(259,010명)로 도민 100명 중 15명임. 9~18세로 좁혀서 산출하면 총인구의 9.2%에 불과함
- 전북의 청소년 인구는 주요 도시권(전주/군산/익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도농권과 농촌권의 청소년 인구의 감소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지속적인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초등학교 인구의 감소가 가장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청소년 인구의 유출과 감소는 사회현상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전북지역 내 청소년 성장과 관련한 정책적 요인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임. 이는 현재의 지역 내 청소년 지원 정책의 보완과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지역별 여건·자원 현황에 대한 시사점

-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지역자원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과 청소년 상담·복지 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여성가족부 설치 기준에 따라 각 시군에 최소 1개소씩은 설치·운영 중임
- 그러나 청소년의 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정서·행동문제 특성에 맞춘 전문적·체계적·종합적인 전문 상담과 치료, 재활, 자립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은 부재함. 그리고 학교의 Wee센터 설치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러한 지역자원의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자원(기관)들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자원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2)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전북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실태 및 정책적 수요분석

■ 심층면접조사 결과 요약

-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필요성) 이해관계자들은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이 학교와 가정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진로, 복지, 문화, 심리정서 영역을 지역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청소년 개인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지역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특히,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른 지원 격차 해소 방안으로서 인구감소 및 취약 계층 청소년에게 본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함
- (성장지원사업 추진의 한계점 및 비활성화 요인)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점을 살펴보면, (1)(인프라 및 인력순환의 문제) 전담 조직 및 공동예산 부재와 단기사업 및 잦은 인력순환으로 사업의 지속성이 약함. 특히, 공무원 조직 특성상 창의성보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성장지원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2)(네트워크의 형식화 및 연계 미흡) 기관 간 네트워크가 존재하더라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인 정보 공유, 사례관리, 프로그램 연계 등 진정성 있는 관계 기반의 협력이 부족한 상황. (3)(지역 환경 및 문화 향유의 불균형) 인구소멸 지역과 농촌 외곽지역 중심으로 문화공간, 기자재, 체험 기회 등이 부족하여 도시권과의 격차가 심각함. (3)(예산구조의 이원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예산 분리로 인해 정책적 공백이 발생하고, 특히 외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 항목 불일치 등으로 네트워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반면, 익산시의 경우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공동목표 합의 및 신뢰 기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시청 및 시의회와 정기적인 간담회 및 협업을 통한 정책적 일관성과 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함. 그리고 민간 협의회 주도의 공모사업을 통해 시 외곽 청소년활동 활성화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성장지원 사업의 우선지원 대상과 분야) 이해관계자들은 지원 대상을 보편주의적 관점(모든 청소년)에 두되, 일반청소년 중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과 학교 부적응, 보호관찰 등 위기·취약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강조함. 우선지원 분야로는 청소년의 주도적 성장과 지역사회 기여를 실현할 수 있는 진로·적성 및 자립 역량 강화

분야와 증가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중독, 도박, 약물 등)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치유·재활 네트워크 구축의 시급함을 나타냄. 마지막으로 도시와 농촌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균등한 문화·예술 기회 제공을 필요로 함. 앞으로의 중점 영역으로는 미래 역량 강화(AI, 코딩) 및 다문화 사회 이해 증진이 새롭게 부각되었으며, 청소년을 단순 수혜자가 아닌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주도성 강화 활동(지역 리빙랩, 정책 제안 등)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성장지원 네트워크·협의체 운영에 대한 주요 의견) 성장지원 네트워크·협의체의 이상적인 구조로 “민 주도 + 관 지원” 또는 “민·관 공동 주도 운영”을 꼽았고, 네트워크·협의체 단위는 마을 단위부터 지자체 규모에 따라 읍·면·동 및 시·군·구 단위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협의체 활성화 조건 및 추진 희망 사업) 먼저, 성장지원 네트워크·협의체 활성화 필요조건으로 시민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인식 변화, 성장지원의 방향 설정을 위한 참여기관 간 공동목표 설정·확립, 참여 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 구조, 종사자(네트워크)의 전문역량, 그리고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실행 주체화 등으로 나타남
-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한 조건으로는 기관 간 중복사업 조정 및 협력체계 강화, 네트워크 전담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가 제시됨. 이때 전북자치도의 역할로는 청소년 성장지원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법률적·제도적 기반 마련, 청소년 네트워크를 운영·지원할 수 있는 광역 단위 협의체 구축·운영, 그리고 광역 및 시군 단위 네트워크 사업 추진을 위한 물적·인적자원에 대한 행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협의체를 통해 추진 희망 사업으로 매머드급 지역 청소년 축제, 청소년 주도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할 전문 청소년 활동가 양성 등이 나타남
- (청소년의 최근 주요 이슈 및 정책 수요) 최근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와 청소년을 위한 공간 부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전문기관 참여가 성장지원 네트워크(협의체) 참여가 특히 중요하며, 나아가 청소년 성장과 관련된 모든 기관 및 단체(민간 영역 포함)의 폭넓은 참여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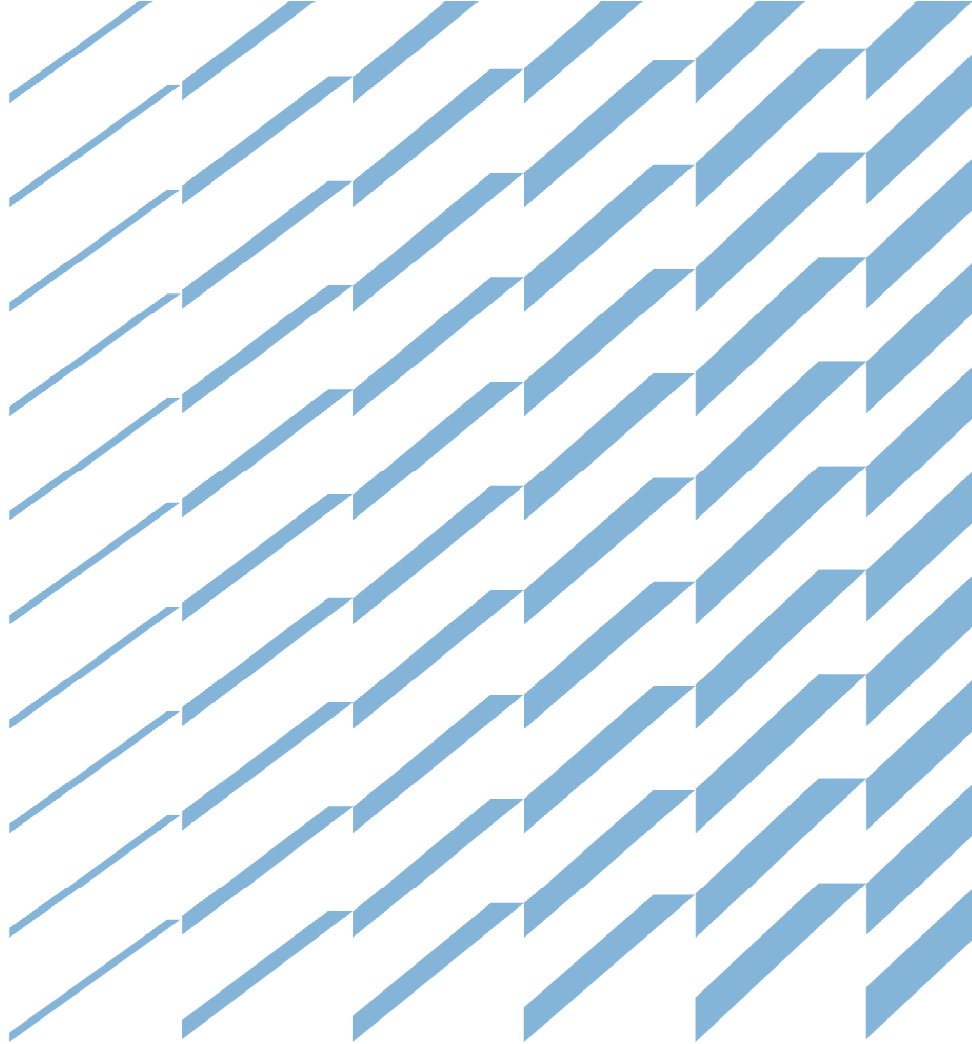
- 현장 의견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청소년 관련 여건은 청소년기관의 전문인력 부족과 문화환경의 지역 격차 확대, 예산의 이원화·불균형으로 인한 네트워크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지적됨. 또한, 일부 청소년의 사회적 의식 및 자립 의지 부족도 지적됨
- 타 지자체의 우수정책 중 전북도에 도입이 필요한 사례로 바우처 기반의 청소년 생활·문화 지원 확대, 위기청소년의 통합지원망 구축이 제안됨.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청소년 공간조성,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배치 확대, 그리고 청소년 리빙랩 프로젝트 등 청소년 주도형 지역문제 해결 사업 등이 제안됨

■ 심층면접조사 결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면접조사 결과, 전북지역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및 제도 기반 강화', '재정 및 예산', '인력 및 인프라'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조적이고 광역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성장지원사업의 거버넌스 및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 (1)(광역단위 통합지원 네트워크·중간지원조직 구축·운영 및 역할 강화 필요) 광역도 차원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전용 기금 관리 및 교육청-지자체 예산 총괄·조정, 시·군 네트워크 지원·조정 등을 위한 전담사무국(간사) 인력을 배치하여 네트워크 운영을 제도화하고 지속성을 확보해야 함. 그리고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예산·조직·평가를 통합 관리하고, 성장지원 사업 담당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활동가 대상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교육 등을 추진해야 함
- (2)(시·군 단위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필요) 시·군 단위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을 위해 전담 상근 네트워크를 최소 1명 배치하고, 청소년 지원 관련 공공·민간 단체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회의 및 공동사업 운영이 필요함. (3)(민·관 거버넌스 운영 주체의 균형)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깊은 '민'간기관·단체가 사업 기획 및 실행의 중심을 맡고, 지자체와 교육청은 정책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상호 신뢰 기반 위에 균형 잡힌 공동 주도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함. 사업평가는 '관'이 아닌 의회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4)(법적·제도적 연속성 확보 필요) 전북도 차원의 '청소년 성장지원기본계획(5년, 10년

단위) 혹은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성장지원사업)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성장지원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장해야 함. (5)(청소년 참여 보장 의무화 및 플랫폼 구축 필요) 청소년의회, 참여 예산제를 정례화하고,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소년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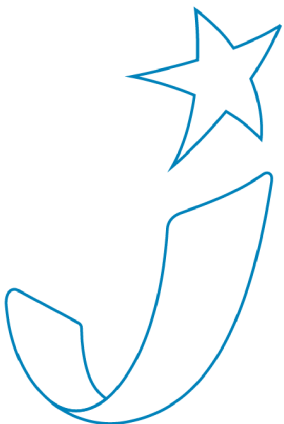
- (청소년 성장지원 전용 자원 마련 및 예산 통합 시스템 구축)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이원화된 청소년 예산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광역 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소년 성장지원 전용 기금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사업 재원을 마련해야 함. 또한 1년 단위의 단기 (공모)사업 대신, 최소 2년 이상 전담 인력 및 사업 예산 지원을 통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와 인력 순환에 따른 단절 방지 및 사업의 안정성 제고 필요
-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 확충 필요) 폐교·빈 상가·유헴 공공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한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농촌 및 소도시에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하고, 여가·문화뿐 아니라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체험공간(기능), 디지털 인프라(메이커스페이스) 및 진로직업센터(AI, 코딩, 푸드테크 등 지역특화) 등을 마련하여 최첨단 문화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필요. 그리고 각 청소년 전용공간에는 청소년 전문활동가 또는 지도자가 배치 필요
- (청소년 지역정착형 지원 정책 강화 필요)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진로-문화-일자리가 연계된 청소년 지역리빙랩, 청소년 사회참여 프로젝트 등 지역문제 해결 중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정착형 지원 정책의 강화 필요



제4장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 전략

1.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적 합의
2.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비전, 정책 방향 및 세부 추진 과제



제4장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 전략

- 본 장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정리함. 이를 토대로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추진 방향과 전략 이행을 뒷받침해 줄 실천 과제, 그리고 실천 과제별 세부 사업들을 제시하였음

1.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적 함의

- 정책적 함의는 전북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의 성장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 및 전북도의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현황 분석, 타 지자체의 청소년 성장지원 우수 사례 분석, 그리고 지역·학계 현장 전문가 대상의 청소년 성장지원 운영 실태와 정책적 수요 분석 내용 등을 종합하여 도출하였음

1)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및 제도적 기반 확립을 통한 추진 동력 확보 필요

- (청소년 성장지원의 개념) ‘청소년 성장지원’이라는 개념과 정책적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네트워크의 영역·범위·기능과 역할이 달라지며, 이 과정에서 기존 청소년정책(사업)과 타 부처·부서별 정책(사업) 간 유사·중복 문제를 조정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음. 또한 청소년 성장지원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정교화하고, 한정된 예산을 전략적으로 집중할 수 있어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정책을 전북자치도 청소년활동지원센터를 광역 허브로 하여 추진되는 체계로 정의하고자 함. 이는 각 시·군에서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건강하고 주체적인 성장을 목표로, 지역 내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연계·협력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형성된 다자간 협력 거버넌스와 실행 체계를 의미함

- 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과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단순한 사업 추진이나 흩어진 사업 묶음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지향점과 로드맵을 명확히 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청소년 성장지원은 단순한 네트워크 운영이나 개별 프로그램 추진을 넘어 '생태계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이를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네트워크/거버넌스 구축·운영, 전담 인력과 예산 확보, 공간 인프라 확충, 지역간 성장지원 자원 격차 해소 등 핵심 요소들을 패키지로 정비하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함

■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 먼저는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청소년 성장지원 혹은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3년 또는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 비전을 제시가 필요함. 특히 행정의 핵심 두 주체인 전북도(시군 지자체) 및 전북도교육청(지원청)의 담당자 교체나 정치적 환경 변화에도 관계없이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연속성과 통일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적 로드맵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다음으로는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기존 조례 개정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과 예산 투입의 안정성도 확보해야 함. 그리고 조례의 실효 및 지속성을 위해서는 청소년 성장지원의 개념·범위설정, 도-교육청 간의 업무 영역 명확화와 역할 설정, 기본·시행계획 수립, 성과평가, 실태·수요조사 등의 조문 내용 구성이 필요함. 더불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의 제도화 및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사업비 확보의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시·군 단위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재정 지원의 합법성을 확보해야 함

■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 총괄 전담인력(간사, 코디) 배치 및 사무국 조성 필요

- 우선 단기적으로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 및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추진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함. 전북 도내 지역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조정 및 운영을 위해 전담 인력(간사, 코디)을 시·군 단위에 최소 1명의 상근 네트워크를 배치하여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안정화, 지속 발전성을 확보해야 함
- 이후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협의체)의 정기적 모임, 분과별 활동,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교육, 세미나, 벤치마킹·연수 등 네트워크를 통한 성장지원 사업이 양적으로 다양화되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추가 인력 배치로 팀 구성/사무국(조직화)하여 네트워크(협의체) 사업을 통합·운영·체계화 할 필요가 있음. 사무국은 전담 인력을 팀 단위로 구성하여,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과 공동사업 기획 및 실행, 민간과 공공의 협력 창구역할 수행 등을 지원해야 함
- 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초기 단계에서는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성·운영의 지역 정착을 위해 전담 인력(1명)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 및 공동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사무국(팀 단위)의 총괄·통합 부서가 필요함
- 또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예산·조직·평가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도입해야 함.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사업의 예산, 조직, 평가를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정책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효율적인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전담 인력 및 팀(조직)으로 구성된 인력 대상의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과 공동사업 추진과 관련된 전문성과 역량 강화도 병행 필요

■ 청소년지도사의 전문 역량 강화

- 무엇보다 지역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성장지원 사업 담당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활동가 대상으로 단계별 전문역량 강화 교육을 필수적으로 추진하여 현장의 전문성 및 실무 역량을 제고해야 함

2)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안정화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전북 광역(도) 단위 구축 및 광역-기초(시·군) 간 연계·자원 조정

- ①전북도 광역과 시·군 간 성장지원 정책의 일관성, ②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③기초(시·군)단위 네트워크 안정화 및착지원, ④지역 현장수요를 반영한 실행력 확보 등을 위해서, 광역 단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이 필요함. 즉, 광역 단위 성장지원 네트워크는 전북지역의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 할 수 있음
- 광역(도) 단위의 성장지원 네트워크와 기초(시·군)단위의 네트워크를 연계함으로써, 시·군 단위에서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전문인력과 인프라(예, 청소년 심리·정신 건강(의료 연계), 중독 관리, 첨단 미래 기술 교육(AI 등))를 광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기획·관리하고 필요 시·군에 효율적으로 연계·순환 지원하여 자원 격차를 해소할 필요 있음. 아울러 광역 단위의 예산·조직·평가 통합 관리체계 등을 도입하여 시·군에서 발생하는 유사사업의 중복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 또한, 광역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①시·군 단위의 우수 성장지원 정책 모델과 전문 노하우(경험) 등을 서로 공유·적용하고, ②전북지역 전체의 성장지원 사업 품질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음. 무엇보다 ③광역의 정책 방향을 시·군 단위의 전담 상근 네트워크/팀 조직(사무국/중간지원조직)에 구체화 직접 실행함으로써,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실행력 강화 및 청소년에게 도달하는 시간과 거리 등 전달체계를 단축하고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특히, 인구감소지역처럼 인적과 물적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 차원에서 지역별 특화사업 모델을 기획·지원하고, 기초단위에서는 순회형 또는 이동형서비스를 실행함으로써, 지역 간 서비스 접근성 및 질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음. 또한, 기초단위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의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사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욕구와 문제점을 광역 네트워크로 상향 보고하여, 전북도의 정책 수립 과정에 민감성을 높이고, 정책 방향을 재설정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지역 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참여 주체를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 기업, 전문가 등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고, 전북도 단위의 광역기능을 강화하여 시·군(연계) 지원 현장 밀착형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전북 전체의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다년도 추진을 위한 성장지원 정책 전용 예산 기금 마련과 더불어 광역 - 기초지자체 간 예산 매칭 및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적극적인 활용 전략 마련 등이 필요함. 중장기 기본계획 및 조례에 광역 단위(도)는 정책 결정 및 자원 통합·지원, 기초단위(시·군)는 현장 중심의 사업 실행 및 네트워크 운영을 담당하도록 역할 분담도 규정할 필요 있음

■ (도·시군)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은 성장지원의 핵심주체, 각 기관의 주요 역할

-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예산과 행정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임. 이에 행정 영역의 (도·시군)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은 양대 핵심 주체이자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하며, 양 주체 간 네트워크 및 정책(사업)의 연계·협력이 강력히 요구됨
 - 타 지자체의 사례 분석 결과,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및 사업 추진 시, 교육(지원)청과의 관계가 활발하고 연계·협력이 수월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 학교와 청소년기관 간 연계·협력 프로그램과 사업,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이 수월했음.
 - 이에 광역(도) 단위뿐 아니라 기초단위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공동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강화가 필요함
- 전북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와 정책 추진 성공은 지자체(도와 시군)와 교육(지원)청 간 '균형 잡힌 공동 주도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데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지자체는 청소년 유관 기관과 단체 및 지역사회 민간 자원(의료, 기업)들 연계, 청소년 심리·정서 위기 대응 등 지역사회의 복합·다양한 자원들을 통합·연계·조정하는 지원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 내 학교 공간 공유, 학교급별 학교 행사 연계와 교과 연계 프로그램 공동 기획·추진 등 학교 교과연계와 공간 공유 및 행정지원에 초점을 맞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해야 함.
- 전북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와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은 도비와 교육청비 매칭

(광역), 시군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현장 운영비 분담 등 공동 주도의 예산 운영이 필요함

- 더 나아가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컬 대학 사업,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인재 양성과 취업 선순환 구축하는 RISE 사업, 마지막으로 지역 교육을 혁신하여 인재를 키우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지역발전 전략인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이에 전북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글로컬 대학 사업·RISE사업·교육발전특구 등 교육(지원)청 추진사업과 광역도·시군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협조체계 구축·운영이 필요함
- 글로컬대학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북대, 원광대·원보전 컨소시엄 등이 선정되어 추진. 선정대학에 대규모 재정(다년)과 규제완화 패키지로 지역-대학 동반 성장 촉진이 목적
- RISE는 지자체 주도 고등교육 재정을 통합·배분하고, 대학-지역-산업을 한 체계로 엮는 고등교육 혁신 모델, '24년 전면도입, 지자체(도청 등)와 대학이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전분야에서 긴밀히 협력, 지역 인재 양성과 취업/창업 지원하는 체계
-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하여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내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해 일자리를 찾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북지역에서는 광역지자체-교육청-기초지자체 연합인 3유형으로 총 11개 시군이 선정됨. 1차 지정에서는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5개 시군과 2차 지정에서는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등 6개 시군임.

■ (도·시군)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협력 방안

-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이 활동·교육·상담복지·보건·고용·여가문화 등으로 서로간의 연계 없이 분산 추진되면서 예산 중복 및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무엇보다 성과가 누적되지 않는 단발적 단위사업·이벤트성 사업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 성장 단계별 연속 지원 사업이 미흡함. 또한, 농어촌·외곽권은 접근성과 인력 및 공간 격차가 커 청소년(학생)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 교육청, 시군 지자체 - 교육지원청 간 협력 체계를 구축 모색 하는 것이 중요함. 지속 가능한 지자체와 교육청 간, 시군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협력을 위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핵심 주체들이 참여하는 분기별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하고, 시군-교육지원청 실무협의회를 상시 운영하여 정보 공유와 사업 공동 추진을 체계화 해야 함

■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참여 주체의 범사회적 확장

-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참여 주체의 범위를 기존의 공공 기관·단체를 넘어 의료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기업, 관련 전문가 등으로 다각적으로 확장해야 함. 양육사회, 마을교육공동체 등 민간단체 및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이들이 네트워크 내에서 실질적인 역할(재정지원, 멘토링, 인프라 제공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회의 및 공동사업 운영에 청소년을 필수적으로 참여시켜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이 반영되도록 청소년 주도성 원칙을 확립해야 함

■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

-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평가는 지자체 또는 교육청(관)이 아닌, 의회(입법기관)나 독립적인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평가 결과는 단순한 사업 종료 보고서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차기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배분의 근거로 활용되도록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함
-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추진 실적 위주의 평가지표를 탈피하고, 청소년의 실질적인 변화와 성장, 심리·정서적 안정, 자기 주도성 향상 등 성과 중심의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해야 함

3) 청소년 수요 기반의 핵심 성장지원 기능 강화 및 특화

-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의 심리·정신 건강 문제와 미래 역량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성장지원 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특화된 기능 강화가 필요함

■ 전북 청소년의 심리·정신건강 문화 심화, 대응 전문성 확보 필요

- 전북지역 청소년 인구는 지속 감소하는 반면, 우울·불안, 자살, 중독(특히 도박) 등 심

리·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청소년 인구는 지속 증가 추세에 있음. 이에 중독관리센터, 의료계, 전문상담기관 등 전문기관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참여를 필수화할 필요 있음. 전문인력과 경험을 갖춘 기관의 의무 참여 근거를 제도화하고, 협력 절차·정보 공유 등의 체계와 네트워크 관련 제도적 마련을 통해 상시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함

- 학교 - 지역기관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정신건강 문제 위기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심리검사·상담부터 정신과 진료 연계까지 통합적이고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특히, 농어촌 지역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또는 '온라인 비대면 상담 인프라' 등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구체화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함

■ 인구감소지역 중심 체험 기반의 미래 역량 및 전용공간 인프라 확충 필요

- 청소년들이 여가·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 단위,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거점형 청소년 활동 시설, 청소년 전용 공간의 확보가 필요함. 시설 내 공간은 형식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놀이, 소통,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의 질적 개선이 필요함
- 또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첨단 기술 관련 기자재 및 공간을 확충하여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및 기술 체험 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미래 기술 교육 환경 구축이 필요함

■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성장 단계별 연속 사업 추진 필요

-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신체·인지 및 심리(정신) 발달이 급격히 진행되며, 감정 기복과 자아정체성 혼란이 두드러짐. 또한, 각 성장 발달 단계별(초등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요구되는 발달 과업과 위기 유형이 상이함
- 그러나 청소년정책과 사업은 청소년 성장 발달 단계별 특성을 연속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연령 및 시점별로 단절되어 추진되는 경향이 강함. 그 결과,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지원을 놓쳐 다음 단계에서 결손이나 위기로 이어지는 지원 누수 현상이 발생함
-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청소년의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아동기부터 청소년기,

성인 전환기에 걸친 연속적·통합적인 지원으로 지역에 대한 소속감·결속감과 정주 의식을 체계적으로 심어주어야 함. 이를 위해 초등 고학년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경험(마을체험)을, 중학생에게 지역 기반 진로탐색(지역 기업연계)을, 고등학생 및 전환기 청년에게 지역 일자리와 창업 기회(RISE 연계) 등을 단계적으로 연속 연계 제공하여,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 정착·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야 함. 즉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은 청소년 성장 발달 단계에 따른 연속성을 전제로 네트워크와 사업이 설계·운영 되어져야 함

2.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비전, 정책 방향 및 세부 추진 과제

- 본 절에서는 앞서 수행한 주요 연구 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토대로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학교 안팎을 잇고(연계), 지역을 키우며(정주), 청소년이 주도하는(참여)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함
 - 비전은 전북 전역에서 교육, 활동, 복지, 문화, 진로 등의 자원을 하나의 그물망으로 묶어 지역 정주력을 높이고, 그 과정 전반을 청소년이 주체로 이끄는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구축을 의미함
 - 학교 안팎을 잇고(연계) : 도, 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청, 청소년 및 유관기관(활동·복지·보호·문화·보건·고용·민간), 학교, 민간단체 등을 상시 연결해 단절/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 조성
 - 지역을 키우며(정주) : 청소년 경험을 지역 산업·문화·생태와 접목시켜 머물고 싶은 삶의 조건(교육·일·여가·관계)을 강화
 - 청소년이 주도하는(참여) : 청소년 참여단/의회/위원 공동의장·의결권·예산제안권 부여하고, 학교 안의 학생자치와 지역 청소년자치를 연동하며, 취약·소수 집단(학교밖·이주배경·장애·농촌) 대표성 보장 등으로 청소년이 의제 발굴→정책화→집행→평가 전 과정에 청소년을 공식 의사결정 주체로 포함함을 의미
-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해 3대 정책 방향(광역-기초 연계 청소년 성장지원 구축, 청소년 성장지원 생태 기반 구축, 청소년 체감형 및 지역 정착 성장 환경 조성)을 수립함. 3대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총 17개의 세부 추진 과제(안)를 제안함

[표 4-1]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비전, 정책 방향 및 세부 추진 과제(안)

비전	학교 안팎을 잇고(연계), 지역을 키우며(정주), 청소년이 주도하는(참여)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생태계 구축
정책 방향	세부 추진 과제
광역-기초 연계 청소년 성장지원 구축	▶ (단기) '전북형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 지역(시·군) 모집 공모 추진 ▶ (단기) 전북도 광역 단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 (단기)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컨설팅단 운영 ▶ (단기) 전북도 광역 단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포럼 ▶ (중기) 광역-기초 연계 청소년 성장지원 공동사업 운영 ▶ (중기) 전문성 기반 심리·정신건강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 (중기) 청소년 성장발달 단계별 성장지원 연속 사업 추진
청소년 성장지원 생태 기반 구축	▶ (장기)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기반 조성 (조례 개정 -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성장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 (단기) 성장지원 네트워크(전담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연수 ▶ (중기) '(가칭)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센터'(사무국/중간지원조직) 구축·운영 ▶ (단기)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과 교육(지원)청 추진사업(글로벌·RISE·교육발전특구 등) 간 유기적 연계 사업 추진
청소년 체감형 및 지역 정착 성장 환경 조성	▶ (단기)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다-이음 바우처 지원 사업 ▶ (단기) 찾아가는 청소년 창의·진로 메이커스페이스 ▶ (단기) 청소년 디지털·AI 리터러시 부트 캠프 : 미래 역량 UP!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거점공간 조성 사업 ▶ (중기) 지역 현안 해결 중심 청소년 마을 성장 프로젝트 정례화

정책 방향 1

광역-기초 연계 청소년 성장지원 구축 운영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및 읍·면·동 기초단위 중심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가 필요함
- 이에 기초 단위 혹은 그 보다 더 작은 단위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활성화를 위해 전북도 광역 단위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협의체) 구성과 운영이 필요함. 전북도 광역 단위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도적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을 지원하고 이끌어가야 할 필요가 있음
- 도 광역 단위의 네트워크에서는 ①기초 단위 네트워크의 구축을 지원하고, ②기초 단위의 네트워크의 역량과 행정력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연수와 더불어, ③인적·물적 자원 부족으로 기초 단위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각종 자원발굴 연계/배분, ④관련 조사와 연구, ⑤시도 단위 연계 대형 행사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함
- 광역은 전북도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정책에 대한 공통 규칙·재정·인프라·품질을 책임지는 ‘허브’ 역할을 하고, 기초단위는 지역생활권 맞춤형의 실행을 책임지는 ‘현장 엔진’으로, 광역과 기초 단위 연결을 통해서야만 전북도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단위 사업들이 사업들의 모임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로 작동이 가능할 것임

1 - 1

‘전북형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 지역(시·군)모집 공모 추진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전북지역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기존 지역사회 지원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역(도) 단위 차원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제도적 개입이 필요함

- 광역(도) 차원의 주도적인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공모사업을 통해 시·군 단위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성 및 안정화를 유도하고 전북형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사업 개요

- 추진주체 : 전북도(청소년 담당부서)와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사업기간 : '26. 3월 ~ '29. 2월(3년)
- 총사업비 : 총 630백만원(매년 210백만원)

* 매년 1개 지자체당 사업비 7천만 원(도비 50%, 시군비 50% 매칭) × 3년

〈 '26년 사업 규모(1개 지역 기준) 〉			
합계	주관기관 내 전담 인력 인건비	네트워크 조성·운영비	공동의 지역특화사업
70,000천원	30,000천원	15,000천원 (협업체 20명/1회당 10만원 년간 4회)	25,000천원

* '26년(시급) 적용 및 '26년 예산안 확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추진 방식 :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 지자체(3개소) 선정
- 세부 내용
 - 사업목적 : 전북 도내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조성·운영 및 이를 토대로 한 공동사업 추진.
 - 주요내용 :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참여를 필수로, 연계·협력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성·운영 및 지역특화 공동사업 운영
 - 공모기간 : '26. 1월 ~ 2월
 - 공모대상 : 지자체와 해당지역의 청소년기관·시설(네트워크 운영 주관기관)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참여
 - 응모방법 :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북도(청소년정책팀)으로 공문과 함께 제출
 - 공모절차 : 사업공모 → 계획서 제출 → 심사위원 구성·운영 → 지자체 3개소 선정·통보

○ 공모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

- (1) (지자체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협업체 구성) 지자체 청소년정책 담당부서와 해당 지역의 청소년기관(시설) 주관의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 해당 지자체와 청소년기관(시설) 주관의 교육지원청, 분야별 청소년기관(시설), 학교, 복지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기관장·담당자(청소년활동가), 학계 전문가,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20명 내외로 구성
 - 해당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은 네트워크의 필수 참여기관임
- (2) (성장지원 네트워크(협업체) 운영 안정화) 정례회의 연 4회(기관장 2회, 담당자 2회) 이상 운영, 지역 의제 발굴 및 기초조사 실시(청소년 성장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연결), 청소년 성장지원 포럼 1회 개최
- (3) (지역특화 성장지원 사업 운영)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창의적 역량 함양 도모를 위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협업체)를 통한 지자체, 청소년기관(시설, 단체), 지역교육청, 학교, 그 외 공공 및 민간기관 간 연계·협업의 지역특화 사업 추진
- (4) (매년 성과 도출 및 평가를 위한 성과 보고회 개최) 전북 광역(도) 단위의 청소년 성장지원 허브 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중앙차원의 성장지원 사업 지원 및 컨설팅 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자체의 성장지원 네트워크와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 보고, 컨설팅 받는 기회 마련. 이러한 기회를 통해 차년도의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과 지역특화 공동사업 추진

□ 타 지역 유사 사례

-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으로 “2024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 네트워크 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청소년활동 현장의 변화에 다양한 기관들의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 네트워크 중심의 특성화되고 개별화된 청소년활동 및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 기간은 약 9개월(3월~11월)이며, 공모사업 신청 대상자는 강원 도내 청소년수련 시설, 학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유관기관, 환경관련기관, 사회복지기

관 등 청소년활동을 진행하는 주체로 설정하고, 사업 규모는 총 5개 기관 선정을 선정함

- 주요 사업 내용은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지역 네트워크 거점기관으로서 지역 중심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임. 네트워크 운영 기준은 지역의 타 분야 기관 3개 이상이 참여하고, 네트워크 참가 기관 간 회의·활동 3회 이상 진행해야 함
 - 네트워크 분야 예시로는 수련시설, 상담시설, 학교, 교육청, 환경기관, 복지기관, 경찰서, 지자체 등임
 - 회의 및 활동 진행 시 센터도 함께 참여* 신규 또는 기존 진행 중인 사업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점이 무엇인지 기술
- 지원 예산은 지역 네트워크 선정기관별 2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 교부 형태는 불가하며 센터에서 집행 처리함

2025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 네트워크 사업 공모 안내

(2025.02.07.)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 네트워크사업」은 지역 내 여러 청소년기관, 단체, 시설들의 서비스 지원 주체간의 경계를 넘어 연계협력을 통해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는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청소년활동 현장의 변화에 다양한 기관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네트워크 컨소시엄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며 지역네트워크 중심의 특성화된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 청소년활동 네트워크의 확대
- >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성장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지역중심 청소년 사업추진

자료 :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https://www.gwysc.or.kr/notice49>)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청소년 성장 네트워크 사업 공모” 안내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전북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상담, 복지, 활동, 교육 등)은 각각의 전문영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 영역별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통합적 협력 구조가 부재함
- 진로, 문화, 복지, 심리·정서 등 청소년 성장의 다양한 영역이 분절적으로 지원되어 중복·누락·사각지대가 발생하며 특히 인구감소 지역의 청소년은 영역의 인프라가 취약하여 균형 발달을 위한 지역 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됨
- 무엇보다 도내 시·군별로 청소년 성장 관련 인프라 격차가 크고, 전문인력과 경험이 편중되어 있는 등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시군을 아우르고 이끌 수 있는 광역 단위의 전문적인 개입과 지원 자원 및 공동으로 사업/프로그램 개발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도 차원의 성장지원 네트워크는 개별 시·군 청소년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우수 사업을 도 전체에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함

□ 사업 개요

- 추진주체 : 전북도(청소년 담당부서)와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차원에서도 광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기관으로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를 주목하였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도적으로 광역단위의 성장지원 사업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지적함
- 사업기간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총사업비 : 80,000천원 (도비 100%)
 - 전담 인력의 인건비 : 40,000천원 * 청소년 기관 경력자
 - 협의체 정례회의 : 10,000 천원 * 회의 수당 포함(1인당/100,000원×4회)
 - 기초단위 성장지원 네트워크 안정 정착을 위한 컨설팅단 운영 : 10,000천원

-
- * 3개 기초지자체, 연 3회 필수 컨설팅, 수시 컨설팅, 컨설팅위원 5명 이내 구성
 - 지역 의제 발굴 및 기초조사 용역비 : 20,000천원

○ 세부 내용

- (1) (광역 단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협의체 구성)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 도교육청, 도지자체, 시군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담당자/지도자 등), 지역 청소년정책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정례회의 연 4회 이상 운영, 지역 의제 발굴 및 기초 조사 실시(청소년 성장지원 기본 계획 수립과 연결), 광역 협의체 사업 지원
 - 기관과 청소년 소통 창구(정보제공, 질의·응답, 서비스 연계 등) 상시 운영
- (2) (광역 단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 인력 배치) 광역 네트워크(협의체) 운영을 총괄·조정하고 전담 지원할 인력 1명 배치
- (3) (기초단위 성장지원 네트워크 컨설팅을 위한 컨설팅단 운영) 기초 단위의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성·운영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현장 코칭, 전문인력 매칭, 성장지원 네트워크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등 지원
- (4) (광역-기초 연계 성장지원 관련 자원 발굴·조사 및 연구 등 관련 자료 구축·공유) 기초 단위,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인력과 예산 및 자원이 부족하거나 접근성 등에 한계가 크기에 광역단위에서 전문인력, 예산 및 관련 인프라 등을 확보하여 기초 단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자원 발굴, 현장의 청소년 수요 및 특성에 대한 조사와 연구 등을 수행해야 함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기초 단위, 즉 시·군은 여전히 청소년기관과 시설 간에 사업/예산들이 분절되어 있어 연계성과 파급력이 낮고, 인구감소지역일수록 기반 시설, 전문인력 등의 부족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 및 공동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큼
- 기초 단위의 경우, 학교 안팎(지자체, 교육지원청, 학교, 청소년기관/시설, 공공 및 민간기관과 단체 등)의 네트워크 운영 및 공동 의제 발굴과 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 역량이 낮고, 지원 체계 또한 미흡함
- 이에 광역(도) 단위 차원에서 기초단위(시·군)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성, 운영, 공동사업 추진 등 성장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 안정적 정착과 관련 지역 특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유도할 필요 있음

□ 사업 개요

- 추진주체 : 전북도(청소년 담당부서)와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컨설팅단 운영 사업 주관)
- 사업기간 : 2026년 ~ 2028년 (3년)
- 총사업비 : 30,000천원 (도비 100%)
 - 기초단위 성장지원 네트워크 안정 정착을 위한 컨설팅단 운영비 매년 10,000천원
 - * 공모사업 선정된 3개 기초지자체
 - * 연 3회 필수 컨설팅, 수시 컨설팅
 - * 컨설팅 전문위원 5명 이내 구성

○ 세부 내용

- 컨설팅단 구성 → 컨설팅 실시(필수, 수시) → 공동 네트워크와 사업 실행 지원 → 성과평가 및 환류
- 컨설팅위원(전문가) 구성 : 총 7명
 - (행정/총괄) 단장 1명(컨설팅 총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간사(1명/ 광역단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전담자)
 - (컨설팅 전문위원) 전북과 중앙 및 타 지자체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협의체)와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으로 약 5명 이내 구성

1 - 4

전북도 광역 단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포럼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전북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자체, 교육청, 학교, 가정, 청소년기관 등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역 생태계(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임. 광역 단위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포럼은 광역 도 차원의 통합적인 논의와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
- 도(광역)와 시·군(기초) 단위의 청소년 지원 기관 및 사업 간의 연계 부족을 해소하고, 기초 단위의 현장 수요와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광역 단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론화의 장이 필요함
- 또한, 광역 단위의 통합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청소년 지원 유관기관 간의 협력 의지를 제고하고, 광역 및 기초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여 협의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인구감소, 학교 밖 청소년 증가,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하여 전북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 개요

- 추진주체 : 전북도(담당부서)와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성장지원 공모 선정 지자체
- 사업기간 : 연중 2회 실시
- 총사업비 : 8,000천원 (도비 100%)
 - 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주제의 포럼 2회 추진, 1회 포럼 당 4,000천원
 - 주제 발표 및 토론자 사례비, 포럼 운영비(자료집 제작, 플랭카드, 다과비, 대관비 등)
- 참석 대상 : 약 100명 내외
 - (필수 참석자) 광역도 단위의 성장지원 네트워크(협의체) 기관의 기관장과 실무자, 그리고 공모사업 선정된 지자체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협의체) 기관의 기관장과 실무자
 - 그 외 성장지원 정책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들

1 - 5

광역(도) - 기초(시·군) 연계 청소년 성장지원 공동사업 운영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광역(도)과 기초(시·군)를 연계하는 청소년 성장지원 공동사업 추진과 공동사업 추진의 정례화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 있는 청소년 복지 실현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 할 수 있음
- 무엇보다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단위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참여기관의 정기적인 만남과 연계 및 지원을 넘어서는 협력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 특히, 전북지역 현장 전문가들은 지역마다 청소년 축제가 진행되지만 소규모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축제의 효과와 파급력이 저하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매머드급 청소년 축제”를 기획·운영하여 ‘역사 있는 청소년 축제’로 자리매김 하기를 희망함
- 그리고 청소년 성장지원 박람회는 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며 우수사례 발표, 정책의제 발굴 토론회, 현장 활동가 포럼 등 다양한 형식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사업의 집합체로, 네트워크 참여기관 및 청소년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의 대표 협력사업으로 규모 있는 전북형 청소년 성장박람회 개최의 필요성을 지적함
- 이외 광역과 기초가 연계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성장 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자부심 고취, 참여 향상 등을 위해 공동의 사업,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병행하기를 요구함

■ (세부사업 1) 청소년 지역 축제 아이디어 플랫폼 운영과 청소년 축제

- SNS, 광역 협의체 홈페이지를 통한 청소년 축제 운영 관련 아이디어 접수, 채택 아이디어를 축제 구성요소(시상, 공연, 전시, 체험부스 운영 등)에 적용

■ (세부사업 2) 전북 청소년 성장박람회 개최

- 청소년 성장 영역(교육·진로·문화·복지 등)별 체험관 및 부스 운영, 청소년기관별(개최 지역 중심) 대표사업 전시 및 상담부스 운영, 청소년 포상(성장영역별 또는 포상에 대한 청소년 아이디어를 반영한 영역), 청소년 공연(청소년 기획, 전문가 공연 등) 등 대규모 성장박람회 개최, 매년 지역별로 순회 개최하여 전북지역 정착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세부사업 3) 광역-기초 연계 공동과정의 진로/체험 아카데미 사업 지원

-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취지에 맞춰, 지역 내 자원과 전문성을 공유하여 광역-기초 간 교육 및 활동 격차를 해소하고, 청소년의 미래 진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광

역-기초 연계 공동 과정 진로/체험 아카데미' 사업 지원이 필요함

- 광역 기관의 전문 교육 과정과 인력 자원을 시·군 지역으로 직접 가져가거나(찾아가는 서비스), 교통비를 지원하여(별도 사업) 청소년을 광역 거점으로 이동시켜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 광역-기초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연계 기능 수행 및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에 대한 집중 지원함
- 단순 체험을 넘어, AI, 바이오, 로봇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심층적이고 단계적인 진로 교육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성장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청소년지도자 및 활동가 대상 전문역량 강화 교육과 연계하여, 현장 지도자의 진로 지도 역량도 동반 상승 가능함
- 지역 대학, 연구기관, 유망 기업 등 민간 분야의 전문 자원을 네트워크에 참여시켜 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균형 잡힌 공동 주도 운영체계를 실현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전북 청소년 정책 담당부서,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 공동운영 : 교육(지원)청, 도내 대학(산학협력단), 지역 혁신 기업, 시군 청소년기관/문화의 집 등
-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운영(학기 중에는 주말 이용/3회, 방학 중에는 캠프형 추진)
- 총사업비 : 50,000천원
 - 강사료, 재료비/실습 기자재, 교통비, 교재비 등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13~18세 청소년(약 300여명 내외, 시군별 할당 지원)
- 지원내용 : 광역 차원에서 지역대학-유망기업-학교 등 전문 자원을 네트워크에 참여시켜 공동의 교육과정 기획·운영
- 광역 - 기초 연계 주요 프로그램(안)
 - (광역 집중 아카데미) 광역 거점(인근 대학 또는 기업체)에서 진행. 시군 청소년을 위한 교통비 등 지원, 심층 진로 체험 (2박3일 캠프형)으로 AI, 바이오, 메이커스 등 최첨단 분

야를 주제로 대학의 실험실 및 전문 기업 시설 활용

- (찾아는 프로그램 과정) 기초 시·군 청소년시설 (문화의집 등)에서 진행. 광역 네트워크 내 문화예술계, 의료계 전문가를 강사/멘토로 파견. 현장 맞춤형 교육 (당일형)으로 청소년들이 접하기 어려운 전문 직업인을 강사로 초청하여 시·군 청소년시설에서 진행하는 단기 실습 과정
- (멘토링 및 네트워킹) 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팀 조직(사무국/중간지원조직)이 멘토링 그룹을 관리하고 사후 연계 담당하여 아카데미 수료 후, 참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멘토링 그룹을 운영하고, 광역 네트워크의 청소년 지도자를 멘토로 지정

■ (세부사업 4) 지역 특화 청소년 문화 예술 공동 프로젝트 사업 계획

-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관련 현장 지적 사항 중 하나는 문화예술계 전문가의 네트워크 참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임. 이는 청소년의 심리·정서 문제 증가에 대응하여 예술을 통한 치유 및 표현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여가·문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전용공간 및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며, 획일화된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 활동 기회가 부족함
- 이에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취지에 맞춰, 문화예술계 참여 확대 요구와 청소년 전용 공간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창의성과 심리·정서적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 특화 청소년 문화 예술 공동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함
- 광역-기초 연계 공동사업으로 광역 단위의 전문 예술 강사 및 시설을 기초 시·군에 파견하거나, 시·군 청소년들을 광역 예술 거점으로 초청하여 문화 격차 해소, 자원 불균형 해소 및 지역 정착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전북 문화재단(협력)
- 실행운영 : 시군의 청소년기관/시설, 학교, 문화예술단체, 지역 예술가 그룹 등
-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운영
 - ※ (3월) 팀 구성 및 기획 → (4~9월) 프로젝트 실행 → (10월) 성과공유
- 총사업비 : 50,000천원
 - 전문강사료, 멘토 인건비, 재료비, 작품 제작비, 전시/공연 운영비 등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13~18세 청소년(약 200여명 내외, 팀 단위 참여 권장)
- 지원내용 : 프로젝트 활동비 지원, 전문 예술가 멘토링, 지역 유희 공간 활용 지원, 지역 축제 연계 성과 발표 기회 제공
- 주요 프로그램(안)
 - (1단계 - 기획) 지역 특화 주제 선정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의 역사적 장서, 특산물, 도시 문제(지역소멸, 환경오염, 기후문제, AI시대 등)를 주제로 탐색, 탐구성 및 프로젝트 기획 워크숍 실시
 - * 성장지원 네트워크 전담 인력(코디)의 기획하에 지역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등 지역 자산 탐방 및 자료 수집 등 실행
 - (2단계 - 실행) 창작 멘토링 및 실습, 시각 예술(벽화, 조형물), 공연 예술(뮤지컬, 댄스), 미디어 예술(영상, 웹툰) 중 택일하여 전문 예술가와 1:1 멘토링 진행
 - * 문화예술계 전문인력(네트워크 참여 주체) 활용, 페·유희 공간(생활SOC) 임시 작업실 및 전시 공간으로 활용
 - (3단계 - 성과공유) 지역사회 공유. 완성된 작품을 지역 대표 축제, 유동 인구 밀집 지역 등에 전시/공연하여 청소년의 예술적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
 - * 지자체 축제/행사 부서와의 협력을 통한 발표 무대 및 전시 공간 확보. 광역 네트워크 차원의 성과 공유회 개최
 - (4단계 - 후속지원) 우수 프로젝트에 대한 활동 기록물(웹진,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 및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 연계 지원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전북지역 청소년 인구는 지속감소 하는 반면, 청소년들의 우울, 불안 및 자살과 자해, 중독(게임, 도박 등) 등의 다양한 문제는 양적으로 증가추세임. 더욱이 청소년들의 이러한 문제들이 저연령화 및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이외 학업중단, 온라인 중독, 가족기능 약화 등 다원적 위험요서들이 중첩되어 만성화, 재발 및 심화되고 있음
- 한편, 전북지역의 농촌과 외곽지역에서 청소년들의 심리 및 정신건강 문제들의 발생 빈도와 그 비중도 높아지고 있으나 심리·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 부족으로 이동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심리·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초기 개입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전북지역 농촌과 외곽지역 청소년들의 심리·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 인력과 전문기관 및 지원 사업들의 접근성 제고가 필요함. 특히 자해·자살, 인터넷·도박 중독 등 중등도 이상의 고위험군 사례 증가 대응을 위해 광역단위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과 더불어 지원 정책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무엇보다 향후 개원 예정인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익산)를 전북권 광역단위의 허브로하여 광역단위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광역-기초-지역/학교를 잇는 모델(핫라인 구축, 모바일 클리닉, 디딤센터 이용 등)로 설계 필요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전북청소년 성장지원네트워크(광역), 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지자체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전북교육청

- 실행운영 : 전북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광역), 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2027년 개관)
- 사업기간 : 2027년 ~ 2030년(3년, 시범운영 1년, 확대 2년)
 - ※ 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개원 일정에 맞춰 단계별 운영
- 총사업비 : 1차 시범운영 50,000천원(국비, 도비, 시군비, 교육청 연계)
 - 2~3차 확대운영 매년 100,000천원(국비, 도비, 시군비, 교육청 연계)
 - 전북 청소년 심리·정신건강 관련 광역 허브 역할, 네트워크 운영 및 별도의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9~18세 청소년(학교밖, 다문화 등 포함) 중 고위험군(자해·자살 위험, 중독 중등도, 학대, 우울과 불안 중등도, 가해 및 피해 고위험군 등)을 우선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계 지원
- 지원내용 : 조기 발견과 접수, 전문가 평가와 진단을 통해 심리·정신건강 개입·치료, 사례관리와 사후관리, 보호자 교육 등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학교와 교육(지원)청, 청소년기관과 시설, 지자체와 부처별 청소년 관련 사업이 단발성, 이벤트성으로 서로 파편화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경험 누적과 학습-현장-성장 발달별 과업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도시권에서도 외곽지역은 체험공간, 전문인력풀, 교통접근성과 편의성 취약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용 기회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무엇보다 청소년의 성장발달 단계별 초등 - 중 - 고 등으로 이행하면서 진로에 대한

탐색 - 경험/체험 - 실습 - 취·창업과 대학 진로 선택 등 과업이 각기 달라지므로, 연속 연계가 필요함. 그러나 다수의 청소년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은 단일 한 시기만을 겨냥한 일시 지원에 머물러 사업들 대부분이 청소년 성장발달 단계별 연속 지원이 부재·누락되고, 그 결과 다음 단계 과업에서 결손과 이탈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학교(교육청)-지자체-대학-기업-청소년시설-청소년 성장지원네트워크가 단일 경로로 움직여야 중복·누락 최소화할 수 있고, 청소년 개인별 성장발달 단계별 연속 밀착 관리하여, 특히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이 정주·진학·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효과성 높여야 함
- 게다가 RISE사업·글로벌대학사업·교육발전특구 및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청소년 성장지원네트워크 및 지원 사업을 교차 연계·묶어 재원적 측면, 인력과 시설(물적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성과 성과 등을 극대화할 필요 있음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전북청소년 성장지원네트워크(광역)
- 사업기간 : 2026년 (시범운영)
- 총사업비 : 50,000천원(도비, 시군비, 교육청 연계)
- 사업대상 : 인구감소지역 거주 9~18세 청소년(학교밖, 다문화 등 포함)
- 지원내용 : 청소년 성장지원네트워크 활용 인구감소지역 내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중심의 연속사업 추진
- 주요 프로그램(안)
 - (초등 고학년) 지역-학교 연계 마을랩 진로 탐색 주간 추진
 - (목표) 지역자원(농생명, 탄소, 수소, 문화, 관광, 지역특화자원 등)을 직업 세계의 언어로 처음 소개, 진로 호기심 유도 및 동기화
 - (대상) 초 5~6년, 연 1회(5일정도)
 - (내용) 마을기관 견학, 직업인 미니강연, 체험키트, 나의 관심지도 작성 등

- (운영) 청소년 성장지원네트워크 광역단위에서 지역청소년센터, 학교, 마을기관 등 연계 추진
- (중학생) 지역산업 디스커버리 도전(탐구* 현장 미니 프로젝트)
 - (목표) 지역 핵심산업, 공공기관을 주제로 문제정의 - 탐구 - 결과물까지 산출 경험
 - (대상) 중 1 ~ 2년, 학기 6~8차시, 1일 정도는 현장체험
 - (내용) 팀별 문제 발견, 현장인터뷰, 프로토타입 제안(포스터, 영상 등)
 - (운영) 청소년 성장지원네트워크 광역단위에서 지역청소년센터, 학교, 대학(멘토), 지자체, 기업(현장) 등 연계 추진
- (고 1년) 직무그림자와 멘토링
 - (목표) 관심 직업의 하루 일과를 직접 따라가며 적합성·흥미 검증
 - (대상) 고 1년, 학기 중 1일 정도는 현장체험, 멘토링 약 3~5회
 - (내용) 직무그림자(기업, 연구소, 병원, 스타트업, 공공기관 등) + 멘토 진행(진로질문, 과제 피드백 등)
 - (운영) 청소년 성장지원네트워크 광역단위에서 지역청소년센터, 학교, 기업(멘토), 지자체, 기업(현장) 등 연계 추진
- (고 2년) 현장실습과 디지털·ai 리터러시 부트 캠프(주제 선택형)
 - (목표) 선호 직업(직무)의 핵심 역량 짧고 강하게 습득
 - (대상) 고 2년, 방학 2주(40시간), 주말 약 2회 정도
 - (내용) 직무/직업 선택과 팀 미션 등으로 엮어 추진
 - (운영) 청소년 성장지원네트워크 광역단위에서 지역청소년센터, 학교, 대학, 기업·연구소·공공기관(현장) 등 연계 추진

정책 방향 2

청소년 성장지원 생태 기반 구축

- 지역별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들의 장기적인 비전과 제도적 기반 없이 개별 기관·사업 단위로 운영되어 통합적 정책 추진의 한계가 존재함
-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가 지속 가능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근거, 중장기 계획, 전문인력, 공간 인프라 등 기반 요소의 체계적 구축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기반 조성 정책을 제안하며 실천 과제로 전북의 기존 청소년 관련 조례 개정(혹은 제정), 청소년 성장지원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 활동가(네트워커) 양성 및 역량강화, 그리고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센터(사무국/중간지원조직) 구축·운영을 제안함

2 - 1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 기반 마련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전북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을 단순 사업 차원이 아닌, 도(道) 차원의 장기적인 정책과제로 격상시키고, 성장지원 생태 환경과 체계가 행정변화(민선변화, 공무원 이동 등)에 관계없이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 발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기반 마련이 필요함
- 한편, 중앙차원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와 사업을 직접 규율하는 상위 법령·자치법규가 아직 부재하기에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지속성·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해당 조례의 실효 및 지속성을 위해 청소년 성장지원의 개념·범위 설정, 도-교

육청 간의 업무영역 명확화와 역할 설정, 기본·시행계획 수립, 성과평가, 실태·수요조사 등의 조문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네트워크의 조직 구성, 역할, 운영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민-관 거버넌스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협의체를 제도화,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 전담인력(네트워커) 확보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해야 함

- 더 나아가 "청소년 성장지원 기본계획(3년, 5년 단위) 수립"의 근거를 조례 조항에 명시하여 성장지원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성장지원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 비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 성장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개별 사업들을 포괄하고 통합하는 상위 정책의 추진 기반 마련도 필요함
- 마지막으로 시·군 단위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근거 내용도 조례에 명시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재정 지원의 합법성도 확보해야 함

□ [1]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사업주체 : 전북도(청소년 담당부서),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입법발의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기획행정위원회/도청의 교육소통협력국)
- 자문/협력 : 전북 광역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협의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연구자, 법률 전문가 등 전문가 집단
- 실무/연구 : 전북도의회(기획행정위원회)의 입법정책담당관 / 한국법제연구원
- 세부내용
 - (사업 기간) 약 10개월~12개월(조례안 연구, 입안, 의견수렴, 도의회 제출 및 심의 포함)
 - (사업 예산) 약 50,000천원
 - * 연구 용역비, 전문가 자문비, 공청회 및 간담회 운영비 등
 - (추진 절차)
 - (1단계) 연구 및 초안 마련 : 연구 용역 발주 - 관련 상위법 및 기존 법령, 타 시도 조례

- 분석, 성장지원 네트워크 및 유관기관 수요조사, 조례(안) 1차 작성 및 전문가 자문단 검토
- (2단계) 의견수렴 및 보완 : 전북 광역 네트워크(협의체) 및 시군 네트워크(협의체) 대상 간담회, 설명회 개최, 청소년 지원기관과 시민사회 대상 공청회, 설문조사 실시, 도 법률전문가 및 관련 부서의 법제 심의 요청, 최종 조례(안) 보완 및 확정
 - (3단계) 입법 추진 : 도의원 발의 또는 도지사 제출,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및 수정안 마련, 법제 사법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
 - (4단계) 공포 및 시행 : 조례 공포 및 관련 기관에 전파하여 법적 효력 발생, 홍보, 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과 규칙 마련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도교육청**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관련 계획 수립, 협의체 및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 재정 지원과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성장지원”이란 청소년활동·복지·보호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 여건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2. “네트워크”란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하여 지자체·교육(지원)청의 주체는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학교·청소년시설·복지·보건·문화·민간단체·기업·대학 등 지역 주체도 함께 참여하여 협력하는 구조를 말한다.
3. “협의체”란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를 말한다.
4. 전담인력이란 제9조에 따라 네트워크 구성·운영, 연계, 공동사업 기획·조정 등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광역 중간지원조직은 도지사가 지정한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본 조례에 따른 광역 허브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청소년 성장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 안팎의 연계를 위하여 교육과정·동아리·진로체험 등과 네트워크의 연동을 지원한다.
- ③ **시·군수와 지역의 교육지원청**은 지역 특성에 맞는 협의체 운영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④ 도지사와 교육감은 상호 협력하에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중복을 최소화하며 학교 안팎 연계를 통한 통합 추진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업무영역 및 역할 구분) ① 도와 도교육청의 업무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협력한다.

1. 도(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 정책·기획 총괄, 기본계획 수립, 재정지원 및 매칭펀드 체계구축, 협의체·중간지원조직 운영, 광역 데이터·평가 대시보드 운영, 광역 포럼 개최, 광역 컨설팅 및 역량 강화 등을 총괄한다.
2. 도교육청은 학교 연계 정책·지침 수립, 교육과정·동아리·자유학년·진로체험 등과의 연동, 학교(교원·전문상담 등) 인력·공간 협력, 교육청 소관 데이터 연계와 교육 현장 적용 지원

3. 공동사항으로 학생 안전·권리 보장 기준 마련, 성과지표 정합화, 우수사례 확산, 협력사업 심의·조정.

② 사군과 교육지원청의 업무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협력한다.

1. 사군은 지역 자원·수요 조사, 협의체 운영, 공동사업 집행·관리,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지역 데이터 수집·보고, 현장 안전관리 이행.
 2.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 프로그램 연계·운영 지원, 학교 시설·공간 활용 연계, 학생·학부모 의견수렴·환류, 학교 안전관리 기준 준수·점검 협력.
 3. 공동사항으로 지역단위 의제 발굴, 학교·지역 기관 매칭, 현장 컨설팅 수용 및 성과 공유
- ③ 도·도교육청, 사군·교육지원청 간 세부 역할과 협력 절차는 시행규칙 또는 별도의 협약(MOU)으로 정한다.

제4조(기본계획과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청소년 성장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성장지원 정책의 비전·목표 및 추진체계
2. 네트워크(협의체)·전담인력 배치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방안
3. 재정확보 및 전용 기금·매칭펀드 등 자원체계
4. 성과지표(KPI) 및 평가·환류 체계
5. 청소년 참여·권리 보장, 안전관리, 정보공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및 사업범위) ① 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자원 발굴 및 조사,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자원맵 구축
2. 네트워크(협의체) 운영, 전담인력 배치·운영
3. 학교 안과 밖 연계형 프로그램, 공동사업(진로·문화·체육·정신건강·다문화·권리보장 등) 추진
4. 안전관리·권리보장 체계 구축 및 의견수렴 상설화
5.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와 정보 공유
6. 실무자·네트워크 교육 및 청소년 퍼실리테이터 양성
7. 광역 중간지원조직은 포럼, 컨설팅단 운영, 인력양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의 허브 기능을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의 설치)

① 도지사는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심의·조정·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이하 “도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군수는 지역 여건에 따라 시·군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시행계획에 관한 심의·자문
2. 네트워크 운영 및 공동사업 의제 발굴·조정

3. 안전·권리보장 기준, 데이터·평가 지표(대시보드 포함) 심의
4. 중복사업 조정 및 연계 강화
5. 청소년 의견수렴 결과의 정책 반영 점검
6. 기타 청소년 성장자원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시·군수가 부여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

- ① 도지사와 시·군수는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발굴·연계 및 네트워크 운영 지원
 2. 공동사업 기획·집행·평가 및 사례 확산
 3. 전담인력(네트워크) 배치·양성 및 현장 코칭
 4. 데이터 수집·관리와 대시보드 운영 지원
- ③ 중간지원조직은 도 직영 또는 재단·민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의2(광역 중간지원조직의 지정 및 역할)

-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본 조례에 따른 광역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광역 포럼·컨퍼런스·라운드테이블의 기획·운영 및 의제 확산
 2. 권역·시군 대상 표준 컨설팅: 자원맵 구축, 의제 발굴, 공동사업 설계·예산화, 성과·안전·권리 체계 코칭
 3. 인력 역량 강화·양성: 실무자 네트워크·청소년 퍼실리테이터 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육 수료관리·이수증 발급 지원
 4. 품질관리·모니터링: 표준 매뉴얼·체크리스트 보급, 현장 점검(안전·권리·데이터 품질), 개선 권고
 5. 데이터·대시보드 운영 지원: 지표 설계 협력, 시군 데이터 수집·정합화 지원, 분석 보고서 발간
 6. 우수사례 모델링·확산: 운영 매뉴얼·예산서·KPI 묶음 패키지와 및 전파
 7. 민·관·학 연계 및 자원 동원: 대학·기업·재단·NPO 연계 협력 및 매칭 발굴
- ② 도지사는 광역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광역센터의 세부 운영기준, 성과지표 및 평가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청소년 참여와 권리보장) ① 도지사와 시·군수는 청소년의 의견제출·정책참여를 보장하고, 협의체 구성 및 사업 추진 전 과정에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 ② 도는 청소년 권리보장 및 안전관리 표준을 마련·시행한다.

제11조(재정지원 및 기금) ① 도지사는 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전용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와 교육감은 공동사업에 대하여 매칭펀드 등 재정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및 환류)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참여·접근성·연계도·지속성·안전·권리·정착연계 등 **공동 성과지표(KPI)**에 따라 실시한다.

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와 우수사례를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컨설팅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실태조사 등) 도지사와 시·군수는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원조사·수요조사·접근성 및 안전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협력 및 연계) 도지사와 시·군수는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경찰, 보건·복지·문화·고용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사업을 공동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위임·위탁)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사업의 일부를 관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협업체 운영,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공동사업 및 안전·권리 보장, 데이터·평가체계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정보공개 및 투명성) 도지사는 기본계획, 사업추진 실적, 평가결과 및 예산집행 내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 등) 도지사는 청소년 성장지원에 이바지한 개인·기관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2]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전북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안정적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근거마련이 중요함
- 한편,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및 사업 등에 대한 관련 상위법령이나 자치법규는 아직 부재하고, 단지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일부분의 근거를 파편적으로 찾을 수 있을 뿐임
- 이에 전북도 차원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커서 전북도가 기존에 마련한 청소년 관련 조례들 중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근거를 담아낼 수 있는 조례 현황 검토하고 개정(안)을 구성해 봄

- 무엇보다 경기도 시흥시의 “청소년 기본조례” 조항 구성을 살펴보면, “제2장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을 구성하여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표 4-2]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

현행 전북 청소년 지원 관련 조례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지원을 위한 개정(안)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제3장 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 목적, 용어정의, 도지사 등의 책무, 도와 도교육청의 업무영역 및 역할구분, 기본계획 수립,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의 설치/구성/기능,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 재정지원 및 기금, 평가 및 환류 제3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제4장 청소년단체협의회

□ 타 지역 유사 사례

-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직접적인 조례는 아직까지 전국 지자체 차원에서는 부재하지만, 기존 조례 내에 ‘성장’ 혹은 ‘성장지원’을 목적으로, 조항 등에 명시한 지자체의 조례들은 소수의 사례가 있음
- 특히, 경기도 시흥시의 「청소년기본조례」는 목적(1조)에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지원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장 총칙 다음으로 ‘제2장을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2장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은 시행계획수립(6조), 청소년교류활동 지원(8조),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9조), 교육 및 홍보(12조), 청소년 의견수렴(13조), 협력체계 구축 등(14조), 행정 및 예산지원(16조) 등의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고, 이외 청소년주간 행사(18조)에 성장지원 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청소년지도위원 구성 자격에 ‘청소년 성장지원 등에 관한 지식’을 명시(성장지원 관점의 정책 자문 구조화)하고 있음

시흥시 청소년 기본 조례

[시행 2025.06.05]

(일부개정) 2025.06.05 조례 제2493호

관리책임부서명 : 청년청소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시흥시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4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지역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규정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청소년 성장 지원 정책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청소년시설의 확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 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들이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관내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이 편리하도록 관련부서 및 기관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기준 '25.10.10)

□ [3]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2027~2030)”

- 사업주체 : 전북도(청소년 담당부서),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연구수행 : 전북연구원, 혹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
- 자문/협력 : 전북 광역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협의체), 시군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협의체), 관련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 등
- 연구기간 : 약 8~12개월
- 연구용역비용 : 50,000천원 * 전문가 자문, 실태 및 조사, 토론회 등
- 주요 과업지시 내용
 -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현황 및 환경 분석) 전북지역 청소년 특성과 문제 현황, 기존 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분석,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 실태 및 성과 진단, 선진 사례(타 지자체, 국외) 및 관련 법규 검토
 - (비전 및 목표 설정) 전북 도 차원의 청소년 성장지원 미래 비전 및 정책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과제 및 추진 방향 제시
 -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 및 활성화 방안)
 - 광역-기초 연계 모형 및 각 단위별 역할 정립 (거점 센터 역할 강화, 기초 네트워크 지원 등)
 - 청소년 심리·정신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기관(의료계 등) 참여 확대 방안
 - 민-관 거버넌스의 균형 잡힌 공동 주도 운영체계 및 평가(의회/전문기관) 체계 구축 방안
 - (세부 과제 및 실행계획)
 - 단계별 세부 사업 및 로드맵 제시, 예산 확보 및 재원 조달 방안 및 조례 제정/개정(법적 기반) 지원 사항 명시, 청소년 지도자 및 활동가 전문 역량 강화 교육 체계 구축 방안 등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담당·총괄 추진하는 실무자의 전문성과 지도력 및 행정적, 추진력의 정도에 따라 해당 지역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구성 범위, 기능, 역할, 사업화,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이 달라짐
- 이에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실무자(네트워크)의 전문역량은 필수조건임. 지역별 중간지원조직(협의체)가 운영되고 민관 협력의 시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 보장도 이루어져야 함
- 중간지원조직 담당자와 네트워크 참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발달 이해·성장지원 사업 개념-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의제 발굴-협력형 공동사업 기획 등 네트워크 운영 전반을 다루는 전문역량 강화·실습 중심의 ‘네트워크 양성 교육과정’이 필요함. 아울러 교육 참여자의 책임감과 사명감 고취를 위해 전북도지사 명의의 이수증 발급도 지원할 필요 있음
- 양성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네트워크 사업 사례발표 및 수퍼비전, 우수지역 및 기관 견학 등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네트워크(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내 사업 실무자, 협의체 참여 구성원 등)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러한 전문성은 지역사회의 성장지원 네트워크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향후 이러한 작업들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 될 것임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광역 협의체 담당자 주관)
- 사업기간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총사업비 : 20,000천원(도비 100%) ※ 광역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인력 활용

구분	세부 내역	계
인건비	- 인건비: 50,000천원 ※ 청소년 기관 경력자,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네트워크) 사업 인력 활용시 불필요	50,000천원
네트워크 양성교육 (3박4일)	- 강사료: 400천원×10과목=4,000천원 - 교육운영비(숙박 및 장소임대, 식사비, 교재비): 1인 300천원×20명=6,000천원	10,000천원
네트워크 역량강화교육 (1박2일)	- 강사료: 400천원×5과목=2,000천원 - 교육운영비(숙박 및 장소임대, 식사비, 교재비, 선진지 견학 임차비 등): 1인 400천원×20명=8,000천원	10,000천원

○ 사업대상 : 공모사업 선정 자자체의 성장지원 사업 담당자, 참여 희망 청소년활동가 등 40명

○ 세부 내용

- (네트워크 양성교육)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리더 양성과정 운영, 청소년 성장지원 개념,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의제발굴, 협력사업 기획, 갈등관리 등 네트워크 운영 및 협력사업 역량 학습 및 체험으로 30시간 과정(기초 15h + 심화 15h) 운영, 교육이수자에게 도지사 명의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인증서 수여
- (네트워크 역량 강화 교육) 중간지원조직(역할기관) 담당자 및 종사자의 네트워크 사례발표 및 수퍼비전, 청소년 성장지원 협력적 거버넌스 우수지역 견학 등 역량강화 교육 15시간 운영
- (교육 참여자 대상 전북도지사 명의의 이수증 발급)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전담 실무자로 교육 참여의 책임감과 사명감 및 지속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기 유발 등의 목적으로 발급

□ 타 지역 유사 사례

-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2019년부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협의체를 통한 공동의제 발굴,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해 옴
- 3차년도(2021년)에 연계협력사업으로 네트워크 역량강화 연수를 4시간씩 8회기를 운영함으로써 네트워크로서 자세, 지역사회 연대의 중요성을 학습하는 기회를 가짐

〈곡성군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네트워크 연수프로그램〉	
회기	내용
1회기	청소년관, 청소년지도자의 리더십
2회기	청소년 인권과 참여(청소년 인권 관점의 활동)
3회기	청소년활동의 개념 및 청소년단체 청소년활동의 개념 및 방향: 청소년활동의 법적, 포괄적 개념, 청소년활동의 운동으로서의 관점
4회기	지역사회 청소년운동 관점의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연수 기획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청소년자치 조직
5회기	청소년활동 네트워크의 이유 / 지역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 청소년친화도시의 국외 사례
6회기	청소년진로활동의 문제와 관련된 개념 청소년진로활동의 비형식 교육 특성 및 장(場)으로서의 지역사회
7회기	청소년지도자 역량 및 청소년친화마을 활동가 양성(청소년지도자 활동)의 관점 및 역량 청소년친화마을 활동가 육성
8회기	청소년프로그램 개발평가 및 지역사회 청소년참여, 연대활동 사례(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과 운영,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활동 사례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Ⅲ

2 - 3

‘(가칭)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센터’(사무국/중간지원조직) 구축·운영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 및 공동의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네트워크(협의체) 전담 인력(코디) 배치가 시급하고 필수적임
- 그러나 지역사회 내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 및 공동사업 추진의 연차가 쌓일수록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과 사업범위가 넓어져 업무량이 많아지고, 심화되어 전문성과 함께 조직성·체계성을 요하는 행정과 총괄·조정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협의체) 운영과 공동사업 추진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전담인력(코디) 배치에서 더 나아가 팀구성(사무국) 혹은 조직적인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임

- 결국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와 사업의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팀 구성(사무국)차원의 중간지원조직 조성 마련이 필요함. 타 지자체처럼 청소년재단을 통해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의 효율성,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사업의 지속성, 사업간 연계가능성 등을 추진하면 좋겠지만, 전북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전담인력(코디) 배치에서 더 나아가 팀 조직(사무국)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안책이 될 수 있음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북도 청소년 정책 담당부서, 전북 청소년활동진흥센터(해당 사업 주관)
 - (실행) '전북형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가 직영 또는 함께 컨소시엄을 한 청소년 기관/시설에 위탁
- 사업기간 : '전북형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공모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2030년부터 최초 3년 단위로 사업 추진
- 총사업비 : 연 약 6억원(도비 50%, 시군 50%)
 - *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3곳 중 2곳 최종 선정, 중간지원조직 형태의 팀 구성(사무국)을 위해 최소 2명의 인력 추가 배치
 - * 팀 구성(사무국) 2개소 당 최소 2명씩, 총 4명의 인건비 + 네트워크 조성·운영비 + 공동의 지역특화사업 비용 지원

〈 연간 사업 규모(1개 지역의 팀구성/사무국 조성 기준) 〉			
합계	주관기관 내 전담 인력 인건비	네트워크 조성·운영비	공동의 지역특화사업
100,000 천원	전담인력 2명 추가 30,000천원씩 총 60,000천원	15,000천원 (협업체 20명/1회당 10만원 연간 4회)	25,000천원

* '26년(시급) 적용 및 '26년 예산안 확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방식 :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금 지원(도비와 시군비 매칭, 재정 안정성 확보)
- 사업대상 : '전북형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의 성장지원 정책 성과평가를 통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2곳 선정

○ 세부 내용

- (팀/사무국 구성) 팀장/사무국장 경력직 1명, 팀원 2명으로 구성
- (네트워크 총괄 및 조정) 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정기적 운영·관리, 지역 내 자원 조사 및 발굴, 지원서비스 연계 및 조정, 광역 네트워크(도 단위)와의 정책연구 창구 역할 등
- (공동사업 기획 및 실행) 지역 네트워크 공동의제 발굴 및 참여기관 간 공동사업 기획 및 운영, 청소년 수요를 반영한 자율공간 조성·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지원
- (역량 강화 및 평가 지원) 지역 청소년 지도자 대상 단계별 전문 역량 강화 교육 기획 및 운영,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객관적인 자체 평가 및 환류 지원
- (행정 지원) 전담 사무공간 및 기본 운영 기자재 지원, 사업 행정지원 등

○ 추진 절차

- (1단계) 제도 및 자원 기반 마련 : 청소년 성장지원 조례 개정/제정을 통한 중간지원 조직 설치·운영 및 인력 지원 근거 마련. 도·시·군비 매칭을 통한 예산 확보 및 분담 비율 확정
- (2단계) 사업 대상 선정 및 위탁 : 사업 희망 시·군 수요 조사 및 대상 선정. 운영 조직 (직영 또는 위탁) 선정 및 협약 체결. 전담 사무국(팀) 구성 및 인력 채용 및 배치
- (3단계) 조직 운영 및 네트워크 활성화 : 팀 구성(사무국) 형태의 중간지원조직 운영 규정 마련, 사무공간 조성, 시·군 청소년 지원 기관 DB 구축 및 네트워크 회의 정례화. 광역-기초 간 정기적인 실무협의체 운영 시작
- (4단계) 사업평가 및 확대 :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 운영 성과평가 및 환류. 우수 시·군 모델을 확산하고 인력 및 예산지원 규모 확대 검토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각 중앙 부처별 및 전북 도/시군의 청소년 관련 부서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이 활동·교육·상담복지·보건·고용·여가문화 등으로 서로간 연계 없이 분산 추진되면서 예산 중복 및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청소년 성장발단 단계별 연속 지원 없이, 주고 성과가 누적되지 않는 단발적 단위사업·이벤트성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유사·중복 투입과 지출되고 있음
- 한편, 전북의 농어촌·외곽권은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와 전문/전담인력 및 공간·인프라 등의 격차로 청소년(학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 추진과 교육(지원)청의 추진사업(글로벌 대학 사업, 라이즈 사업, 교육발전특구 사업 등)간 연계 협력한 사업 추진 필요함

■ (세부사업 1) 찾아가는 마음 안심 서비스 운영

- 전북지역 청소년의 심리·정신 건강 문제 증가(우울, 불안, 중독 등)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지역의 의료계, 전문 심리상담 기관 및 대학 상담센터 등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참여하고, 글로벌 및 RISE 대학의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보건계역의 대학원생과 교수진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과 협력하여 위험위기군 청소년 심리 회복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세부사업 2) 농어촌 및 외곽지역 청소년의 4차 산업 관련 진로 체험프로그램 운영

- 농어촌 및 외곽 지역의 청소년 전용 공간 부족과 4차 산업혁명, AI 관련 기자재 및

공간이 미흡함을 고려하여 교육발전특구 및 RISE 사업 연계를 통해 구축되는 대학 및 지역 산업체의 AI/SW 교육 인프라, 전문 인력을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공유하여, 초등 고학년과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미래기술 체험 및 진로 연계 활동'을 정규 혹은 비정규 교육과정에 통합하여 제공할 필요 있음

■ (세부사업 3)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자원 지원

- 전북의 지역별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와 관련 교육적 역량을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체험 활동 및 여가 기회를 확대 필요
- 지역 대학별 문화·예술 동아리, 예술 대학, 체육시설 등을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대상 K-컬처, 지역특화 문화예술 캠프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지자체의 청소년 활동 예산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의 접근성 제고 필요

정책 방향 3

지역 청소년 체감형 및 지역 정착 성장 환경 조성

- 인구감소 지역의 청소년들은 복합적인 위기에 노출되어 있으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사업으로는 실질적인 체감도 향상에 한계가 있음
- 농어촌 지역은 청소년만을 위한 여가·문화 전용 공간 및 디지털/AI 관련 기자재가 전무하여, 도시지역 청소년과의 미래 역량 격차가 심화되며,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기존 청소년시설 이용이 어려우며, 기관·단체 간 협력 시에도 물리적 연계에 한계가 존재함
- 기존 청소년 정책 사업이 대체적으로 성인 주도형,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의 흥미와 자발적 참여가 저조하고 정책의 실질적인 만족도(체감도)가 낮음
- 지역사회 내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성장지원 사업(문화, 진로, 놀이 등)을 필수 요건으로 지정하고, 지역사회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 및 높은 체감도를 유발하는 지역 특화 사업 추진이 필요함. 특히, 단순 활동 횟수나 청소년 참여 인원 중심이 아닌, 청소년의 자기 주도성, 관계 역량, 심리적 안정 등의 성과 중심 평가지표를 도입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높일 필요가 있음

3 - 1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더-이음 바우처 지원 사업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인구감소 및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전문 학원, 문화·예술 시설,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 시설 및 기자재가 현저히 부족하여 청소년의 공정한 교육 기회 접근성에 한계가 발생함
- 이에 바우처 지급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

스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여 정책 수용도를 높여야 함

-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에게 도시 청소년과 동등한 수준의 성장 기회를 보장하여 지역 내 학습 만족도와 정주 의향을 높이고, 미래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해야 함
- 무엇보다 바우처 사용처를 지역 소상공인 및 청소년 유관기관으로 한정하여 지역 경제 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청소년 정책 관련 기관들의 참여 동기를 강화해야 함
- 이에 인구감소지역 대상 지리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청소년들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성장 자원(학원, 상담소 등)을 '이어준다'는 네트워크 및 접근성 강화 목표를 표현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더-이음 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전북도와 인구감소지역 시군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 12월까지 이용 가능
- 총사업비 : 30,000천원 (도비 50%, 인구감소지역 시군비 50%)
- 사업대상 : 행정안전부 지정 전북 인구감소지역에 주소지를 둔 13~18세 청소년
- 지원금액 : 13~15세 3만원/연 36만원, 16~18세 5만원/연 60만원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충전하는 방법(매월 첫 주 포인트 충전)
- 세부 내용
 - 교육, 진로, 문화, 취미·여가, 예술, 체육 등 관련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미등록 업체 사용 불가)
 -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 및 청소년기관(시설)에 가맹점 목록에 대한 전용 사이트 공개·조회
- (사용처 예) 편의점, 카페, 마트, 음식점, 독서실(스터디카페), 서점, 예체능학원, 아미용실, 문구점, 목욕탕, 안경점, 교복점 등
 - 사용금액 제한 50%
 - 지역 내 사용가능한 가맹점 등록 확대 유도
 -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관련 조례 제정 필요

□ 타 지역 유사 사례

- 타 지역 유사 사례로는 거창군·옥천군·보은군의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사업이 있음.
관련 지자체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이라는 공통점 아래 도시와의 성장 격차를 해소하고 주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한편, 옥천군은 농촌형 학습권 보장 및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학원, 독서실, 교재 구입 등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고, 보은군은 문화인프라 부족 해소 및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생활 증진을 위해 체험활동, 문화 강좌, 예술 활동 분야 강조하고 있음
- 거창군은 교육·문화 활동뿐 아니라 생활 및 건강 증진 분야를 폭넓게 포함하며, 지역 소상공인 연계에 집중하여 지역 소비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음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신청 안내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3년 8월 28일 ~ 연중

신청대상: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13~18세* 청소년
* 해당사항이 되는 해의 1월부터 신청 가능

신청인: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 청소년 본인 신청 시 보호자 동의 필요(신청서 서식 14)

제출서류: - 꿈키움 카드 발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유 동의 시 생략)

신청방법: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가맹점 모집

2022년부터 시행하는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을 위한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3월 ~ 연중

모집업종: 교육활동 - 독서실(스터디카페), 서점, 문구점 등 문화, 체육 - 정학관, 공연장, 각종 체육시설 생활, 건강 - 미용실, 단정점 등

신청방법: 제출처: 옥천군청 2층 행복교육과 청소년팀
문의 ☎043730-6963

필수서류: 가맹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영의용장 사본 1부, 신분증 지참

대금지급: 매월 1회 가맹점 계좌로 지급 (가맹점 부담 수수료 없음)

옥천군 행복교육과(청소년팀)

2025 성큼성큼 꿈자람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

신청기간: 2025.2.28(금) ~ 3.17(목) 14시

공모내용: 청소년의 주도성과 참여하는 활동 프로그램(분야 제한 없음)

문의: 이메일: dream@gyeongsang.kr, 전화: 02-6259-1237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dream@gyeongsang.kr)
- 제안 홈페이지에서 서식 등 세부내용 참고

거창군, 옥천군, 보은군의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사업 사례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인구감소 및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전문 시설(메이커스페이스, 전문 심리 상담소 등) 및 기자재가 현저히 부족하고, 도심형 메이커스페이스 접근이 어려움
-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수 역량인 AI, 코딩, 디지털 및 첨단 기술에 대한 창작 교육에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에도, 이동시간·교통비가 참여의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 이는 단순히 예산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의 근본적 한계라 볼 수 있음
 - 기존 청소년의 활동 체험을 위해서는 청소년기관을 시간 내어 방문해야 한다는 제한점을 해소하고, 이동형 청소년센터(메이커 공간)가 청소년을 방문해 접근성과 편의성 및 이용성을 높일 필요 있음
- 이에 일정 지역에 고정된 공간 중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이동형 플랫폼이 효율적이고, 이동형 플랫폼(차량) 내 다양한 장비를 탑재하여 학교·센터·지역으로 직접 방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청소년이 손으로 만들고(메이킹) 디지털 장비를 다루며(3D·레이저·VR 등) 결과물을 바로 보는 ‘즉시 체감형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전북의 제조·농생명·문화관광 등과 연결된 지역 기반 진로·자립 경로 체험·탐색 등도 필요함
- 이를 위해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광역) 주관의 이동형 청소년 센터로 ‘찾아가는 청소년 창의·진로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추진이 필요함. 광역단위에서 차량·장비·커리큘럼 표준 등을 갖추고, 기초지자체(시·군)가 학교·기관/센터·축제 등과 연동하면 생활권 단위로 빠르게 확산이 가능할 것임
-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에게 도시 청소년과 동등한 수준의 성장 기회를 보장하여 지역 내 학습 만족도와 정주 의향을 높이고, 미래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해야 함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전북도 청소년 담당부서,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차량, 장비, 안전, 표준 커리큘럼, 성과지표 등 총괄
- 기초(시군) 성장지원 네트워크(협의체/전담인력)은 학교/기관/센터 수요조사 → 스케줄링 → 현장 운영 지원 등
- 협력파트너 구성 : 도내 대학 공학교육센터, 메이커스페이스, 지역기업(제조, 농생명, 콘텐츠), 지역 장인과 예술가 등

○ 사업기간 : 2026년~2029년 약 3개년

- 1차년도(파일럿) → 2차년도(확대) → 3차년도(정착)
- (1차년도) 차량·장비 구축, 커리큘럼 표준화, 인구감소지역 8개 시군 시범적 운영
- (2~3차년도) 14개 시군 전면화, 생활권 정규 편성(학기, 방학 주기 운영)

○ 총사업비 : 약 7억 (도비, 교육청, 시군비 매칭), * 기업·대학 산학 협력 기증

- * 이동형 차량(버스 혹은 트럭 개조) 3억, 메이커 장비 패키지 1억, 내부 인테리어·안전설비 1억
- * 사업 인건비(전담 2~3명) 7천, 소모품·장비유지비 5천, 보험·안전·정기점검 2천, 교육콘텐츠 개발 2천, 유류·운영비 2천, 외부 연계(멘토, 기업 견학 등) 2천

○ 사업대상 : 전북 도내 모든 청소년(9~18세 권장)

- 학교·지역아동·청소년센터·청소년수련시설·작은학교·대안교육기관·학교밖 청소년 포함
- (우선순위) 농산어촌·도서·외곽 지역, 소규모 학교(분교·작은학교), 교육·문화 취약권역

○ 세부 내용

- 장비와 콘텐츠(예시) : 디지털 제작(3D 프린터, UV 프린터, 소형 사출기, 금속 레이저 각인기, 우드버닝, 인장 조각기), 로봇·코딩/VR(스파이크 프라임, VR 기기, 태블릿/노트북), 콘텐츠 라인업(3D 모델링·프린팅, 레이저 각인 네임태그/기념품, UV프린팅 굿즈 제작)

□ 타 지역 유사 사례

- 서울시 시립중앙청소년센터는 2024년 4월에 이동형 메이커스페이스인 ‘똑딱이 유니버스(Youth+Need+Bus)’ 시범사업 추진함. 똑딱이 유니버스는 서울시 청소년 수련시설 최초 이동형 메이커스페이스로, ‘찾아가는 청소년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구축됨
- 메이커스페이스는 기존 방문을 통해 이뤄지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문제를 개선하고자 기획했고, 이동식 메이커 장비, 초소형 사출기, UV프린터, 금속 레이저 각인기, 노트북, 탭, 우드버닝, 타투 프린터, 스파이크 프라임, 인장 조각기 및 3D 프린터, VR기기 등이 탑재된 버스가 청소년이 있는 곳을 찾아가

3 - 3

청소년 디지털·AI 리터러시 부트 캠프 : 미래 역량 UP!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청소년에게 디지털 역량을 필수 생존 능력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및 AI 관련 기자재 및 공간이 미흡한 상황
- 특히,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은 도시권보다 상대적으로 미래 역량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4차 산업혁명 기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생성형 AI 급속 확산 생활 속에서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디지털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리터러시(Literacy) 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함. 즉, AI시대에 필요한 데이터 해석 및 윤리 교육과 함께 청소년의 실질적인 진로 탐색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지원도 함께 필요함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AI/디지털 교육의 기회를 광역 단위에서 제공하고, 기초 단위 시설에 AI 관련 기자재 활용을 지원하여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추진방법 : 공모방식으로 지자체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선정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여름 및 겨울방학 적극 활용
- 총사업비 : 5천만원(도비와 시군비 매칭)
 - * 전문강사료, 기자재 대여비, 교육자료, 참가자 지원비 등
- 사업대상 : 전북 도내 거주 모든 청소년(9~18세)
 - *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학교박 및 취약권역 선별 우선 지원
- 세부 내용
 - (1차)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정보의 비판적 이해, 미디어 윤리 교육, 허위 정보(Fake News) 판별 실습
 - (2차) (AI 기초 및 활용) AI 작동 원리 이해(코딩 기초), ChatGPT 등 생성형 AI 활용 실습, AI 윤리 교육
 - (3차) (창의 프로젝트) '지역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한 AI/디지털 기반 아이디어 기획 및 시제품 제작(발표회)
 - (4차) (성장지원 네트워크 전문 교육) 기초단위 청소년기관/시설 및 학교 교사 등 참여기관 종사자 대상 부트 캠프 종료 후 디지털/AI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노하우 전수 관련 별도 워크숍 추진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청소년들은 등·하교를 하거나 학원 등을 이동할 때, 버스 등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함.

특히, 농촌 및 취약계층 청소년들은 대중교통 비용 부담으로 다양한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이에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활동 및 문화·교육의 격차를 완화시키고자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여러 지자체(경기도, 충남 등)에서 이미 청소년의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복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이는 청소년들에게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여건을 실현하는 것임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과 교통 담당부서)
- 지원시기 : 2026년 1월 ~ 12월(시범운영)
- 총사업비 : 연간 약 36억원 내외 (도비 30%, 시군비 70%)
 - * 청소년 1인당 연 12만원 지원 기준
 -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5. 5월 기준 전북 도내 13~18세 청소년 규모 99,825명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전북도인 청소년(13~18세)
- 지원범위 : 대중교통(버스, 마을버스) 이용요금 지원
 - *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 택시 등은 지원 불가
- 지원방법 :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모바일페이 연동 → 자동 집계·환급
- 지원금액 : 분기별 3만원(연 12만원) 한도 (도비와 시군비 매칭)

□ 타 지역 유사 사례

- 경기도와 충청남도(2022년 4월부터)는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6세부터 18세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최대 24만원 한도(분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음. 지급 수단은 주로 지역화폐이며, 2025년 10월 기준부터는 전국 최초로 지역화폐로 환급받은 지원금을 일반 교통카드에 재충전(교통비 쿠폰 전환)하여 실제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함. 지원 범위는 수도권 모든 대중교통(경기·서울·인천 버스, 지하철 등) 이용 금액 및 공유자전거 이용 금액(회당 1천 원 즉시 할인)을 포함하고 있음
- 충청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도입한 사례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 6세~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으로 시내·농어촌 버스 이용 시 1일 3회까지 무료 탑승 혜택(4차부터는 유료)을 제공하고 있음. 지원 방식은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사례〉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여전히 부족함.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 문화·여가·놀이 공간 부족으로 청소년들이 여가·문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라는 현장의 높은 수요가 있었음. 또한,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의 제한뿐만 아니라, 청소년기관 및 시설 내 실질적인 청소년 이용 공간도 부족하여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및 AI 관련 기자재 및 공간이 부재한 경우도 많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은 미래 세대의 이탈을 막고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소멸 대응 전략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청소년 전용 공간(거점)을 확보한다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상담, 복지, 문화예술, AI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와 인력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하여 전용공간의 확대 시,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공간을 중심으로, 새로운 건물 건립보다 폐교, 빈상가, 유휴 공공건물, 마을회관, 편의점 등의 리모델링으로 청소년 전용 스터디카페, 메이커스페이스, 문화·여가 및 체육활동 공간(구기 종목, 배드민턴, 보드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 창업랩, 도서관 등으로 조성하기를 제안함
- 이상의 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문화 및 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켜, 가족 단위의 지역이탈을 방지하고 유입을 촉진하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음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총괄) 전북자치도 지방소멸대응 기금 사업 담당부서와 청소년 정책 부서 협업
- (실행)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시·군) 및 시·군의 청소년 기관/시설

○ 사업기간 : 2026~2028년(3단계)

○ 총사업비 :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활용

* 건물 공간 선정 및 리모델링(약 6개월), 시설 운영 개시(2년차부터~)

○ 사업대상 : 인구감소지역(10개 시군)의 청소년

○ 세부 내용

- (복합활동 공간으로 활용)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카페형 휴게 공간, 자율 동아리 실, 미디어 창작실, 밴드 연습실 등으로 활용하고, 문화예술계 및 민간단체 참여 유도를 통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상시 운영
- (특화교육 공간으로 활용) AI 관련 기자재를 구비한 디지털 체험실, 코딩 및 부트 캠프 운영이 가능한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여 'AI/디지털 리터러시 부트 캠프' 등 전문 프로그램 운영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
- (심리·상담 지원실)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Wee센터 등 전문기관의 정기적인 상담 서비스(개인 상담, 집단 상담프로그램, 심리상담, 심리검사 등)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
- (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공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전담하는 상근 네트워크 및 중간지원조직의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 광역-기초 네트워크 회의 및 공동사업 기회의 장소 등으로 활용

□ 타 지역 유사 사례

- 인구감소와 도시 변화로 발생한 폐교, 폐공장, 폐건물 등 유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부여한 청소년 거점 공간 사례로는 부산의 '놀이마루', 서울의 '상상굴뚝놀이터' 등이 있음
- 부산의 '놀이마루'는 폐교된 도심 속 접근성 높은 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진로 체험관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 공연 수업, 영화 제작, 의상 디자인 등 다양

한 진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교육과 문화 거점으로 전환함

- 서울의 '상상굴뚝놀이터'의 경우, 버려진 군 시설(보일러실) 및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함.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창의적이면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실내 놀이터로 개조해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놀이권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음

3 - 6

청소년 마을 성장 프로젝트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청소년의 지역이탈은 거주지역 및 공간에 대한 긍정적 경험의 부재에서 비롯됨. 이에 학교 중심 활동에서 벗어나 마을공동체와 연결된 생활 기반형 성장 경험의 제공이 필요함
- 지역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탐구·기획·실행하는 구조를 만들면 청소년의 시민의식과 지역 정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음
- 청소년 거주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 문제의 발굴부터 해결 단계까지 주체적 참여를 위한 마을 단위 청소년 성장지원 프로젝트의 시범운영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광역 협의체)
- 사업기간 : 2026년 4월 1일 ~ 12월 31일
- 총사업비 : 16,000천원(도비 100%) ※ 광역 및 지자체 성장지원 네트워크 인력 활용
- 사업대상 :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공모 선정 지자체 청소년 30명 *지자체당 10명 1팀 구성
- 세부 내용
 - (청소년 마을탐구단 구성 및 교육) 청소년 마을탐구단 구성(성비율, 연령, 학교 안·밖 청소년

등 다양성을 고려한 구성), 주제결정 및 문제탐구, 해결방안을 의제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퍼실리테이션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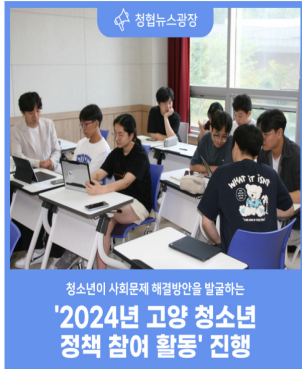
- (청소년 마을탐구 및 의제발굴) 청소년 관점에서 바라본 마을의 문제(교통, 환경, 문화, 세대갈등 등)조사, 탐구 결과 발표 및 의제도출 워크숍 개최
- (마을성장 프로젝트 실행)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들의 개입 활동(플로깅, 세대공감 프로그램 운영, 교통표지판 제작 설치 등), 프로젝트 과정 및 결과를 청소년 박람회에 전시·발표
- (운영인력)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광역협의체) 담당자 총괄, 지역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참여
- (사업예산) 광역협의체 (도비100%)

구분	내역	계
청소년 마을탐구단 교육	○ 퍼실리테이션 교육 운영비(강사비, 교재비 등): 2,000천원×3곳 = 6,000천원 ○ 참여자 식비 및 간식비: 15,000원×10명×3곳 = 450천원	6,450천원
청소년 마을탐구 및 의제발굴	○ 청소년 마을탐구 활동비(활동수당): 50천원×10명×3회×3곳 = 4,500천원 ○ 탐구결과 발표 및 의제도출 워크숍(강사비, 참여자 식비 등) = 1,000천원	5,500천원
마을성장 프로젝트	○ 마을문제 해결활동비(재료비): 1,000천원×3곳=3,000천원 ○ 청소년 박람회 전시비 : 1,000천원	4,000천원

□ 타 지역 유사 사례

- 2023년에 출범한 고양청소년협의회에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인 ‘청소년 정책 참여사업’ 일환으로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발굴하는 ‘2024 고양 청소년 정책참여활동’을 4차례 진행함
- 청소년친화도시를 위한 정책 제안 활동으로 청소년들 각자의 시각에서 사회문제를 선정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
- 참여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제안 경험에 보람과 자부

심,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느낌



*고양청소년협의회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goyang_youth_council/223553739274

참 고 문 헌

REFERENCE

- 김광병. (2013).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조례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1(4), 133-143.
- 김태인, 권종욱, 박상문. (2021).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아태비즈니스연구, 12(1), 165-182.
- 보건복지부. (2025). '2025년 상반기 전국 정신건강관련기관현황집...'. 세종: 보건복지부.
- 양계민, 정진영. (20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및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23).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 세종: 여성가족부.
- 이윤주, 강지원, 백승주, 성지은, 택현우. (2018). 지역사회 협력망 운영을 통한 청소년 성장 지원 모델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준화. (2010).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조례 현황과 제정의 방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성제, 김윤나. (2018). 청소년지원 관련 조례의 현황과 개선방안 :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5(3), 47-74.
- 최인재, 강경균, 송민경, 조윤정 (2020).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인재, 이윤주, 송민경, 조윤정 (2019).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인재, 임지연, 김민, 강영배. (2023).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세영, 이경상, 송민경, 조윤정. (202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 체계 구축 방안 연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s://www.gnw1391.or.kr/kor/notice/locations.html>).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보도자료(2023.10.24.).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 보도자료(2024.10.22.).

위(Wee) 프로젝트, 우리가 희망이다. 홈페이지(<https://www.wee.go.kr/home/main/main.do>).

전북특별자치도청 청소년시설 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25.4).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홈페이지(<http://youthnet.or.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25.4).

SUMMARY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Youth Growth Support Policies in Jeonbuk

Juyeon Lee · Jihoon Choi

1. Research Goals and Methods

■ Research Background and Goals

- (Background) Currently experiencing a continued decline, the region's youth population (9-24 years old) is expected to account for only about 10% of the total population by 2060. Jeonbuk, meanwhile, is facing the following challenges: 1) a steady increase in the number of at-risk, vulnerable, and protected youth, 2) deepening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polarization between its municipalities, and 3) abrupt changes and diversification in the youth development environment. These changes imply that youth development policies must be tailored to meet the increasingly complex and multifaceted demands arising across various sectors.
- (Goals) To support the healthy development of its youth, we propose that Jeonbuk formulate integrated and sustainable policy roadmaps along with related action plans based on 1) the synergistic incorporation of various communities'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into policy support services, and 2) close collabo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offices of education.

■ Research Content

- 1) Establishing theoretical concepts for overall youth development support through reviews of literature on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youth development support, policy necessity, and structural and functional requirements for promoting youth development support; 2) analyzing the features and progress of relevant policies implemented by the central and Jeonbuk governments while conducting case studies of other local governments' development support; 3)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youth populations in the central and Jeonbuk regions and assessing the status of Jeonbuk's development support policies to identify policy demands; and (4) presenting the vision and action plans of policy roadmaps for youth development support, the prerequisite of which is close cooperation between Jeonbuk State Government (cities and counties in Jeonbuk) and Jeonbuk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District Offices of Education in Jeonbuk).

■ Research Scope and Methods

- (Scope) This study researched 14 cities and counties in Jeonbuk State from March to October 2025.
- (Methods) Research methods included 1) literature reviews and analyses of administrative data, 2) case studies on development support policies of other local governments (including governance), 3) a statistical analysis of data provided by Statistics Korea, and 4) in-depth interviews and expert advisory sessions.

2. Conclus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 Implications for Promoting Jeonbuk's Youth Growth Support Policies

- The study found that promoting Jeonbuk's youth development support policies requires 1) laying a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e.g., developing master plans and enacting or amending ordinances), 2) cultivating human resources (coordinators) dedicated to overall management and coordination of development support policies and, as a long-term objective, establishing a secretariat (team structure/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3) reinforcing collabo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Provincial and District Offices of Education to secure the budget and administrative capacity necessary for implementing development support policies, and 4) operating development support networks at the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level to ensure policy consistency across basic local governments,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and stable and effective networks.

■ The Vision, Roadmaps, and Detailed Action Plans (draft) for Jeonbuk's Youth Growth Support Policies

- The vision is centered on “fostering the inside-outside connection of school (cooperation),” “accelerating regional development (settlement),” and “creating Jeonbuk development support ecosystems led by its youth (participation).” To achieve the vision, we proposed three policy roadmaps and 17 detailed action plans (draft).

Key Words

youth's growth support policies, local community networks, governance, youth welfare

정책연구 2025-27

전북자치도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 전략 연구

발 행 인 | 장 성 화

발 행 일 | 2025년 10월 31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593-7 9533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5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초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 분석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인식 및 정책 수요조사 연구
전북자치도 기후변화에 따른 신선식품 가격변동 요인 분석 연구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운영 사례 검토 및 전북형 모델 개발 연구
농촌 식품사막 지수 개발 및 전북자치도 활용 방향
전북자치도 농촌지역 마을소멸 분석 및 대응 전략
전북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물발자국 정책활용 방안 연구
인구감소 시대 공간계획방향 설정을 위한 토지이용 특성 분석
전북자치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응 경험 연구

기획연구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농생명 전통·미래 자산 예코뮤지엄 구축 방안
전북자치도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방안 연구
새만금 농생명용지 경관농업 적용과 추진방안
전북자치도 지역상권 활력제고 전략 수립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전북자치도 중추도시 육성 전략(공간체계 개편 중심)
체류인구 활성화를 위한 어메니티 웨딩(Amenity Wedding) 연구

미래전략연구

전북형 RE100 특구 도입 방안 연구
K-방위산업 MRO 클러스터 조성 방향 연구
K-컬처 복합 엔터테인먼트파크 조성 방향
전북자치도 초저온 산업 육성 전략 연구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한 전북형 반일제 정규직 도입방안 연구

정책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실태와 발전방안
사회적 질병으로서 외로움과 문화적 치유 방안 연구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활용방안 연구
전북자치도 수소특화단지 조성 방향 연구
전북자치도 정부 R&D사업 대응력 제고 방안 연구
전북 동부산악권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의 정주화를 위한 과제발굴 연구
전북형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운용 방안 수립 연구
프로스포츠클럽단 창단 타당성 분석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농산물 유통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시설농업 중심)
전북특별자치도 생성형 AI 적용방향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상용차산업 근로자 복지 증진 방안
전북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방안 연구
농지관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대응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별도청사 신축·이전 타당성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활성화 방안

현안연구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구
한익임상술기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
전북자치도 시외버스 재정지원의 효율적 배분기준 연구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주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